

PEACEKEEPING OPERATION JOURNAL

# PKO 저널

VOL. **24** June 2022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ROK PKO Cent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Contents

|   |     |
|---|-----|
|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우리의 과제<br>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권구일   | 5   |
| UN평화활동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 탐색<br>중령(진) 김세하   | 69  |
|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구상과 유엔의 위기<br>대전대학교 교수 송승종   | 89  |
|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br>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문진혁  | 111 |
| 서구의 패권에 대한 푸틴의 2022년 판 도전<br>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임윤갑  | 133 |
| 유엔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과 평화유지활동(PKO)<br>- 한국의 WPS 어젠더 이행방안 중심으로 -<br>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강호경 | 155 |
| 효과적 INSTEX 수행 방안에 대한 연구<br>-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br>해군 중령 채연정                           | 175 |
|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PKO 파병과 여성의 평화유지활동<br>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고<br>공군 소령 송성은                                   | 197 |
| 군수지원 임무수행 향상 방안<br>- 보급장교 임무를 중심으로 -<br>대위 이에별  | 211 |
| 『PKO저널』 투고 및 원고작성 양식  | 223 |



#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우리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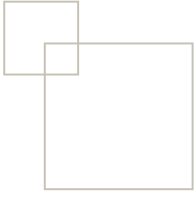
Paradigm shift of Korea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our challenges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권구일  
Gwon, Guil



## 요 약

본 연구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조명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설립을 주제로 단편적인 군의 관점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부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단순히 대한민국 군인들의 파병 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군의 관점을 벗어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비전과 목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며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와 대한민국이 향후 30년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peacekeeping operations as of 30th anniversary of UN membership. Especially, based on the proposed pledges which Korea suggested at the 2021 Seoul UN peacekeeping Ministerial, tries to propose how Korea should pursue the mid-long term policy and make efforts for the future. After reviewing the Korea Peacekeeping operations at first and tries to propose the future oriented plans. Many experts have suggested that Korean peacekeeping operations should be changed and 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center i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be established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However, the progress has not been made as of now. To this end, Paradigm of the military training should be changed from the point of military view and how the national policy and strategy should be made and how the 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center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peace on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ith vision, objectives, roles and functions. To do this, main focus is to establish 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center. and to give the future oriented direction for the next 30 years.

## **ABSTRACT**



#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우리의 과제

Paradigm shift of Korea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our challenges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권구일

Gwon, Guil

## I. 머리말

2014년 9월 평화문화 유엔총회 고위급 포럼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Peace means dignity, well-being for all, not just absence of war”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평화란 좁은 의미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이해한다<sup>1)</sup>.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과거 분쟁지역 정전감시가 주된 임무였으나, 최근에는 인권보호 및 증진, 인도적 지원, 선거지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재건활동까지 포함하는 임무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참여 대상도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으로 깨진 어느 국가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은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다. 공자는 30살을 “이립”이라고 얘기했다.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의미이다. 즉 혼란스러웠고 격변의 20세 약관과 방년의 시기를 지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정하고

1) 위키백과 사전



〈사진 1〉 출처 : 국방부, 정책 브리핑, 21. 12. 7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기인 것이다. 즉 유엔가입 30주년은 우리나라의 국제평화활동에서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21년은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장관(사진 1)은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6개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유엔의 소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의료·자산·훈련·여성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유엔임무단의 여건을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다짐인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공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조명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설립을 주제로 단편적인 군의 관점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부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단순히 대한민국 군인들의 파병 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군의 관점을 벗어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비전과 목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며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와 대한민국이 향후 30년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한민국의 해외파병 역사

우리나라는 1964년 후반 최초로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였으며 1991년 7월 UN 가입을 계기로 국제평화활동을 위한 파병을 실시하였다. 2021년 7월 기준 세계 각처에서 활동 중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은 모두 12개로 121개국 약 9만여명이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 평화유지활동은 1993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 II)에 공병부대를 최초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16개국에 1만 8천여

명을 파견하는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2021년 7월 현재(표 1) 우리나라는 유엔의 요청에 근거하여 레바논 동명부대(263명), 남수단 한빛부대(279명)가 주요 분쟁지역 유엔임무단에 파병되어 활동 중이다.

개인파병 요원은 94년 10월 유엔 그루지아감시단(UNOMIG) 파견을 시작으로

| 우리의 PKO 참여 현황                                |                             |                        |                    |
|--|-----------------------------|------------------------|--------------------|
| 1. 1992~2021년 간 우리나라의 PKO 파견 내역 (21.7.1. 기준) |                             |                        |                    |
| 구분   | 국(지)명                       | 인원(총/파병)               |                    |
| 부대 단위  |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단 (UNOSOM II)    | 516 / 33.07 ~ 34.03    |                    |
|  | 서부사하라 주민투표 임무단 (MINURSO)    | 542 / 34.08 ~ 06.05    |                    |
|  | 알랑과 유엔평화유지단 (UNAVEM III)    | 600 / 36.10 ~ 36.12    |                    |
|  |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UNTAET)     | 3,283 / 39.10 ~ 03.10  |                    |
|  | 유엔 레바논 임무단 (UNIFIL)         | 8,043 / 07.07 ~ 현재     |                    |
|  | 유엔아이티 안정화임무단 (MINUSTAH)     | 1,425 / 10.02 ~ 12.12  |                    |
|  | 유엔 남수단 임무단 (UNMISS)         | 3,403 / 13.03 ~ 현재     |                    |
|  | 소계                          | 18,079                 |                    |
|  | 개인 단위                       | 유엔 그루지아 감시감시단 (UNOMIG) | 88 / 94.11 ~ 09.07 |
|  |                             | 유엔 아프리카 차관단 (UNAMA)    | 7 / 03.07 ~ 10.12  |
| 유엔 인도 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MOGIP)                   |                             | 206 / 34.11 ~ 현재       |                    |
| 동티모르 지원단 (UNSMSET)                           |                             | 45 / 00.01 ~ 04.06     |                    |
| 유엔 사이프러스 임무단 (UNFICYP)                       |                             | 1 / 02.01 ~ 03.12      |                    |
| 유엔 라이베리아 임무단 (UNMIL)                         |                             | 24 / 03.10 ~ 16.01     |                    |
| 유엔 북부대 임무단 (ONUB)                            |                             | 4 / 04.09 ~ 06.12      |                    |
| 유엔 수단임무단 (UNMIS)                             |                             | 46 / 05.11 ~ 11.07     |                    |
| 유엔-ALD부르순살임무단 (UNAMID)                       |                             | 19 / 09.06 ~ 21.06     |                    |
| 유엔 내달임무단 (UNMIN)                             |                             | 13 / 07.03 ~ 11.01     |                    |
|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 유엔 레바논 임무단 (UNIFIL)         | 53 / 07.01 ~ 현재        |                    |
|  | 유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UNJOC)       | 14 / 09.07 ~ 17.02     |                    |
|  | 유엔 서부사하라 주민투표 임무단 (MINURSO) | 36 / 09.07 ~ 현재        |                    |
|  |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 10 / 09.11 ~ 14.12     |                    |
|  | 유엔 남수단 임무단 (UNMISS)         | 60 / 11.07 ~ 현재        |                    |
|  | 레바논 서부사하라 참모단               | 25 / 08.03 ~ 12.08     |                    |
|  | 아이티 참모단 임무단(MINUJUSTH)      | 4 / 18.3 ~ 19.10       |                    |
|  | 소계                          | 666 / 18.03 ~ 현재       |                    |
|  | 총계                          | 18,745                 |                    |

|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21.7 기준 |             |                    |               |                 |        |
|------------------------|-------------|--------------------|---------------|-----------------|--------|
| 구분                     | 현재 인원       | 최초 파견              |               |                 |        |
| 유엔 임무단 내               | 부대          | 동명부대(레바논 평화유지군)    | 263           | '07.7월          |        |
|                        |             | 한빛부대(남수단임무단)       | 279           | '13.3월          |        |
|                        | 개인          | 인·파 정전감시단(UNMOGIP) | 8             | '94.11월         |        |
|                        |             | 남수단 임무단(UNMISS)    | 11 (경찰 3명 포함) | '11.7월 ('20.2월) |        |
|                        |             | 유엔 아이티 임무단(UNISFA) | 1(경찰)         | '21.3월          |        |
|                        |             |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 4             | '07.1월          |        |
|                        | 소계          |                    | 569           |                 |        |
|                        |             |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 부대            | 소말리아 평화부대       | 300    |
|                        | 비레인 연합해군사령부 |                    |               | 4               | '08.1월 |
|                        | 개인          |                    | 자부리 연합기동부대    | 1               | '09.3월 |
| DI, 중부사령부              |             |                    | 3             | '01.11월         |        |
| DI, 아프리카 사령부           |             |                    | 1             | '16.3월          |        |
| 쿠웨이트                   |             |                    | 2             | '18.12월         |        |
| 소계                     | 311         |                    |               |                 |        |
| 국방협력                   | UAE 아크부대    | 139                | '11.1월        |                 |        |

〈표 1〉 우리의 파병 현황

현재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사령부, 수단, 서부사하라, 남수단 등에 파병되어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해외파병 참여 현황(2021년 7월 기준)<sup>2)</sup>은 UN 평화유지활동에 전 세계 5개 임무단에 개인단위 27명(경찰 4명<sup>3)</sup> 포함), 부대단위 542명이 참여 중이며 다국적군에는 개인단위 11명, 부대단위 300명이, 국방협력 파병에는 139명 등 총 1,019명이 참여 중이다.

이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중 38위 수준이다.<sup>4)</sup> 우리의 해외파병은 1990년대에는 UN 평화유지활동 위주로 참여해 왔으나 냉전종식 이후

2) 2021년 유엔 개황, 외교부 및 국방부 국방정책 세계속의 한국군, [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 21.7월 기준

3) 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교관 2명, 199년 동티모르 선거 감시 5명, 2006년 동티모르 치안 자문 5명, 2016년 라이베리아 치안 자문 10명, 2018년 아이티 치안활동 지원 4명, 2020년 남수단 치안활동 지원 4명 등이 파병되었다.

4) 22년 1월 현재 38위 순위(peacekeeping.un.org, 22. 1월 기준) ('22.1.18일 검색)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국경, 인종,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의거 유엔이 직접 주도하거나 유엔의 위임 하에 특정 지역기구 또는 동맹국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9·11테러 사건 이후 2000년 초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여 다국적군 평화활동에 파병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 국방교류협력활동 해외파병(아크부대)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sup>5)</sup> 대한민국은 1964년 베트남 파병 이후 14개 지역에서 36만여 명이 넘는 국군을 해외에 파병해오고 있다(중앙일보, 20. 2. 21일 기준).<sup>6)</sup>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지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96-97년 임기, 2013-14년 임기),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수임, 2006년 유엔사무총장 배출,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으로 유엔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 고위직 진출은 1995년 민병석 크로아티아 평화유지단 단장의 첫 진출 이후 2014년 6월 임기를 완료한 최영범(소장),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장까지 7명에 이르며,<sup>7)</sup> 이는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해외파병을 통해 안보,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외파병의 환경과 요구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그림 1) 출처 : 화유지장관회의 전시판 21. 12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분담률은 2.267%로써 193개 회원국 중 11위이며, PKO 분담률(2.267%)은 전체 10위 수준으로(그림 1) 우리의 발전된 경제력과 국가 위상에 맞게 유엔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917명(P급 이상)이며, 특히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인의 유엔 사무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는 129명(P급 이상)이 유엔 사무국에서 근무 중이다. 우리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참여는 몇가

5)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 현황 (21. 12.1일 기준) 다국적군 / 국방교류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https://www.mnd.go.kr/mbshome/jcs2/subview.jsp?id=jcs2\\_030102010000](https://www.mnd.go.kr/mbshome/jcs2/subview.jsp?id=jcs2_030102010000) ('21.12.27 검색)

6) 중앙일보 언저나 '고심 끝 결단'. 대한민국 파병의 역사. 64년부터 36만여명 파병에서 20.1.21 국방부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 (21.1.21)

7)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평화유지활동 고위직 진출은 한승주 UNFICYP 특별대표(96.5~97.4), 안충준 UNMOGIP 감시단장(97.3~98.3), 황진하 UNFICYP 군사령관(02.1~03.12), 김문화 UNMOGIP 감시단장(08.11~10.11), 최영범 UNMOGIP 감시단장(12.6~14.6)이 있으며, 과거 종료된 활동에서는 민병석 UNCRO 감시단장(95.7~96.1), 최영진 UNOCI 특별대표(07.10~11.8)가 배출되었다.

지 의미를 가진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던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우리의 경제력과 외교력, 군사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파병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은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 간 긴장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군의 전투기량 및 능력 향상과 경험 축적, 유사시 국민의 군대로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Ⅲ. 해외파병의 한계와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놀랄만한 성과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또한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아직도 軍 위주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군인만을 파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군 파병 위주의 정책과 의사결정,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는 비전투부대 위주(공병, 의무, 수송 등)로 파병하거나 전투부대도 교전위험이 적은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유엔 및 동맹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 셋째, 파병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분리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보다는 단편적인 활동에 그치고 국가이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파병에 대한 국내 반발<sup>8)</sup>이 적지 않아 파병 결정이 지연되고 시기를 상실하며 수동적·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제한되었다.<sup>9)</sup> 지금까지 여러 세미나와 기고문 등을 통해 우리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과 이에 따른 국방대 국제평화활동

8) 2020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결과, 국방대학교 출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21. 2. 2)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는 의견은 50%,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에서 확대보다는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하고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한다는 의견 71.1%,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23.7%로 우리 국민들은 해외파병에는 긍정적이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위험지역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9) 남수단 UNMISS 한빛부대는 613일, 레바논 UNIFIL은 343일 소요

센터의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
| ① 위험한 임무단에도 파병(아프리카 등)     |                           |
| ② 유엔 PKO에 기여하기 위한 파병 인원 증가 |                           |
| ③ 유엔 고위직 진출 확대             | ④ 국가급 PKO센터 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
| ⑤ 민·경의 참여 확대               | ⑥ 삼각파트너십 구축(유엔 긴급장비 지원 등) |

냉전 이후 국제분쟁의 양상과 위협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해 왔으며 UN은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많은 개혁과 변혁을 요구해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작전환경과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변화<sup>10)</sup>하고 발전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유엔 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에 자국민을 고위직 및 참모 직위에 진출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진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향력 행사, 고위 정보획득,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유엔은 대표적인 국제기구이기 이다. 유엔의 창설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 일부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다.<sup>11)</sup>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의 진출은 최초부터 부족하였다. 최초 창설 후 1950년대는 유엔본부 위치가 뉴욕에 위치해 아메리카 대륙 이외 지역에서 선발이 어려웠으며 많은 국가들이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인원이 부족하여 참여를 거절하였으며 미국이 고위직의 20~25%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유엔 직위는 감소하였으나 그 자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채워졌다. 유엔 사무직 임명은 유엔현장에 고도의 직무수행 능력과 광범위한 지정학적 기초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43,000명의 직원들이 유엔 고위직에 의해 임명되고 있으며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임명에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비공식적인 다툼이 존재한다.<sup>12)</sup> 다음 표 2는 **국가별 유엔**

10)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 2015년 HIPPO 보고서, 2018년 CRUZ 보고서, 2018년 구테헤스 사무총장 취임 이후 추진된 A4P (Action for Peace), 2021 A4P+ (Action for Peace plus) 등을 추진 중

11) At the UN, “flags-to-posts” dynamics date back to the organization’s founding years when the permanent UNSC members reached a “gentleman’s agreement” that each would provide one Assistant-Secretary-General (Ravndal 2018, 30)

12) The post of USG for Peacekeeping has been occupied by a French national since 1997. In 2016, China eyed the post, citing its growing troop contributions, which exceeded the combined contributions by the other four permanent UNSC members, and its financial contributions, which were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Lynch 2016). Observers expressed concerns that China could have used the position to steer peacekeeping away from its focus on human

직위 진출과 인구 대비 대표성, 병력공여 순위를 나타낸 표<sup>13)</sup>이다.

| 순위 | 국가    | 유엔직위   | 세계인구 비율  | 초과 대표성 | 병력공여 순위 | 사무총장 배출 |
|----|-------|--------|----------|--------|---------|---------|
| 1  | 핀란드   | 0.0276 | 0.00115  | 24.03  | 55      |         |
| 2  | 스웨덴   | 0.0437 | 0.00198  | 22.15  | 52      | 2대      |
| 3  | 노르웨이  | 0.0185 | 0.00096  | 19.21  | 67      | 1대      |
| 4  | 뉴질랜드  | 0.0136 | 0.00071  | 19.00  | 96      |         |
| 5  | 아일랜드  | 0.0143 | 0.00079  | 17.97  | 39      |         |
| 6  | 덴마크   | 0.0142 | 0.00120  | 11.80  | 94      |         |
| 7  | 시에라리온 | 0.0078 | 0.00075  | 10.44  | 65      |         |
| 8  | 우루과이  | 0.0070 | 0.00069  | 10.24  | 18      |         |
| 9  | 요르단   | 0.0046 | 0.00051  | 9.08   | 33      |         |
| 10 | 호주    | 0.0162 | 0.00183  | 8.83   | 57      | 4대      |
| 11 | 스위스   | 0.0126 | 0.000149 | 8.44   | 76      |         |
| 13 | 가나    | 0.0202 | 0.00264  | 7.68   | 9       | 7대      |
| 15 | 캐나다   | 0.0406 | 0.0051   | 7.37   | 66      |         |
| 28 | 영국    | 0.0520 | 0.01356  | 3.84   | 35      |         |
| 35 | 프랑스   | 0.0376 | 0.01262  | 2.98   | 34      |         |
| 39 | 이탈리아  | 0.0287 | 0.01317  | 2.17   | 23      |         |
| 43 | 미국    | 0.0929 | 0.05260  | 1.77   | 83      |         |
| 48 | 파키스탄  | 0.0260 | 0.01884  | 1.38   | 6       |         |
| 59 | 이집트   | 0.0106 | 0.01015  | 1.05   | 8       | 6대      |
| 64 | 독일    | 0.0156 | 0.01881  | 0.83   | 36      |         |
| 65 | 러시아   | 0.0255 | 0.03205  | 0.80   | 64      |         |
| 71 | 일본    | 0.0188 | 0.02641  | 0.71   | 105     |         |
| 81 | 한국    | 0.0037 | 0.00820  | 0.45   | 38      | 8대      |
| 85 | 인도    | 0.0487 | 0.15521  | 0.31   | 3       |         |
| 88 | 인도네시아 | 0.0076 | 0.03287  | 0.23   | 7       |         |
| 89 | 방글라데시 | 0.0043 | 0.02034  | 0.21   | 1       |         |
| 92 | 에티오피아 | 0.0005 | 0.00880  | 0.06   | 5       |         |
| 94 | 중국    | 0.0113 | 0.21260  | 0.05   | 10      |         |
| -  | 네팔    | -      | -        | -      | 2       |         |
| -  | 르완다   | -      | -        | -      | 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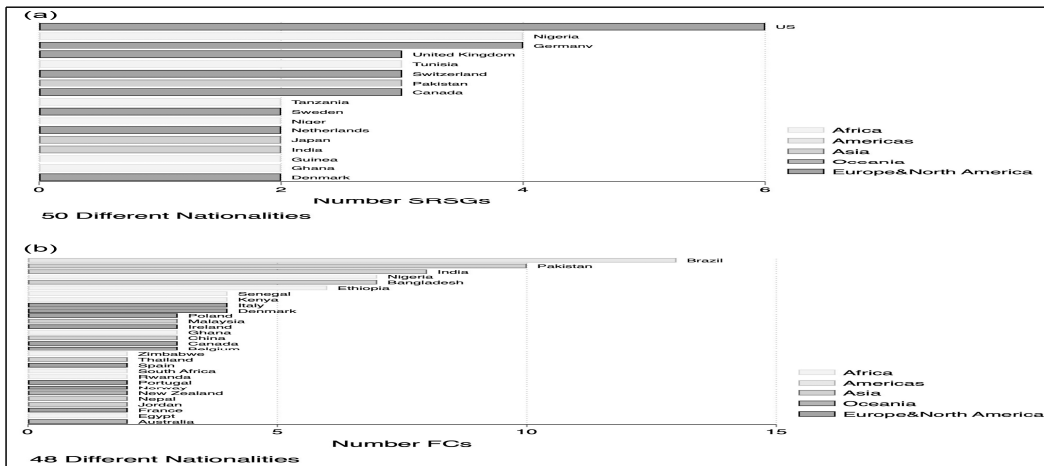
〈표 2〉 국가별 유엔사무국 진출, 초과대표성, 병력공여순위 비교

rights (Lagon and Lou 2018). Thus, the nationality of key IO officials is linked to states' quest for influence in IOs 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s' work. /아래 주석 13번 Who runs the international system? Nationality and Lead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내용을 요약함.

13) Who runs the international system? Nationality and Lead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1947-2012년까지 유엔 80개의 고위직과 43,000명의 사무국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Table 2 Secretariat excess representation, all years. (Novosad and Werker 2018). <https://doi.org/10.1007/s11558-017-924-z> 내용을 필자가 편집 및 재작성하였음.

북유럽 국가(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들은 상위 6위권 내에 있으며 병력공여국 순위 10위권 국가들은 가나(13위)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에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국제기구의 제도적 틀 안팎에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병력공여 보다는 현존하는 국제기구 내에서 고위직에 다수의 인력을 진출시켜왔으며, 그에 따라 국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의 고위직 임명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① 국가의 국력, ② 병력공여 ③ 능력 등 3가지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회원국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sup>15)</sup> 아래 표 3은 1991~2017년까지 아시아&아프리카 임무단의 유엔사무총장 특별대사(SRSG, Special Representatives Secretary General), 군사령관(FC, Force Commanders) 국적을 분석한 것이다.<sup>16)</sup>



〈표 3〉 국가별 사무총장 특별대사(SRSG)와 군사령관(FC) 진출현황

- 14)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유엔 PKO·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p27 인용, 2020.12-20 | 13호 유재광, 조원빈, 김남규, 홍미화, 이영주, 권재범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13호, 2020.12.31
- 15) The 2015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HIPPO) stressed the need to enhance “Secretary General’s independence i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senior leadership” (United Nations 2015, §271)
- 16) Leadership Selec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KSENIYA OKSAMYTNA King’s College London VINCENZO BOVE University of Warwick AND MAGNUS LUNDGREN Stockholm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21) 1990~2017년까지 24개 UN 임무단 200명 이상의 민간과 군 주요 직원자에 대한 분석, (SRSG 89, FC 149) 내용을 요약함.

1991년부터 2017년까지 50개국에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사(SRSG)를 배출했으며 명확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6회, 독일 4회 등 P3<sup>17)</sup>국가 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주요 재정지원 국가들 외에 나이지리아 4회, 영국, 튀니지, 스위스, 캐나다,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주요 병력공여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캐나다, 스위스는 적은 병력공여국이며 프랑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군사령관(FC)은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sup>18)</sup>,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가 상위 5위 국가이다. 이들은 모두 주요 병력공여국<sup>19)</sup>이다. 하지만 하위권 국가들은 모호하다. 다수의 병력공여국(세네갈, 케냐)과 소수의 병력공여국(이탈리, 덴마크, 아일랜드)이 혼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병력공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임무단에 상당한 숫자의 병력을 공여하고 분쟁 당사국과 언어, 문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임무단 군 고위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P3국가와 여러 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들이 상당한 숫자의 임무단 민간 고위직을 배출해왔다. 표 3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력공여국 11위권(최소 2,000명 이상 병력공여) 이내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로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2,000명 이상으로 파병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파병 적정규모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주요 UN재정 분담률 상위 국가<sup>20)</sup> 평균 파병부담률이 0.24%<sup>21)</sup>인 점을 고려시 우리의 적정규모는 1,200명<sup>22)</sup> 정도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는 UN임무단 외 다국적군 활동, 국방협력 분야도 해외파병임을 고려시(UN임무단 569명, 다국적군 평화활동 311명, 국방협

17)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3국

18) India threatened in 2009 to reduce its peacekeeping participation unless it got more leadership positions (Takshashila Institution 2010). The following year, an Indian was appointed to command the UN operation in the DRC, despite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Indian troops and objections from the host government (Krishnasamy 2010).

19) 병력공여국 순위 : 방글라데시(6,447명), 네팔(5,536명), 인도(5,481명), 르완다(5,263명), 에티오피아(4,856명), 파키스탄(3,949명), 인도네시아(2,818명), 이집트(2,818명), 가나(2,296명), 중국(2,248명), 기타 국가 : 세네갈(2,107명), 브르키나파소(1,192명), 우루과이(1,073명), 케냐(339명), <https://peacekeeping.u.org> (22.1.18일 검색)

20) 미국: 22%, 중국 22%, 일본 8.564%, 독일 6.090%, 영국 4.567%, 프랑스 4.427%, 이탈리아 3.307%, 브라질 2.948%, 캐나다 2.734%, 러시아 2.405%, 한국 2.267% 순이다. UN개황 2021(외교부)

21) 정장수, 국방대학교 PKO센터 전문교수, UN PKO 병력공여 발전 방향, PKO 작전환경 변화와 UN 평화활동국 군 능력 소요 중심, PKO 발전세미나, PKO저널 제19호, 2019, 12월, 파병부담률은 UN 재정분담률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총별격 대비 PKO 파병 병력수를 감안한 파병 부담률(%)을 말함

22) 우리병력 50만 대비 재정분담률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파병 부담률 평균 0.24%를 적용시 우리의 적정 파병규모는 1,200명으로 계산하였음.

력 139명) 1,019<sup>23)</sup>명을 파병중이다. 파병인원 증가를 통해 군사령관(FC)<sup>24)</sup>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기타 요소를 고려시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과 한계가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은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증진하고 국가이익 창출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에서 확대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60.1%와 안전한 지역으로만 파병하고 일단 파병 후 상황이 악화되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6%이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3.7%로 우리 국민들은 해외파병에는 긍정적이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위험지역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 조사 내용                  | 찬 성     | 보 통         | 반 대     |
|------------------------|---------|-------------|---------|
|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찬반      | 58.1    | 29.8        | 12.1    |
| 국가위상 증진을 위해 필요         | 73      | 20.8        | 6.2     |
| 국가이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   | 58.6    | 33.8        | 7.7     |
|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파병 필요   | 56.4    | 34.3        | 9.3     |
|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            | 64.8    | 29.3        | 5.9     |
| 위험지역 파병에 대한 의견         | 안전한 지역만 | 파병 후 악화시 철수 | 위험감수 파병 |
|                        | 46.4    | 25.2        | 23.7    |
| 향후 한국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방향 | 확대      | 현 수준유지      | 축소      |
|                        | 29.1    | 60.1        | 1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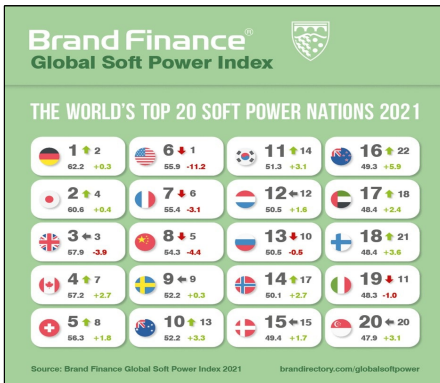
〈표 4〉 2020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출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23) 2021년 유엔 개황, 외교부 및 국방부 국방정책 세계속의 한국군, [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 21.7월 기준

24) 현 12개 임무단 군사령관 현황 : UNMOGIP(우루과이), UNMIK(민간, 미국), UNFICYP(노르웨이), UNTSO(스위스), UNIFIL(이탈리아), UNDOF(네팔), MINURSO(파키스탄), MINUSA(스웨덴), MONUSCO(브리키나파소), UNISFA(에티오피아), UNMISS(인도), <https://peacekeeping.u.org> (22.1.18일 검색)

주요 강대국들은 꼭 최상의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임무의 차위직이나 영향력 있는 직을 배출하여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제기구의 활동에 전문가 지원, 컨퍼런스 주최 등의 활동으로 차기 임명 요구의 기반을 쌓고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병력을 공여하여 임무단 리더십을 요구하지만<sup>25)</sup> 강대국들은 외교적, 제도적으로 기타 수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Cunliffe 2013)는 의견도 있다.



〈그림 2〉 출처 : 브랜드 파이낸스, 21. 2

한국은 2021년 2월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국가별 소프트파워<sup>26)</sup> (그림 2)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sup>27)</sup>며 앞으로 국제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지속성을 갖고 국가 차원의 국제기구 진출기회 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교육훈련 혁신,

참여 인력 다양화, 국내·외 교류협력 증대, 국제 및 유엔기구 파트너십 구축 등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현재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임무와 역할, 조직을 보강하여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25) Developing countries at the UN have for decades complained that the UN bureaucracy is dominated by nationals of rich, Northern states (Weinlich 2014; Guéhenno 2015; Salton 2017).

26) 교육·학문·예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성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상대를 강제로 순응시키는 것과 달리 설득을 통해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힘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세계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연성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소프트파워는 대중문화의 전파, 특정 표준의 국제적 채택, 도덕적 우위의 확산 등을 통해 커진다.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소프트파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403&cid=43667&categoryId=43667>

27) 중앙일보 2021.10.06., 김필규 기자

## IV. 정부의 평화유지활동 정책 방향

###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역할

대한민국은 21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세계 유일의 장관급 국제평화활동 정례 협의체인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45개국 국방·외교·보훈장관과 20개국 국방차관 등 76개국 고위 인사들이 화상 연설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회의는 2016년 1차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1년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4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신규공약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우리는 6개 분야에서 신규공약을 제시하고 평화유지활동 전시관, 스마트 캠프, 한반도 평화활동, 첨단 방산장비 전시 등 대한민국의 유엔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활동과 첨단기술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Tools)이다.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은 점점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오고 있으며 고위험의 작전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 기술·의료역량 강화 분야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스마트 캠프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훈련, 전문가 인력제공, 재정-병력 공여국 간 파트너십 등 기술분야,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서울 이니셔티브” 발표했다.

특히, 서욱 국방장관은 기초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캠프 구축, 의료방역 역량 강화, 공병훈련 지원, 헬기 공여, 여성 평화유지활동 참여율 향상, 경찰 평화유지활동 파견 확대 등 6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22년부터 유엔과 함께 남수단 한빛부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캠프 시범사업 추진, 남수단에 의료와 방역인력 의료지원팀 파견, 아프리카 연합에 450만 달러 지원으로 에티오피아에 의료훈련센터 건립 및 교관 파견, 케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500MD 헬기 공여 및 인력을 지원하여 유엔 헬기부대 창설, 유엔 여군교육과정 유치, 경찰 인력 및 유엔본부 사이버 인력 추가 파견, 100만달러 규모의 평화유지활동 신탁기금 배정 등을 발제하였다. 이러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평화유지활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sup>28)</sup>

28) 국방일보 12월 7일 내용 인용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유엔이 추구하는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평화유지활동의 아젠다(Agenda)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속발전시켜 유엔에서 우리의 주도권 (Initiative)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① 스웨덴은 청년, 평화·안보(YPS) SCR 2250.(2015) 분야에서 스웨덴 평화, 안보, 개발 연구원과 UNFPA, UNDP, DPPA와 공동으로 YPS 프로그래밍 핸드북 발간(2021)  
\* 전문가 그룹은 UNFPA and PBSO, Office of the Envoy on Youth 공동 연구로 Agenda-setting 문서발간(2020), 전문가 그룹에는 예멘, 미국, 시에라리온, 튀니지,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소말리아, 핀란드, 자메이카, 콜롬비아, 스리랑카,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시리아, 파키스탄, 리비아, 미국 등 21명 참가
- ② 캐나다는 여성, 평화·안보 분야에서 2017년 밴쿠버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 시 Elsie Initiative for Women in Peace Operations 제안
- ③ 네덜란드는 A4P Initiative 선언 시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21년 A4P Initiative 3주년 기념행사를 유엔과 공동 주관, A4P Initiative Plus에서 주도권 행사

〈표 5〉 유엔 이슈에 대한 국가별 주도

많은 국가들이 위 표 5와 같이 유엔정책과 관련하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발표<sup>29)</sup>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재풀을 형성해야 한다.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연구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병력공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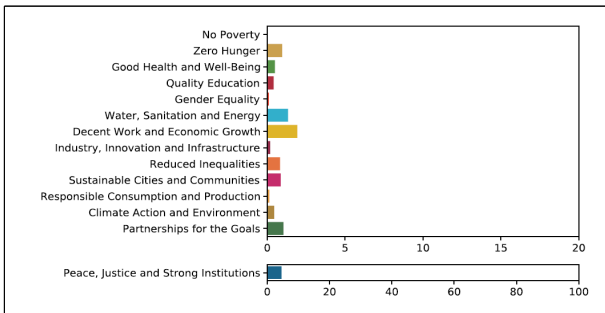
29) <https://www.youth4peace.info/UNSCR2250/> Youth, Peace and Security Introduction, <https://peacekeeping.un.org/en/action-for-peacekeeping-a4p>, A4P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gender\\_equality-egalite\\_des\\_genres/elsie\\_initiative-initiative\\_elsie.aspx?lang=eng](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gender_equality-egalite_des_genres/elsie_initiative-initiative_elsie.aspx?lang=eng) CanadaGovernment

를 많이 하거나 분담금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는 고위직 진출이나 국제적 위상 확립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유엔 평화활동국(DPO)에서는 평화유지군과 관련하여 군사교범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거나 개념 정립, 교범 재발간 등을 하고 있다. 21년 최초로 유엔 보병대대 교범 발간 작업에 한국군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엔은 정보분야, 군수분야, 각종 유엔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범 및 교재 발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인원과 조직보장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 틈새 전략추진

유엔의 분쟁관리 수단으로 평화유지활동은 오랜 역사를 통해 변화해 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18년 A4P를 출범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유지하는데 평화유지활동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8개 분야 45개 공약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2021년 3주년을 맞아 그 후속계획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개의 우선순위와 2개의 핵심분야를 주제로 한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 추진해오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기간과 경험을 토대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접근이 변화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변경된 경과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유엔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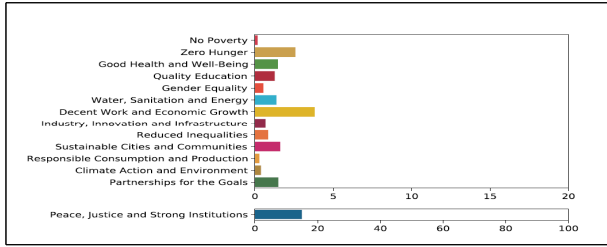
평화유지활동은 근본적으로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표 6〉 냉전기(1948~1988)

것과 관련이 되어있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에 명확히 일치된 정의는 없으나 평화가 “단순한 분쟁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는 강압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과 사회적 신뢰구축, 상호존중, 복지 등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sup>30)</sup> 과거 냉전기(1948~1988)

30) 이하 내용은 옥스퍼드 개발연구소 2021, Developing peace: the evolution of development goals and activities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내용을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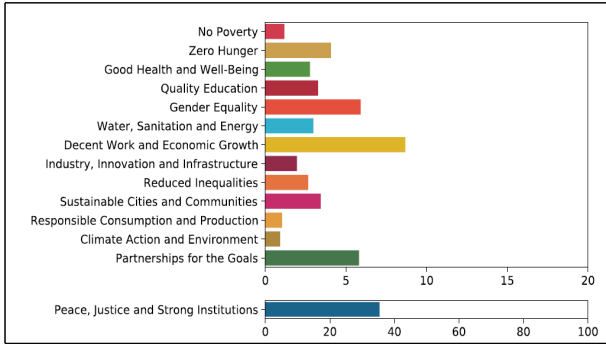


〈표 7〉 탈냉전기(1988~1998)

10년 동안 34개의 새로운 임무단이 창설되는 등 증가하였으며 유엔은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임무의 증가는 임무단의 위임명령의 확장과 일치하게 되어 정전감시 위주의 전통적인 임무에서 발전과 관련된 선거감시단 구성, 선거감시, 인권증진 및 보호, 인도적 지원,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 경찰훈련 등의 과업들이 더 넓게 반영되었다. 1990년대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개발 및 발전 행위자들은 다차원 평화유지활동에서 협조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결과 평화유지활동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7년(Renewing the United Nations—A programme for reform, 1997) 노력과 목적의 통합을 강조하였으며 임무단의 전체적인 권한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사에게 임무단의 모든 행위자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2000년 평화활동 패널 보고서(브라히미 보고서<sup>32)</sup>)는 “평화유지요원들과 개발에 중점을 둔 기관들 간의 임무에서의 통합과 협조적인 처리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을 받는 안보리 위임명령이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평화유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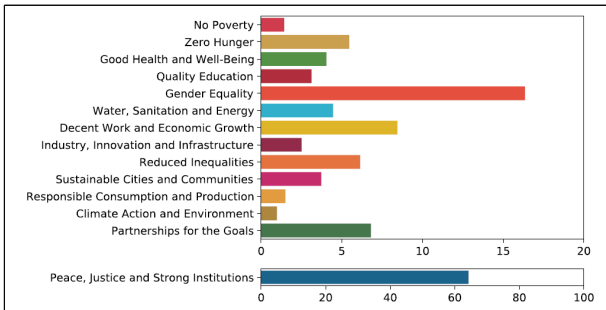
31) 1992. 7. 17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는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라는 보고서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정의를 정립하면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 building)로 구분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분쟁의 해결은 외교적 노력과 전통적인 정전감시, 경찰 등 평화유지활동, 정치·외교적 협상,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 분쟁 후 무너진 사회기반 복구 활동, 필요시 집단안보체제에 의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오늘날 다차원적 평화유지활동의 평화와 안보 스펙트럼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평화구축의 개념은 분쟁 후 평화구축이라는 제한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32) 2000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보고서(일명 브라히미 보고서, 2000. 8. 21)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 정규예산과 PKO분담금 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개혁, 사무국 조직개편과 행정개혁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정치적 수단 지원, 강력한 태세를 갖춘 부대의 신속한 전개, 완전한 평화구축 전략 등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의 책임과 역할, 안보리의 역할, 분쟁예방과 조기 접촉,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인건 및 인도적 차원의 활동, 유엔의 분쟁예방, 분쟁후 평화구축을 위한 통합된 수단, 제안하였다. 브라히미 보고서에서 유엔의 평화활동(Peace Operations)을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 평화조성(peace making), 평화구축(peace building)의 3가지 주요 활동을 수반한다고 정의하였다.



〈표 8〉 새천년기(1999~2009)

평화와 안보는 근본적으로 교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브라하미 보고서에서 제안한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차원 평화유지활동에 유엔 개발과 평화구축 행위자들을 통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9년 이전의 임무단이 통상 선거지원 등 정치적 행위자들이 통합된 반면 1999년 이후 유엔임무단은 개발 행위자들, 인권보호, 인도적 지원, 강력한 평화유지활동 등이 통합되었다.



〈표 9〉 새천년기 이후(2010~2019)

있으나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개선 분야와 성평등 등 성(Gender)중심 과제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그림 3의 2015년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p>33)</sup>의 등장은 물리적 안보와 개발은 상호 연관돼 있으며 강력한 제도와 거버넌스 등에 의존적임을 이해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개발과 안보 사이에서

동의 확장을 추진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천년기(1999~2009)에 들어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개발목표들이 평화유지활동 위임명령에 통합되고 확장되었으며 취약한 국가의 국가능력 구축 지원은 다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및 유엔기구를 통합시켰다. 따라서 분쟁, 개발,

표 9를 보면 새천년기 이후(2010~2019)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다양한 범위의 개발 행위자들을 지원하고 추구해 왔으나 개발의 아젠더(Agenda)가 주로 안보 분야에 초점을 두고 분쟁이 더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개발 관련 과제가 이전기에 머물러 있게 되

33) 2000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하여 밀레니엄 개발 목표 또는 MDGs라고 불리는 선언문은 2-15년까지 절대적 빈곤퇴치를 위한 범세계적인 계획이었으며 이후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2015년 이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가지 항목 169개 세부목표로 차세대 국제개발목표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현재 4차 기본계획에는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음.(지속가능발전 포털, www. ncds.go.kr)



〈그림 3〉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임무단의 작전환경에 따라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로 인해 개발 행위들은 미래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sup>34)</sup>

2020년 유엔사무총장의 “Peace building and sustaining peace”에서 다차원적 통합적인 평화구

축의 공헌을 강조하였다.<sup>35)</sup> 평화유지활동(PKO)은 유엔 평화활동(PO)의 주요한 활동으로 기존 분쟁 후 평화조성의 개념에서 평화의 강건한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분쟁의 근원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교 우의 분야에서 틈새를 이용한 아젠다(Agenda)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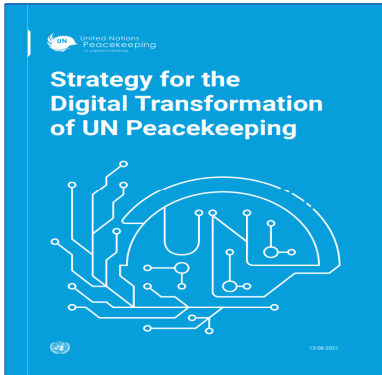
반기문 사무총장이 언급한 “Peace means dignity, well-being for all, not just absence of war”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분쟁의 종식의 범위를 넘어 평화의 기초를 다지는 활동이며 평화유지활동은 기존 군 위주의 활동 모델에서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분쟁 후 평화를 구축하는데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표 10과 같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기술·의료역량 강화분야, 우리의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으로 스마트 캠프 구축 등 “서울 이니셔티브”에 반영했다.

| 〈서울 이니셔티브〉   | 〈6대 기여 공약〉                                   |
|--|--|
| 기술분야 : 스마트 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           | 스마트 캠프 제안<br>의료·방역 역량 강화<br>공병훈련 지원<br>헬기 공여 |
| 의료분야 : 임무단 의무지원 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 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 여성 PKO참여율 향상 및<br>교육과정 유치                    |

〈표 10〉 서울 이니셔티브와 6대 기여 공약 과제

34) 옥스퍼드 개발연구소 2021, Developing peace: the evolution of development goals and activities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내용을 요약함.

35) www.un.org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그림 4〉 유엔 디지털변환 전략

유엔은 Partnership for Technology in Peacekeeping Initiative(2014)<sup>36</sup>, Report of the Expert Panel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UN Peacekeeping (2015)<sup>37</sup>, Secretary General's Strategy on New Technologies(2018)<sup>38</sup>,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2018-2019)<sup>39</sup>, Data Strategy of the Secretary-General for Action by Everyone, Everywhere with insight, Impact and Integrity 2020-2022(2020.4)<sup>40</sup>,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2020.6)<sup>41</sup>,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2021.8)<sup>42</sup> (사진 4) 등 정부, 민간, 시민단체, 국제기구, 학회, 기술공동체,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복잡해져 가는 21세기 분쟁 속에서 더 효과적인 위임명령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평화유지요원들의 안전에 효

- 36) 2014년 유엔의 전 지구적 작전의 잠재적 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과 기술을 평화유지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출범(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37) 기술과 혁신이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효과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독립패널을 제안(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38)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블록체인, 로봇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이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고 유엔헌장의 가치와 인권선언, 국제법규와 규범을 촉진시키는 것에 대해 유엔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정의하기 위한 내부 전략(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39) 2018년7월 유엔사무총장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국가, 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교육기관, 정보통신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촉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을 구성, 2019년 6월 고위급 패널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 The Age of Digital Independence)라는 최종 보고서 제출,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구축,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인권과 인간 자율성 보장, 디지털 신뢰, 안보 및 안정성 촉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증진 등 건의, 고위급 패널 20명 중 한국인으로 Sophia Soowon Eom, Founder of Adriel AI and Solidware 참여했음.(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40) 유엔 사무총장의 데이터 행동전략으로 21세기 유엔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구축, 디지털, 기술, 혁신능력에 중점(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41) 고위급 패널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라운드 테이블 토의를 통해 관련 상황을 정리하고 관찰한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 국제 사회가 디지털 기술 사용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무총장에게 건의, 8개의 화상 원탁회의 그룹 중 디지털 인권분야에 한국 정부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분야에 한국정부가 참석했음.(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42) UN 평화유지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DRIVE INNOVATION, MAXIMISING THE POTENTIAL OF CURRENT AND NEW TECHNOLOGY, UNDERSTANDING THREATS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PEACEKEEPERS AND TO MANDATE IMPLEMENTATION, ENSURING RESPONSIBLE USE 4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음(출처 : [www.un.org](http://www.un.org))

과를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Smart Camp Project”이며 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스마트 캠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기본권, 작전적 효율성 증진, 임무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많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 화상회의 및 온라인 교육, 컴퓨터 기반의 교육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법이 활성화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거리두기 개념을 넘어 교육훈련 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유엔평화유지군 교육훈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평화유지군 교육에 활용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임무단에서도 활용가능한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K-PEACE 국가 브랜드” 전략 추진

대한민국은 과거 식민지, 6·25전쟁 후 최빈국이었던 희망이 없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로부터 K-영화, K-드라마, K-방역, K-POP(사진 2)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한류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



(사진 2) BTS 유엔연설.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위치가 되었다. “K-PEACE”는 한반도의 과거 아픈 역사와 고통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현재의 노력, 제고된 국가 위상에 걸맞게 미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선도하는 국가로서 또 하나의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국가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K-PEACE”를 국가 브랜드화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로서의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평화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는 가장 좋은 국가 이미지 전략이 될 것이며 국제평화활동에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조직과 국제협력 및 국내 통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평화”로 특화된 유엔 및 국제기구 전략적 유치

문재인 대통령의 19년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조치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유엔기구<sup>43)</sup>와 국제기구를 DMZ내 평화지대로 유치하기 위한 구상은 남북관계 교착으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제기구 유치는 지방자치단체나 NGOs주도의 유치가 많고 위치도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많이 유치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유럽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접경지역 그린 평화지대화 도모,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북한의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DMZ 국제 평화지대』를 설치하고자 했던 기존 계획을 지속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11은 국가별 국제기구 유치현황이다. 국제기구 유치가 도시의 위상과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만큼 국제기구 유치를 국가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DMZ 국제평화지대』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환경이 갖

| 국 가  | 국제기구 유치 수 |
|------|-----------|
| 미 국  | 9,974     |
| 벨기에  | 4,392     |
| 프랑스  | 3,698     |
| 영 국  | 3,614     |
| 스위스  | 1,715     |
| 이탈리아 | 1,633     |
| 일 본  | 739       |
| 한 국  | 389       |
| 중 국  | 256       |
| 싱가포르 | 243       |
| 필리핀  | 279       |

〈표 11〉 국가별 국제기구 유치현황(UIA,2021)<sup>44)</sup>

추어져 있지 않아 경쟁력이 매우 약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와 동북아 및 아·태지역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유치 대상을 탐색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며 해당 기구에 적극적인 **자발적 분담금<sup>45)</sup>**을 납부 및 **중액**하거나 해당 기구와의 접촉유지를 위해 해당 기구 주관 국제회의, 포럼에 적극 참

여하고 관련 분야 정책연구 및 발표, 세미나 시 발제, 국제회의 시 우리의 의지

43) 유엔기구 중 사무국은 아시아권 국가에는 없으며 우리나라에는 19개 사무소가 운영 중임. 일본에는 유엔대학이 위치하고 있음.(<https://un-rok.org/ko/>)

44) 세계협회연합 홈페이지 데이터를 이용 저자가 작성. [www.uia.org](http://www.uia.org). (2021. 12. 30 검색)

45) 유엔은 회원국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여 산정된 분담률에 따른 의무분담금 외에 회원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유엔 기금 및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환경계획(UNEP) 등 개발, 인권, 난민, 환경 관련 기구 사업 수행 소요 자원, 자국의 관심 분야에 따라 기여액이 결정되며,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수준으로 기여

표명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s, IGOs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략 TF를 구성하여 유치 가능 대상 선정,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유치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및 법률지원, 전문인력 관리 등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표 12는 국

| 국가 및 도시        | 슬로건                    |
|----------------|------------------------|
| 독일             | 본의 유엔: 세계적 지속가능발전을 향하여 |
| 네덜란드           | 국제 평화와 정의의 도시, 세계법을 도시 |
| 벨기에            | 유럽의 수도                 |
| 태국             | 아시아의 제네바               |
| 인천             | 국제기구의 메카, 아시아의 브뤼셀     |
| 서울             | 아시아의 국제기구 허브           |
| DMZ 국제 평화지대(안) | 자연과 변역, 평화의 도시         |

〈표 12〉 국가 및 도시 슬로건<sup>46)</sup>

가별 도시 슬로건으로 『DMZ 국제평화지대』는 다른 국가나 도시와 차별화하여 “지역 슬로건”을 제시하고 기존 시설의 분산과 통합, 지정학적 상황 등을 고려한 해외 기구의 증편 및 국내 이전<sup>47)</su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 재원 조달, 인도적 지원 향상 등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 “평화 복합단지”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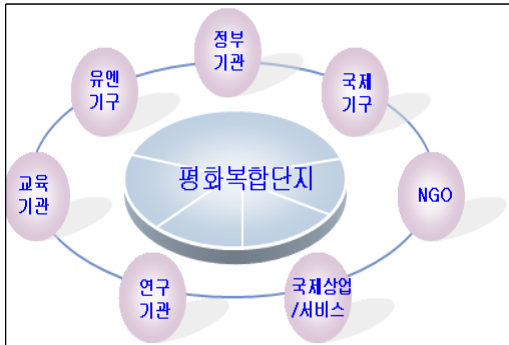
국제기구 유치는 많은 수요가 발생하며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브랜드화가 중요하다. DMZ는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고 국제평화활동의 미래 비전이다.

이러한 상징성은 국제기구에게 많은 매력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다른 국가나 도시와 유치해야 할 기구와 차별화한다면 유치의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는 막대한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고 국제기구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접근성, 주거, 편의, 안전, 복지, 문화, 교통, 교육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부와의 업무 효율성, 법적·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의 성격에 맞게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제 브랜드로서의 가치, 국제기구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정

46) (사)유엔협회세계연맹,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 15, 행복도시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내용 인용

47) 본고에서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모멘텀을 유발할 수 있는 아젠더가 북한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라고 생각하고 현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인원과 조직을 보강 후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로 국제평화지대로 이전하여 북한의 파병교육을 지원하고 공동파병, 공동연구활동을 할 것을 제안함.

부기관 중 통일부 교류협력실, 인도협력국,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외교부 국제기구국(UN과), 개발협력국, 평화외교 기획단, 국제기구 인사센터, KOICA, 국방부 관련과 등 정부기관 관련 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평화복합단지 구성안

『DMZ 국제평화지대』는 이러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으며 경쟁적 유치는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단편적으로 몇 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면 비용에 비해 국가 브랜드 발전과 지역의 국제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본인은 국가차원에서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DMZ비무장지대에 친환경 “평화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그림 5와 같이 정부기관, 국제기구, 연구 및 교육기관, 국제사업 및 서비스업,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평화” 테마·문화공원, 안보·생태관광 등 “자연과 평화”의 브랜드에 맞는 “평화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한다. “평화복합단지”는 동북아와 아·태지역에서 “평화”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인도적 교류협력 확대<sup>48)</sup>는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고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화복합단지”는 “**평화도시**”로서 **평화**의

|          |               |
|----------|---------------|
| <b>평</b> | 평화의 교육 장소     |
| <b>화</b> | 화합과 협력의 장소    |
| <b>도</b> |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장소 |
| <b>시</b> | 남북협력의 시작하는 장소 |

교육의 장소, **화합**과 협력의 장소,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장소, 남북협력의 **시**작장소로서 브랜드화하고 국제기구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한 전략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8) 신석현, 동명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조교수,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제35집 제3호, 19.8.26,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pp.82~91)에서 동북아 지원에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시설 유치를 제안(현재는 이탈리아, 스페인, 파나마, 가나,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가나)에 위치, 2019년 기준

## V.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비전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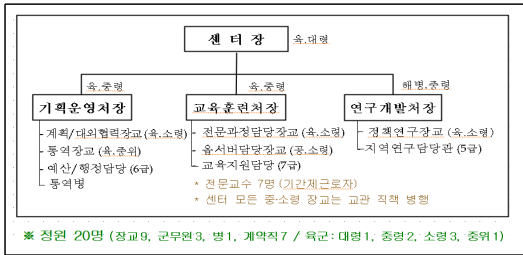
###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설립 논의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는 우리나라가 1993년 소말리아(UNOSOM II) 최초 파병을 시작으로 94년 서부사하라 주민투표임무단(MINURSO), 그루지아 정전감시단(UNOMIG),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등 파병이 이루어 지면서 '95년 합동참모대학 “PKO학과”로 장교 3명으로 잠정 설립되어 파병인원 자습 교육, 합동참모대학 유엔 소개교육 등 연구 및 파병인원 행정지원 위주의 활동을 하였으며 '98년 합동참모대학 “PKO학과”에서 “PKO학처”로 개칭되면서 6명으로 증원되었다.

'95년 최초 설립 이후 '05년까지 앙골라임무단('95), 동티모르임무단('99년/'00년), 사이프러스임무단('02),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03), 유엔 아프가니스탄지원단('03), 라이베리아임무단('03), 부룬디임무단('04) 등 해외파병 증가와 한승주 UNFICYP 특별대표('96.5~'97.4), 안충준 UNMOGIP 감시단장(97.3~98.3), 황진하 UNFICYP 군사령관('02.1~'03.12)등 유엔 고위직 진출, '96년 2년 임기의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13~2014 두 번째 진출), '05년 기준 UN 정규 분담금 납부 세계 11위, PKO분담금 납부 10위 등 국제적 기여 등으로 합동참모대학 “PKO 학처”에서 '04년 합동참모대학과 별개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PKO센터”를 설립하고 '05년 국방대 PKO센터와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에 “PKO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급 PKO센터 설립 이전까지 국내 유일의 PKO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간부 교육 훈련을 담당하였다.<sup>49)</sup>

이후 유엔 레바논임무단('07, UNIFIL),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10, MINUSTAH), 유엔 남수단임무단('13, UNMISS), 유엔 수단임무단('05, UNMIS), 유엔-AU 다푸르 혼성임무단('09, UNAMID), 유엔 네팔임무단('07, UNMIN), 유엔 레바논 임무단('07, UNIFIL), 유엔 코트디부아르임무단('09, UNOCI), 유엔 서부사하라 주민투표임무단('09, MISURSO), 유엔 아이티안정화임무단('09, MINUSTAH), 레바논 서부여단 참모('08), 유엔 남수단임무단('11, UNMISS)과 다국적군 파병으로 청해부대('09. 3), 국방협력 파병으로 아크부대('11. 1) 등 파병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PKO센터의 확대 및 국가급 PKO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과 정부정책에 따라 국가급 PKO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10년 합동참모대학에

49) 국방부훈령 제738호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규정('03.8.1) 제42조, 제45조



〈표 13〉 국제 평화활동센터 조직

PKO센터에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로 잠정 소속 변경 후(15명)<sup>50)</sup> 표 13과 같이 '15년 3개 학처 20명으로 증편하고 국방대 총장 직속부서로 소속을 변경후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임무수행중이다.<sup>51)</sup>

국가급 PKO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는 정부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2005년 9월에 발표한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20에서 국방정책 및 운영 분야에 PKO 참여기반 강화가 반영되었으며 정부의 PKO 업무를 총괄하는 측면에서 국가급 PKO센터 발전을 계획하고 2006년 반기문 사무총장의 선출 등 UN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국가급 PKO센터 설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92개 국정과제 중 “글로벌 코리아의 중점과제”로 국가급 PKO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PKO와 ODA(공적개발원조)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제6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민주주의와 인권, 빈곤퇴치와 개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sup>52)</sup>을 제정하고 7월 1일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을 창설하여 PKO상비부대<sup>53)</sup>를 운영하고 국가차원의 PKO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며 PKO센터의 국방대로 소속변경과 인원이 증편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이 확정되고 국정기조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맞춰져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의 추진전략과 세부 17개 추진과제를 이행하도록 했다.<sup>54)</sup> 140개

50) 2010 국방백서(2010. 12. 31) 해외파병 기반 체제 확충을 군 PKO 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대학에서 국방대학교로 변경 이후 2013년까지 19명에서 29명까지 증원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었음 (P9)

51) 현재는 국방대 총장 직속부서로 정원 20명(장교 9, 군무원 3, 병 1, 계약직 7 / 육군: 대령 1, 중령 2, 소령 3, 중위 1)이 임무수행 중이다.

52) 한국은 PKO참여와 관련한 근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1995.8월에 제정된 국방부훈령 제542호 유엔 평화유지활동 업무규정에 의거 유엔 PKO참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03. 8. 1 국방부 훈령 제 738호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유엔 PKO, 대테러 전쟁, 다국적군 파병, 국방협력 등 해외 파병업무를 수행하였다.

53) 2010년 특전사에 각각 1,000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온누리 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를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파병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비군체제를 출범

54) Trustpolitik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론과 실제 참고-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13-05(2013. 11월) 능동적 군사외교 및 국제평화활동 전개에서 국제평화활동의 필요성 제언

국정과제 중 국가급 PKO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된 과제는 없었으며 연관성있는 과제로는 외교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을 들 수 있으나 중견국과의 정치, 경제 분야의 외교 분야가 주요 내용이였다. 이 시기에는 유엔남수단 임무단(UNMISS) 한빛부대가 창설('13. 3. 1)되었으나 '12년 9. 27일 국회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단 한 건의 파병도 추가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연설(그림 6)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sup>55)</sup>”를 제안하고 지속가능발전, 인도적 지원, 인권 및 여성 이슈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범 정부차원의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 국가급 PKO 센터에 대한 설립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PKO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림 6〉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하지만 6대 국정목표 중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정목표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PKO가 하나의 수단(Tools)의 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까지 수년간 국가급 차원의 PKO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해왔다. PKO는 이념과 종교, 국경을 초월하여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교류협력 분야로서 남북한

55) 고성윤, KIDA국방현안연구위원장, 비무장지대에 PKO 국제기구(UNPOO) DMF CBCLGKWK, 월간조선 2013년 8월호에서 국제기구를 DMZ에 유치하고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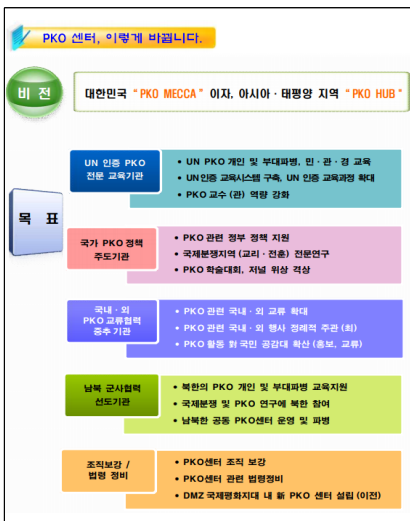
교류협력과 세계 평화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Tool) 일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내에 남북간 합의 하에 국가급 PKO센터를 건립하고 북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 파병 및 연구를 한다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역사를 지닌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의 노력이 DMZ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의 유엔 활동에 국제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긴장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평화활동센터의 비전과 역할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가위상에 걸맞게 변화하는 국제정치·안보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PKO의 MECCA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PKO HUB 역할을

수행(그림 7)함으로써 유엔 PKO의 미래를 선도하고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인증 PKO전문 교육기관, 국가 PKO정책 주도기관, 국내·외 PKO중추기관, 남북 군사협력 선도기관의 목표 하에 단계적으로 현재 부족하고 미흡한 조직을 보강하고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 논산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를 『DMZ 국제평화지대』로 이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엔 PKO미래를 선도하고 “K-PEACE” 국가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는 안이 있을 것이다. 신설되는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군뿐만 아니라 민·관·군·경을 통합하여 편성하며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 PKO정책지원을 위한 분쟁연구, 유엔을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 발굴 및 국제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대상 PKO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유엔 및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함과 함께 평화와 안보·문화의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국가정책 지원 및 국민적 지지를 확산해야 할 것이



〈그림 7〉 국제평화활동센터 비전과 목표

다. 『DMZ 국제평화시대』 내 “평화복합단지”에는 민·관·군·경이 함께 사용 가능한 훈련장, 평화·안보·문화교육, 국제회의 및 세미나, 평화와 안보·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남북협력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센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 UN인증 국제 PKO전문 교육기관

국제평화활동센터는 매년 14개 과정 22개 학급 약 2천여 명을 교육하여 파병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파병요원을 육성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주로 군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부대 단위 파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병인원 이외 육군대학, 일부 대학교, 군무원 교육과정에 PKO소개교육 정도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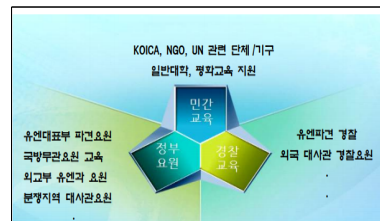


〈사진 3〉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

3) 또한 파병요원들의 유엔 및 국제기구 이해 도모를 위해 UNHCR, ICRC를 초청하여 초빙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로 군 위주의 파병인원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찰교육은 경찰대학에 일부 유엔 과목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인 교육은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하는 정도이다.

통합형 교육기관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관·군·경의 통합형 교육 기관(그림 8)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진은 민·관·군·경 유경험자나, 전문가로 편성하고 타 국가 PKO센터와 교류협력을 통해 교환교수를 운영하여 국제수준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통합하고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 기관이 주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급 PKO센터를 민·관·군·경의



〈그림 8〉 민·관·군·경 통합교육

국제 평화유지활동에서 민간인의 참여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민간인 참여는 아주 미미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계 수치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파병은 군부대 위주이고 민군작전의 일환으로 학교, 병원, 도로건설, 직업교육 등 일부 과제를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파병부대의 민군과업 수행은 임무단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군의 과업이 아닌 민간과업을 수행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군 입장에서도 임무의 복잡성과 예산,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표 14와 같이 민·관·군·경이 함께 참가하고 교육

(통합 임무단 편성안)

| 구분                             | 군       | 경찰        | 관        | 민         |
|--------------------------------|---------|-----------|----------|-----------|
| 임무의<br>요구에<br>민간<br>단체로서<br>편성 | 호송지원    | 선거관리      | 사업부 기획   | 교육        |
|                                | 시설경제지원  | 공공질서 확립   | 선거감독     | 보건·의료     |
|                                | 지방재정    | 법집행/법치확립  | 지방행정     | 선거관리      |
|                                | 특별활동지원  | 정동총력 지원   | 지방행정     | 공공안전      |
|                                | 안정지대 확보 | 경찰능력 교육   | 중앙행정     | 기술환경(내지)  |
|                                | 경호업무    | 경찰부대육성    | 재정지원     | 간접부호(의식주) |
|                                | 군 사정보   | 교정능력 육성   | 법무행정     | DDR       |
|                                | DDR     | DDR       | 교정행정     | 생활등       |
|                                |         | 수사기법      | 재무행정     | 인명·물품     |
|                                |         | 위기관리, 협상술 | 국가서비스 지원 | 직업능력개발    |

예) 선거지와 임무시 통합임무단 편성 예 :  
 군 (호송 / 안전지대확보) - 경찰 (선거관리 / 공공질서 확립) - 관 (선거감독) - 민간 (직업능력교육 / 선거관리)

<표 14> 민·관·군·경 통합편성 모델

하는 교육모델과 평화유지활동시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민간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식은 민·관·군·경이 통합된 구조하에 참여하는 방식과 개인이 유엔 및 국제기구 진출로 참여하는 2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관·군·경 통합된 구조는 통합 임무단 편성을 위한 모듈을 만들고 임무의 성격에 맞추어 통합 임무단을 구성하며 국가급 PKO센터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2010년 7월에 한국은 최초로 민·관·군·경이 통합한 구조하에 아프가니스탄 재건활동에 참여하였다. 한국 지방재건팀(PRT)이 안전하게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은 오쉬노부대를 파견<sup>56)</sup>하여 주둔지 경계 및 호송 등에서 완벽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재건팀이 2014년 상반기에 임무를 종료함에 따라 오쉬노 부대도 2014년 6월 철수하였다. 또한 일본은 유엔 캄보디아 임무단 편성과 운용을 통해 민간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다.(사례 1, 2 민·관·군·경 통합 임무 참조) 이러한 한국 지방재건팀 운영과 일본의 유엔 캄보디아 임무단 운영 사례는 민간이 평화유지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합 임무단 구조 속에서 민간의 참여는 평화유지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민간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중 필요한 부분에 일부 PKO유경험 전역 군인과 퇴직 경찰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파견한다면 더 효과적인 운용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 1에서 제시되었던 업무 협조도 다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56) 국방부 국방정책 세계속의 한국군 [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 ('21.12.27 검색, 국방부는 PRT부대 방호를 위해 '10.7~'14.6까지 총 1,745명 파병(350명/350명/350명/70명)

〈사례 1〉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sup>57)</sup>

2001년 미국은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후 치안, 정부기능 확대, 재건의 목표로 미국은 지방재건팀 모델을 정립. 2003년 부대방호와 다양한 시민단체, 군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지방재건팀 구성(국무성, 국방성, USAID, USDA)

한국은 2007년 2건 사건을 계기로 철수 후 2010년 2월 25일 국회의 동의로 군(부대 및 지방재건팀 방호, 공중수송, 군수, 통신, 보급지원), KOICA(의료교육/장비지원, 교육/직업훈련, 농업개발, KOICA-UNDP 프로젝트로 공무원 교육), 경찰(50명, 경찰교관)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 파견

-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줌.(이전에는 한국의 문화, 개발역사, 국민성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서방 국가와 다른 독특한 개발모델(새마을 운동)에 관심)
- 한국 PRT는 경험부족으로 초기 민-군간 문제가 있었으며(NGO, IGO 인터뷰), **다른 구성원간 초기 혼란방지를 위한 통합 교육 필요, 민-군 통합을 위해 정부요원으로 구성된 조직 필요**(영: Stabilization unit, 미: Office for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 **북한정권 붕괴 시 또는 급변사태 시 적용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정부에서는 기술역량을 발전시켜야 함.**

〈사례 2〉 캄보디아에서 일본 평화유지활동

1992년 9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정전감시요원 8명, 자위대 공병부대 600여 명의 재건지원, 선거감시 및 치안유지활동 목적으로 공무원 18명, 민간인 23명으로 구성된 선거지원단, 민간경찰 41명 파병<sup>58)</sup>

두 번째로 유엔 및 국제기구로의 진출<sup>59)</sup> 등 개인자격으로 국제평화활동의 참여하는 방법이다. 외교부<sup>60)</sup>는 국제적 위상 확보와 우리 국민들의 각종 유엔 및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을 위해 국제적 자질과 감각을 갖춘 인원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 인사센터(표 15)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직원모집공고,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 유엔자원봉사단(UNV) 및 청년봉사단, 유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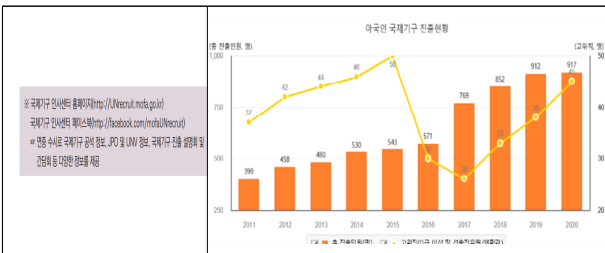
57) South Korea's PRT in Afghanistan, John Hemmings, Global Lorea: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Security 2012.

58) 고성윤, 2011.3 한국 국방연구원, 대한민국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길,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접근, 중앙일보(1992.8.2.) 한겨레모바일(2012.7.10.) 일본평화유지군자위대 4개국 파병 중 참조

59)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유엔분담률 11위 국가(2.267%)로서,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과 더불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대한 우리국민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상기 지표는 국제기구 종진출인원 및 총진출인원 중 고위직 현황을 보여줌. 국제기구 고위직은 임명직 및 선출직을 포함하며, 국장급이상 사무국 직원, 이사회/위원회 의장, 이사/위원, 국제재판소 재판관 등으로 구성. e-나라지표 국정 모니터링 지표, [www.index.go.kr/portal/main/EaachDtlpageDetail.do?idx\\_cd=1679](http://www.index.go.kr/portal/main/EaachDtlpageDetail.do?idx_cd=1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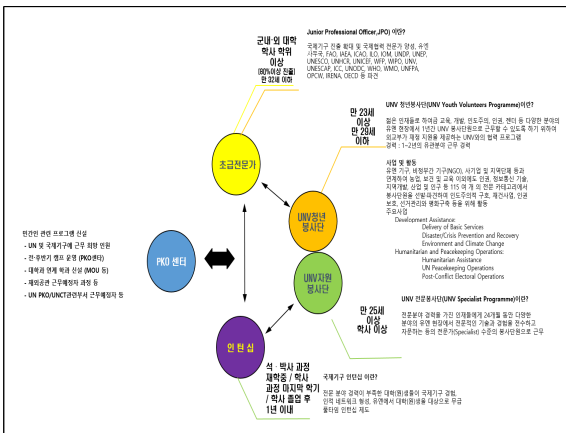
60)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1995년 국제기구인사센터를 발족하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제도 시행, 유엔자원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 인터십,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 <http://unrecruit.mofa.go.kr/>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introduce.jsp>

및 국제기구 인터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수준은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 이슈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 진출(고위직 포함)이 1999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표 15), 특히 고위직 진출 인원은 1999년 10명 수준에서 2020년 12월 기준 4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유엔분담률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유엔 사무국 등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sup>62)</sup>



〈표 15〉 외교부 인사센터, 고위직 진출 현황<sup>61)</sup>

유엔 및 국제기구로의 진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을 격상시킴은 물론, 소속 기구에서 한국인으로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외교부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인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향후 유엔 및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교육과정 희망 대학, 단체들과 연계하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유엔 및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확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며 유엔 및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외교부 인사센터, 프로그램 개념

유엔사무총장 진출의 계기로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대된 유엔 예산 분담률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표 16과 같이 국가의 차원에서 청년<sup>63)</sup>들의 비전의 장소이며 청소년

61) e-나라지표 [https://index.go.kr/por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679&board\\_cd=INDX\\_001](https://index.go.kr/por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679&board_cd=INDX_001)

62) 2020. 12월 기준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917명(P급 이상)이며, 특히 유엔 가입 이후 한 국민의 유엔 사무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129명(P급 이상)이 유엔 사무국에서 근무 중이다. UN개발 2021년, 유엔 사무국의 정규 직원은 36,574명이며, 이 중 13,002명(35.5%)은 본부에서 근무 중 ('19.12.31 기준, 출처 : A/75/491) 국가위상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임.

63) 유엔에서의 청년은 19세부터 29세를 말하며 통상 청년기본법 3조(2020. 8. 5)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년<sup>64)</sup>들에게 안보·문화교육의 장소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소중한 자산이며 분쟁과 전쟁의 상처에서 밝은 미래를 가져올 희망의 상징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와 우리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안보에 적극 동참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평화와 안보·문화, 평화와 비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국제적 감각을 심어주고 국제평화와 안보·문화의식을 고취하며 청년들에게는 국제평화와 국제기구의 역할을 교육함으로써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의 미래 비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구 분     | 청소년, 평화와 안보·문화   | 청년, 평화와 비전  |
|---------|--|---|
| 대 상     | 중·고등학생   |   |
|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
| 기 간     | 1~2주   |   |
| 프 로 그 램 | I  | 국제정세, 국제평화와 안보  |
|         | II   | 인권 및 아동보호, 분쟁이 청소년,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
|         | III  | 평화와 분쟁방지를 위한 기여 방안  |
|         | IV   | 평화프로세스에서 유엔 정책, 제안<br>(모의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문 작성) <sup>65)</sup> |
|         | 안보·문화  | DMZ평화의 길 순례,<br>안보·문화현장 견학                                |
| 비전      | 국내 국제기구 소개 및 탐방  |   |
| 비 고     | · 수업과 방문 전과정 영어로 진행(유엔기구 초빙강연 포함)<br>· 수업시간(현장체험) 및 학점 반영<br>·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류 활동 추진<br>(PKO 체험 등) |   |

〈표 16〉 청소년, 청년 평화와 안보 프로그램(안), 사진출처 : One Dream Global Academy

64)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9세 이상 24세 이하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통상 13세에서 19세를 청소년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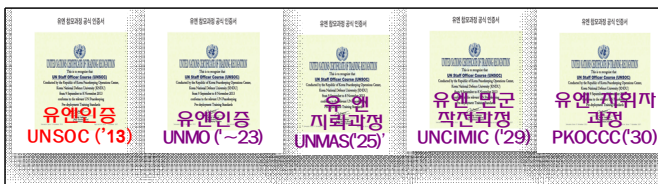
65) 청년, 평화와 관련하여 모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15개 그룹으로 찬반 Debate, 합의도출, 결의문 채택 등 모의 회의를 통해 청년의 역할과 책임, 참여에 대해 교육 진행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는 표 17과 같이 민·군·경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쟁력있는 분야와 아·태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구분        | 군   | 경찰  | 민간인  |
|-----------|---|---|--|
| 과정<br>(안) | 유엔 고위자 과정(UNSMML)<br>유엔어린이보호과정(UNCPC)<br>민군관계 과정(CIMIC)<br>유엔 지뢰과정(UNHMAC)<br>여성정찰정보팀 운용(EPTC)<br>인권 보호(POHC)<br>여성, 평화·안보(WPSC)<br>민간인보호(POCC)<br>분쟁관련 성폭력 방지,(CRSV) | UN 국제경찰 과정(UNPOC)<br>과학 수사기법 과정(UNSIIC)<br>컴퓨터 포렌식 수사과정(UNCFIC)<br>유엔 치안관리 과정(UNSMC)<br>유엔 법치와 치안분야 개혁과정<br>(UNRSC) | 유엔 지속가능발전 과제 과정<br>유엔 및 국제기구 과정<br>선거 감시 과정(UNEOC)<br>GENDER ADVISOR 과정<br>통신/정보시스템 과정(INTCIS)<br>유엔민간인참모과정(UNCIVSOC),<br>감금/보호관찰관 과정(PPOC)<br>무장 및 동원해제 및 통합계획<br>과정(DDRPC)<br>중재 및 협상 과정 |

〈표 17〉 군, 경찰, 민간인 교육프로그램(안)

현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는 기존 유엔참모과정<sup>66)</sup>, 군 옵서버과정 이외에도 유엔 고위자 과정, 유엔지뢰과정<sup>67)</sup>, 유엔 CIMIC과정의 개설이 필요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가 설립시 고려할 수 있는 유엔 과정은 그림 10과 같으며 일부 과정들은 타국가들과 중복되어 있으나 경쟁력을 갖춘다면 아·



〈그림 10〉 유엔인증과정 추진계획

태지역의 HUB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여성, 평화·안보(WPS), Gender Advisor, 지뢰제거, 첨단기술과정, 우리의 우수한 민주주의 체제

를 바탕으로 한 선거관리, 독특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과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1년 6월 여성가족부는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UN WOMEN CGE<sup>68)</sup>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그림 11) 체결하고 소재지 협정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UN WOMEN CGE의 설립은 단지 교육센터 유치를 떠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

66) 2013년 11월 유엔 참모 과정에 대한 유엔 공식 인증을 획득했으며 미국, 스웨덴 이어 3번째 국가이다.  
67) 우리 파병부대의 민군작전과 우리군의 DMZ 지뢰지대 제거 경험은 한국의 특화된 유엔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68) UN WOMEN CGE(CNETE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여성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 기능을 수행, 여성가족부 <https://blog.naver.com/mogelkorea>

엔의 역점사업이며 사무총장의 강조사항인 여성, 평화·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파트너십)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선도하고 전문 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11〉 UN 여성기구 유치

특히, 유엔 UNMAS(유엔지뢰행동국)<sup>69)</sup>은 지뢰제거 작업을 통한 평화구축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평화협상 또는 중재의 논의 주제이며 평화구축의 모멘텀을 제공한다. 콜롬비아(2016), 키프로스(2015)의 평화협정 시 지뢰제거가 평화협정에 반영되고 평화프로세스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017년 4월 4일, 지뢰대책행동 기념일에 유엔사무총장은 “지뢰대책 행동이 없는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지뢰제거 작업은 인도주의와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sup>70)</sup> 우리는 ‘9·19 군사합의’ 내용인 남북공동 유해발굴 여건보장을 위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작업을 우선 추진하였다. 향후 DMZ내 타지역 유해발굴 사전 여건보장을 위한 지뢰제거작업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



〈사진 4〉 지뢰제거 전문가 양성

제사회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교리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KIDA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수준에 맞는 국내기준 수립 및 훈령(예규)을 제정하였으며 군에서는 지뢰제거 전담조직(육군 특수지동지원 여단, 육본 지뢰제거 지원과)을 만들고 공병학교에 IMAS<sup>71)</sup>과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영국, 스위스 등

69) 유엔지뢰행동국은 뉴욕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화 작전을 지원하며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수행함. 뉴욕 소재의 소규모 팀 외에도 제네바에 인도주의 허브를 두고 있고, 이 분야의 19개 유엔지뢰대책기구 프로그램을 통해 3,000여 명의 여성과 남성이 고용되었다.

70) 평화구축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의 기여 예비개발 하틀리(유엔지뢰대책기구 정책, 옹호, 공공 정보 책임)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

71)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 UN 산하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지뢰제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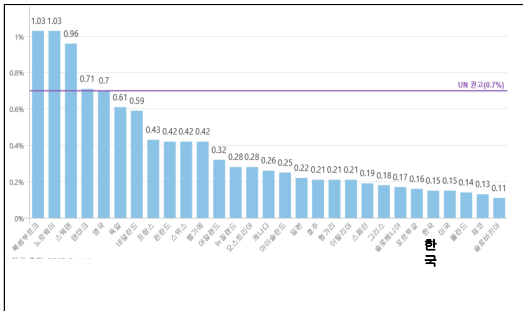
국의 위탁교육에 연간 2명씩 지뢰과정에 교육파견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가 육성을 추진(사진 4)하고 있으며 더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 평화·안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UNMAS(유엔지뢰행동국)을 유치한다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1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지뢰제거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발도상국 파병지원과 연관된 삼각파트너십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에서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공적개발원조(이하 ODA)<sup>72)</sup>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sup>73)</sup>과 연계하여 유엔 PKO활동을 우리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분쟁지역에서 겪고 있는 빈곤, 인권유린, 질병, 범죄, 경제파탄, 기반시설 파괴, 공공 서비스 붕괴 등 정전유지나 감독, 모니터링이 주 임무인 군 으로서는 경제의 파탄은 또 다른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분쟁으로 회기 하거나 범죄행위로 연결되어 사회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활동이 다국적군의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치, 경제적 요인은 또다시 해적의 활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서아프리카에서의

72)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는 긴급구호부터 구조조정프로그램까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면서, 경제 사회 개발에 일조하였다. 1990년대는 원조 수원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지위전환기로,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으며 2000년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우리 경제가 성장하자 개도국으로부터의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점차 우리정부 자금을 의한 원조규모가 확대되었다.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6년 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회가 설치되었으며 2010년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 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참조

73)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1991년 4월 설립된 우리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ICA 주요사업의 구성은 국별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인도적지원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국제 질병퇴치기금사업, 인재양성사업 등이다. KOICA 홈페이지, [www.koica.kr](http://www.koica.kr),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해적활동 증가는 결국 정치, 경제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표 18〉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공적개발원조) : oda 홈페이지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은 지표 1874)에서 보듯이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공적개발원조) 비율로 볼 때,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9년 기준 0.38%로 0.15% 수준으로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UN의 권고인

0.7%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2030년까지 0.30%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ODA의 기본정신은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이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이 설립목적75)으로 **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을 핵심가치로 한다. 주요사업으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물, 에너지, 교통, 과학기술혁신과 환경, 성 평등, 인권·평화 등 범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9, 20에서 보듯이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개발도상국의 발전단계, 개

| 아시아·태평양 | 아프리카  | 중남미   | 중동·CIS |
|---------|-------|-------|--------|
| 45.6%   | 31.7% | 11.5% | 11.2%  |

〈표 19〉 KOICA 지역별 사업지원 현황, 2021~2025  
출처 : KOICA 홈페이지

| 구분 | 국별 협력 | 글로벌 연수 | 혁신적 개발 | 시민 사회 협력 | 인도적 지원 | 국제 기구 협력 | 국제 질병 퇴치 | 인재 양성  |
|----|-------|--------|--------|----------|--------|----------|----------|--------|
| 비율 | 44.9% | 7.45%  | 3.07%  | 4.40%    | 11.2%  | 5.54%    | 4.85%    | 18.56% |

〈표 20〉 분야별 지원 현황, 2017년, 출처 : KOICA 홈페이지

발전전략 및 계획, 사업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예산 증가 시 분쟁 이후 평화유지활동 또는 평화구축활동에서 군 또는 경찰과 함께 앞에서 제시한 모듈방법으로 국가 경제, 사회, 환경발전과 복지향상, 인권, 직업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위주로 평화유지활동과 국제개발을 연결하고 시민 및 외부 단체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74)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참조

75) KOICA 홈페이지 사업전략 및 정책, 분야별 지원현황, [www.koica.go.kr](http://www.koica.go.kr)

가능할 것이다. 표 21, 22는 일본의 ODA전략과 한국의 ODA추진방향이다. 일본은 PKO와 ODA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도 분쟁 이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평화유지활동 또는 평화구축활동과 ODA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안을 제안한다.

- 일본의 ODA 규모는 1997년부터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 2020년 일본 정부의 ODA 예산은 5,610억엔 임.
- ODA는 일본의 중요한 외교수단으로 활용중(외무성이 78.9%), 2015년 ODA대강을 개발협력대강으로 변경 - 전략적 개발협력추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한층 공헌할 것을 강조
- 일본 자위대는 1992년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협력법 이후 유엔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 등 참가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2015년 「국제평화협력법」의 개정 및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에 따라 UN이 총괄하지 않는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전 확보 업무, 경호 업무 등 국제평화협력 업무가 추가되어 자위대의 국제적 활동 범위 및 내용이 증가
- 실시체계에서 긴급 인도지원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평화 유지활동(PKO)과의 연계 강화를 강조함
- UN평화유지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PKO와 ODA 사업과 연계추진, ODA와 능력구축지원 등 전략적 활용

| 구분       | 내 용   |
|----------|---|
| 개발협력의 목적 | -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개발협력을 통하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번영의 실현,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등 '일본의 국익확보에 공헌함'  |
| 기본방침     | - 비군사적 협력에 의한 평화와 번영 공헌<br>- 인간의 안전보장 추진<br>- 자조노력 지원 및 일본의 경험을 활용한 대화, 협동에 의한 자립적 발전   |
| 중점과제     | - 질 높은 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퇴치<br>- 보편적 가치의 공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br>-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사회 구축<br>- 세계 각 지역의 필요성과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효과적 협력실시   |
| 실시       | - 효과적·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한 원칙으로서 전략성 강화, 민간의 강점 활용<br>- 개발협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원칙으로서 군사적 이용 및 분쟁조정에 대한 사용회피, 단, 비군사적 목적의 개발협력에 군 또는 군적을 가진 자가 연계된 경우 실질적 의의에 착목하여 개별적으로 검토<br>- 실시체계에서 긴급 인도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및 NGO, PKO와의 연계 강화, 민간부문 자원 투입 및 성장추진 |

<표 21>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 동향과 시사점(ODA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중심으로)<sup>76)</sup>

| 중점협력국 재선정 결과 |   |  |
|--------------|---|--|
|              | 제2기 중점협력국   | 3기 중점협력국 재선정(안)  |
| 아시아          |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12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 <b>인도</b> |
| 아프리카         | 7 가나, 에티오피아, <b>모잠비크</b> ,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 7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 <b>이집트</b>                             |
| 중남아          | 2 우즈베키스탄, <b>아제르바이잔</b>                                       | 4 우즈베키스탄, + <b>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b>                                    |
| 중남미          |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              | 24개국  | 27개국   |

\* ■ 제외국(2개), ■ 신규 선정국(5개)

- 5년주기 ODA 중점협력국 지정/운영, 21년 2기 중점협력국 운용기한('16~'20년)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수원국의 소득 수준, 지역별 분포, 취약국 여부 고려)
- **신남방 신북방정책 국가를 최대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ODA와 대외전략과 연계(5개국 추가 27개국으로 조정)**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sup>77)</sup>

-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지속가능개발의제 5P\*의 이행방안 구체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실현” \*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 Partnership(파트너십)
  - **포용적 ODA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기초위생 역량 강화와 함께 분쟁·취약계층 지원, 식량 지원·교육 등 기본적 삶 보장**

<표 22> 한국의 ODA 중점협력 재선정/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sup>78)</sup>

76)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발행(20.10.20) 내용을 요약함

77)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1호)(21.1.20)

78)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6-3호) (21.1.20)

코로나 19 팬데믹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회의와 수업들이 줌, MS팀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과 수업을 하게 만들었으며 필요한 부분만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인증을 해주게 되었다.

특히, 유엔 교육의 콘텐츠가 이론 내용과 토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생들의 사전 학습 및 준비 등 능동적 참여가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미흡하며 다양한 콘텐츠 부족과 시간제한 등은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컴퓨터 기반의 다양한 교육훈련 방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증폭시키게 하였다.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의 온라인 교육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1세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메타버스의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림 12〉 메타버스 기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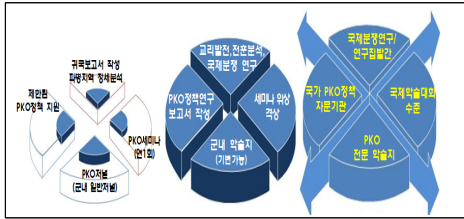
이러한 기술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사회·경제적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더욱 진화할 것이며 그림 12와 같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유형들이 서로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용하여 가상 상황과 장소, 실제 상황과 동일한 장소에서의 실습 및 예행연습, 사전 체험을 한다면 교육훈련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쌍방향 토론식 교육, 임무단 콘텐츠 제공, 교육생 주도 학습 후 교수(관)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촉진자로서 토의식 교육, 현지 지형연구 및 문화 학습 등의 훈련 콘텐츠와 시스템, 위험하거나 중요한 훈련(IED, 지뢰, CPR, 환자응급 처치 등) 등 가상공간에서 실습, 실제 임무단 지형과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정찰, 관측, 보고 등 임무 예행연습, 지역주민 접촉(자국어 사용) 및 인터뷰(통역관 활용, 질문 및 정보수집 등), 언어교육 등 실습 위주 교육, 현장 임무단 임무수행시 성폭력 피해자 면담 및 치료,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 의사소통 및 친화활동, 위기상황 대체훈련(지휘소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훈련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국제 PKO 정책 주도기관

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PKO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림 13과 같이 주요분쟁을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유엔 정책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아젠더(Agenda) 선점, 국가 PKO정책 제안 등 국가급에서 PKO와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평화활동센터는 PKO 관련 정책, 교리 연구·발전 활동이 극히 제한되고 PKO 세미나 개최, 유엔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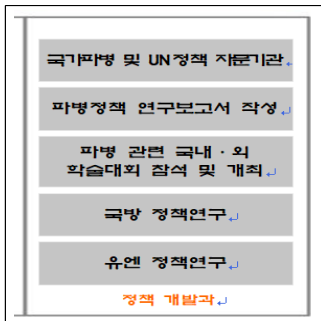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기능 보강 안

물 번역 및 간행물 발간 등 제한적 활동만 실시하고 있다. PKO활동 확대와 세계 분쟁 지역 및 이슈 다변화에 따라 국가 PKO정책 및 분쟁지역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국제평화연구소(가칭)에서는 국가 PKO정책을 지원하고 PKO 교리 및 전문분

석, PKO 전문학술지 발간, 국제분쟁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 PKO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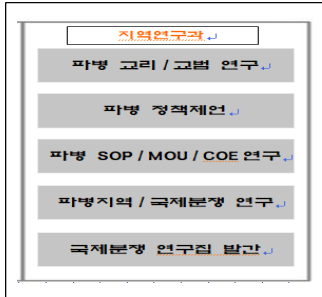
### 국가 PKO정책수립 지원

정책개발과(가칭, 표 23)에서는 국가 파병 및 유엔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유엔 및 국가 PKO정책 분석 및 건의, 국제 이슈 및 변화되는 상황을 PKO정책으로 발전, 국내·외 PKO정책 교류, 국내·외 PKO관련 언론, 연구보고서, 정책문서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 파병정책 연구를 통해 파병정책 연구보고서를 작성, “평화활동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기술을 PKO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파병정책을 건의하고 유엔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표 23〉 정책개발과

### 국제분쟁연구, 교리발전 및 전훈분석



〈표 24〉 지역연구과

국제 분쟁 및 파병지역 연구, 평화·안보, 평화와 개발, 유엔 교리 및 교범 연구, 전훈분석을 통한 파병 정책 제언, 국가 파병과 관련된 문서 검토 등 국제분쟁 연구와 교리발전, 국제분쟁 연구집 발간 등을 수행하고 파병 시 분쟁국 정보 수집 및 피드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표 24)

### 국제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국제평화연구소는 그림 14와 같이 국내·외 평화 연구기관, 각국 PKO센터, UN고위직 및 관련기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연 1회 개최하고 현



〈그림 14〉 국제 평화연구소

PKO저널을 국제학술지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권위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국가 간 PKO관련 능력을 육성하고 교류를 촉진하며 정책 및 분쟁연구 결과를 건의하고 주도하기 위해 국제 학술지를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국

격 상승과 외교력 증대 및 국제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적 지지기반 확보는 물론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국내·외 PKO 교류협력 증추기관

현 국제평화활동센터는 아태 PKO센터 협의회(AAPTC)<sup>79)</sup> 및 세계 PKO센터

79) 아시아-태평양지역 PKO센터 협의회(AAPTC) Association of Asia-Pacific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s) 미태평양사 후원 하 GPOI(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프로그램에 의거 아태지역 PKO 활성화,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로서 회원국(17):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다,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등 17개국이며 브루나이, 피지, 프랑스, 독일, 파푸아뉴기니아, 동티모르, 통가, 베트남 등은 옵서버(8)로 참가한다. \* 개최지 : '16년 필리핀, '17년 스리랑카, '18년 대한민국, '19년 태국, '21년 베트남(연기)



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교육은 육군대학 외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군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수한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군 대학, 합참대, 국방무관단, 양성교육기관에서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법과 규범,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유엔 및 국제기구, 민간단체, 민간연구기관, PKO 관련 협회 및 학회 등과 다양한 인적·학술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내 PKO에 대한 저변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PKO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교류협력확대 분야에서 현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는 표 25와 같이 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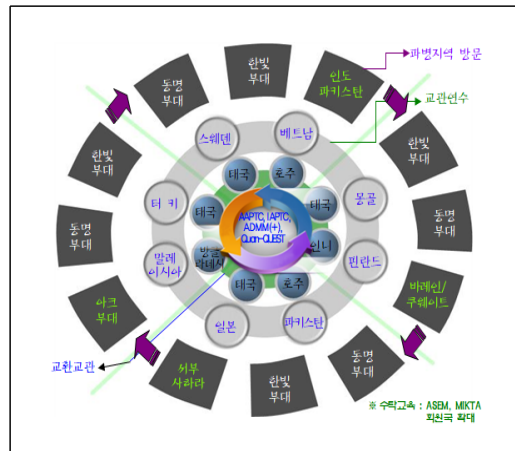
| 구분    | 교환교수 (초빙/지원) |     |     |     | 교육 파견 / 수탁 |     |     |     |
|-------|--------------|-----|-----|-----|------------|-----|-----|-----|
|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계     | 2/0          | 5/0 | 6/1 | 4/0 | 2/2        | 3/2 | 1/6 | 3/5 |
| 스웨덴   | 1/0          | -   | 1/0 | 0/0 | 1/0        | 2/0 | 1/0 | 1/0 |
| 핀란드   | 1/0          | -   | 1/0 | 1/0 | 1/0        | 1/0 | -   | -   |
| 베트남   | -            | -   | -   | -   | 0/2        | 0/1 | 0/2 | 0/2 |
| 캄보디아  | -            | -   | -   | -   | -          | 0/1 | 0/2 | 0/2 |
| 말레이시아 | -            | 1/0 | -   | 1/0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0/2 | 0/1 |
| 필리핀   | -            | 1/0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1/0 | -   | -          | -   | -   | -   |
| 방글라데시 | -            | -   | 2/0 | 1/0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1/0 |
| 태국    | -            | 1/0 | 1/1 | 1/0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1/0 |
| 호주    | -            | 2/0 | -   | -   | -          | -   | -   | -   |

〈표 25〉 교환 교수 및 교육 교류 현황

(AAPTC) 및 세계 PKO센터 협의회(IAPTC) 총회 회원국 중 영국, 베트남, 스웨덴, 호주, 태국, 캄보디아, 프랑스, 일본 등과 교류중이다. 영국과 베트남은 국방부에서 PKO MOU를 체결한 국가이며 그 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과는 MOU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기타 국가들은 별도의 MOU체결 없이 해당 국가에서 요청시 검토하여 참가하고 있다. 그림 17과 같이

PKO를 통해 유엔 및 각국 PKO센터와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 주요 분쟁 연구, 유엔정책에 대한 전략 정보 수집 및 공유, 지역연구, 교환 교수 및 교육 확대 시행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 국제평화활동센터가 국방대 참모조직으로서 편성되어 있다 보니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는 독립기구로서 국제 교류협력 활동을 계획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림 17〉 국제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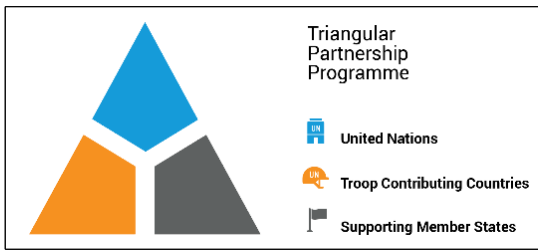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GPOI<sup>81)</sup> 주관하에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영국 등이 참석하여 공여 국가들과 기관 간 정보 공유, 마찰 중재, 협조 등 PKO 임무 효율성 및 자원 개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기타 주요 공여국들의 22년 계획들은 아래 표 26과 같다.

|   |
|---|
| <p><b>일본: 타국가 훈련지원</b> (몽골 공병훈련 지원, 몽골은 최근 공병 PKO파병 결정. 이와 같은 타국 훈련을 2022년 계획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캄보디아에 2022 공병훈련 제공하고 프로젝트 기획 인원을 3년의 기간 동안 채용</li> <li>(2) 몽골 공병훈련 지원, 몽골은 최근 PKO 파병을 결정</li> <li>(3) 현재 ADMM+ PKO EWG 베트남과 공동 개최국으로 PKO EWG 회의 및 PKO EWG FTX 2023을 2022년 3월에 개최, 베트남의 첫 번째 UNISFA 공병 파병 지원예정.</li> <li>(4) 인도네시아에서 MPE 2022에서 성 관련 훈련 교육을 담당, 피지에 호주와 야전 병원 훈련을 지원할 의사 표명</li> </ul> <p><b>호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지 Black Rock 공사 2022년 1월 완공, PKO 훈련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재난 구호 작전 훈련들도 제공. 제공되는 훈련은 UNSOC, UNMOC, CPOC, 아동보호, MPKI 그리고 2022년에 신설 계획 중인 UN NIO.</li> <li>(2) 인도네시아와의 호주방위군 파트너십 협정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에 '부시마스터' 지뢰 대항 기갑차량 지원</li> <li>(3) 2022년, Timor Leste 지역에서 연합 훈련팀 구성, 소대급 병력 지원</li> <li>(4) 필리핀과 통합과정 계획, 이미 비행 조종사 과정을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다양한 국가 교육생을 초청 예정임</li> <li>(5) PIRAP JABIRU 훈련 지원, 베트남 병원의 공중 수송지원, 캐나,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교육지원</li> </ul> <p><b>캐나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국과 프랑스 훈련 자재들을 아프리카 국가에게 공여, 군사 교육 협력 프로그램(MTCP) 제공</li> <li>(2)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한국 등과 훈련지원 및 교류</li> <li>(3)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전략 평화지원 활동 과정(SPSOC)을 인도 태평양 협력국에게 제공, 45명의 인원 참석</li> <li>(4) 작전계획 기초과정(IOPC)을 필리핀과 요르단에서 주관, 2022년 후반기에 연습계획과정(EPPC)을 베트남에서 진행</li> </ul> <p><b>영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군, 공군, 해병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구 파견 방안 고려</li> <li>(2) 네팔에 EOD, 언어, 군수 지원, 여성, 평화·지원 분야 방글라데시 지원</li> </ul> <p><b>미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글라데시 / 피지에 UNCIMIC 등 5개 교육과정, EOD/CIED 장비 셋 지원, 몽골 4회 교육 및 EOD/CIED 장비 셋 지원, 네팔 3회 교육지원 및 통신장비 지원, 베트남 3개 교육과정 및 물자 지원</li> <li>(2) 인도네시아 4개 교육과정 6회, 말레이시아 1회, 태국 2개 교육과정 지원</li> <li>(3) 필리핀 훈련 4개 교육 과정 및 물자, 훈련통제 센터 내 장교 및 여성 막사 건축</li> </ul> |
|---|

〈표 26〉 GPOI 회의시 주요 내용

81) 미 국무성내 정치군사 사무소내 평화작전 능력구축과 업무 중 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는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유엔 및 지역내에서 평화작전 능력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하며 지급가능한 평화작전 능력을 고취함으로써 유엔 및 지역내에서 평화작전을 위한 국제수준의 능력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이 G8 Sea island summit에서 제안한 평화작전구상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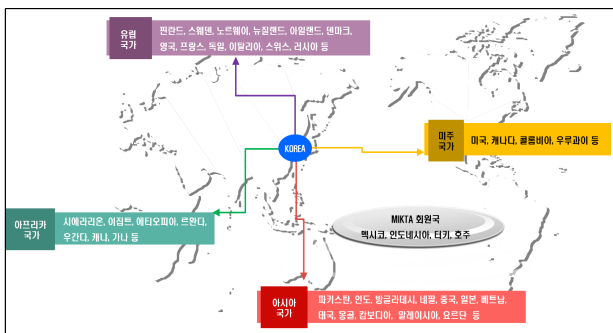
이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몽골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교관(수)지원과 소대급 Khan Quest<sup>82)</sup>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타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비 및 교육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PKO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7년 남수단을 마지막으로 파병 복귀 후 유엔 해외파병은 없는 상태이며 다국적군 작전에 참가 중이다. 비록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그림 18〉 삼각파트너십, 출처 : 유엔 작전지원국

있는 삼각파트너십<sup>83)</sup> (그림 18, 병력 공여국, 유엔, 지원회원국 간 협력체제)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도상 국가들이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물자 공여(국방부, 외교부 검토/결정)와 교육지원

(기동훈련팀, Mobile Training Team)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엔 국제평화활동을 선도하고 국제평화활동을 또 다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9〉 아시아·태평양 허브 역할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는 2018년 아태 PKO센터 협의회(AAPTC) 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 PKO센터 협의회(IAPTC) 총회에 연례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PKO교리 발전 및 교관능력 향상을 위한 「유엔 교관 교육과정」을 '19년

유엔장관회의 공약으로 제시하여 5년간('22 ~ '26년, 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21년 서울 유엔장관회의 공약으로 5년간('23 ~ '27년, 연 1회) 「유엔 여군장교 교육과정」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유엔기구와 국제 PKO센터간 협의회 활동,

82)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몽골에서 실시하는 PKO훈련

83) 2014년 유엔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고 2015년 평화유지 임무의 준비와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 공병훈련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공병특별훈련, 야전 의무, C4ISR,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캠프 방호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triangular-partnership-programme-tp>

국제회의, 세미나, 학술세미나, 유엔교육과정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 개최국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국제평화활동을 선도해



〈그림 20〉 IAPTC 사무국 현황

야 할 것이다.(그림 19) 세계 PKO센터 협의회(IAPTC) 집행 이사회 진출 및 의장국 수임<sup>84)</sup>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PKO선도의 좋은 기회일 것이다.(5년 단위로 순환식으로 의장국 수

임, 그림 20) 현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조직과 편성으로는 사무국 임무까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로 조직과 예산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 남·북 협력의 선도기관

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평화연구”와 평화유지활동 중심지를 만들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 DMZ유네스코 등재, 개성-판문점 지역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에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유치, DMZ지뢰제거 등이다. 이러한 구상은 남북 교착상태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PKO활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잠재능력과 민주주의 가치, 한반도에서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열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다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당위성은 충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PKO를 활용하여 역할을 확대하고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 공동으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설립한다면 남북 유엔 PKO활동 참여, 평화연구, 남북 군사교류,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활동 등을 통해 PKO가 남북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그림 21) 평화, 인권, 문화,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의 추동력을 발휘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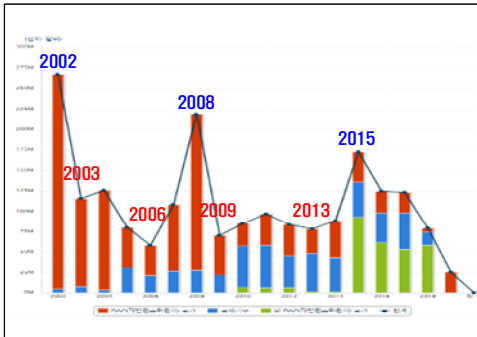


〈그림 21〉 PKO의 남북협력 역할

84) 의장국은 5년 단위로 회원국에서 시행하며 사무국 임무까지 병행한다. [www.iaptc.org/IAPTC-secretariat](http://www.iaptc.org/IAPTC-secretariat)

있을 것이다.

『DMZ 국제평화지대』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그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를 DMZ 內로 이전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특히, 북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책임 있는 소임을 완수한다는 이미지와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의 동참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국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7〉 북한 OECD/DAC 지원현황

표 2785)에서 보듯이 2002년은 6·15 남북공동선언(2000), 금강산 해로관광 시작(2001), 4, 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2002)으로, 2008년은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영변 원자로 폐쇄(2007), 냉각탑 폭파(2008), 2015년 메르스사태, 8. 25남북합의, 이산가족 상봉, 이란 핵협상 타결 등 남북한 평화

분위기와 기대감으로 국제원조가 증가하였으나 2003년 북한의 핵동결 해제(2002. 12), 2005년 핵보유국 선언,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2010), 2013년 3차 핵실험, 휴전협정 백지화, 연평도 포격(2014), 2016년 4, 5차 핵실험, 2017년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의 불안정 시기에는 국제원조가 크게 감소하였다(표 27 참조).<sup>86)</sup> 특히, 북한의 핵위협은 국제적 원조가 급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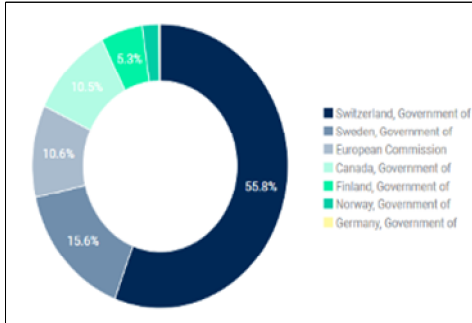
남북 공동 PKO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남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공동의 유엔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북한에 대한 국제개발원조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PKO활동 자체에도 더욱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887)과 같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한 국가들로 대부분이 PKO선진국가들임을 보면 결국 PKO 선진국들은 평

85) 대북정보지원시스템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FrgnctySubject.do> 21. 12. 20 인터넷 검색,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21>, 21. 12. 20 인터넷 검색

86)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년 (1995~2016) 평가와 함의 2018.9월호 참고

87)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은 2021년 이전부터 지속적 지원 중,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021>, 21. 12. 20 인터넷 검색

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정치적·이념적인 범위를 벗어나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북한 인도적 자금 지원국가 현황

남북 공동으로 냉전의 산물인 『DMZ 평화지대』내 남북 공동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설립은 동북아 영구 평화의 상징이면서 글로벌 평화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센터로서 아시아·태평양에서 Hub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이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가를 유도하고 참가시 유엔 기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만큼 우리의 파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표 29와 같이 단계적으로 개인파병부터 부대 파병 순으로 실시하되 평화유지, 평화구축이나 재건<sup>88)</sup> 임무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건 성숙 시 남북 동일임무 공동 파병 또는 남북한 단일 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협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구분    | 1단계    |        | 여건 성숙 시 | 2단계  |          |       |                 |
|-------|--------|--------|---------|--|----------|-------|-----------------|
|       | 개인파병   |        |         | 부대 파병  |          |       |                 |
| 교육 지원 | 북한단독   | 남북공동   |         | I. 북한단독  | II. 남북공동 |       | III. 남북단일부대     |
|       | 참모/옵서버 | 동일 임무단 |         | 전투지원 부대  | 별도 구역    | 공동 구역 | 연합부대 편성 (연합지휘부) |
| 비고    |        |        |         | 전투지원부대(공병, 의무, 통신 등) → 전투부대<br>북한 파병 <b>삼각파트너십</b> 적용 (장비 / 물자 / 교육지원) |          |       |                 |

〈표 29〉 남북 PKO파병 교류 협력(안)

위에서 제시한 남북 PKO파병 교류협력(안)은 현 남북한 상황 하에도 남북한이 정치적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충분히 즉각 시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음 표 30은 현재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파키스탄군이 유엔 PKO활동에 파병되어

88) 우리는 이미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 유해발굴 및 지뢰제거 작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뢰제거와 유해발굴은 평화구축의 한 분야로서 남북한 군사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구축활동에 기여 가능

임무수행하는 예이다. 현 12개 임무 중 인도·파키스탄군이 동시 파병되어 있는 임무단은 콩고와 남수단이다.<sup>89)</sup>

| 구분   | 콩고 임무단 (사령관 브라질)<br>인도 : 2,006명, 파키스탄 : 1,976명 |          |          | 남수단 임무단 (사령관 인도)<br>인도 : 2,405명, 파키스탄 : 286명 |          |          |                             |      |                |
|------|--|----------|----------|--|----------|----------|-----------------------------|------|----------------|
|      | 남부<br>여단                                       | 북부<br>여단 | 중부<br>여단 | UNITY  | 서부<br>여단 | 남부<br>여단 | 북부<br>여단                    | JUBA | 동부<br>여단       |
| 인도   |  | 경찰       | 전투<br>대대 | 공병,<br>통신                                    | 통신       | 의무<br>통신 | 전투<br>대대<br>통신,<br>의무<br>공병 | 통신   | 전투<br>대대<br>통신 |
| 파키스탄 | 전투<br>대대                                       |          |          | 공병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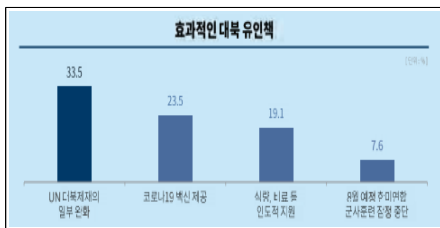
〈표 30〉 인도·파키스탄군 동일 임무 파병 현황<sup>90)</sup>

위와 같은 모델은 해외파병 이외에도 남북협력 분야에서 COVID-19 대응, 아프리카 열병과 같은 감염병, 소나무 재선충 발병 시 공동 대응, 자연 재해 및 재난 상황 발생 등 북한내 인도적 위기 상황발생시 남북한 합의하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남북한 PKO 교류협력 분야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백신제공,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31<sup>91)</sup>).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 군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는 경찰과 필요한 분야의 민간을 구성하여 지원 하는 방식의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표 31〉 효과적인 대북 유인책

『DMZ 국제평화지대』내 국가급 국제평화 활동센터 설립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우선 DMZ 인근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표 32와 같이 우리 파병 인원들에게 평화와 관련된 유엔 현지 임무수행 및 개인파병 교육 중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정치적 합의로 북

89) 콩고 임무단은 비슷한 수준의 전투부대가 파병되어 있으며 별도의 책임구역을 할당 받아 작전을 수행중이며 남수단에는 인도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투, 전투지원 부대가 파병되어 있으며 파키스탄은 전투지원 공병부대가 파병되어 인도군 공병부대와 같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90) www.un.org United Nations Peacekeeping에서 파병현황 참조 21.12.28일 검색

91) 통일여론·동향(2021년 2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문 결과

한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북한군 개인파병 교육지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분소에서는 개인파병(유엔참모, 군 옵서버) 핵심과목(CPTM), 계획수립 절차(MPP), 야

| 구 분 | CPTM                       | MPP                       | FTX          |
|-----|----------------------------|---------------------------|--------------|
| 내 용 | 25과목 (1주)                  | MAPEX (1주)<br>INSTEM (1주) | 정찰 / 관측 (1주) |
| 비 고 | 기타 4주 과목은 현 국방대 PKO센터에서 진행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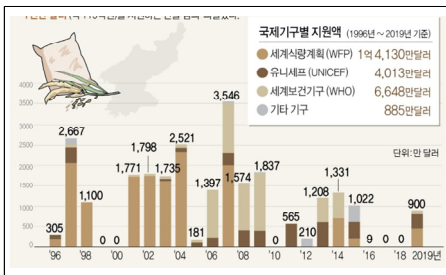
〈표 32〉 PKO 분소 파병교육 프로그램(안)

외훈련(FTX) 등 유엔 개인 파병 총 9주 중 4주 교육을 실시하되 북한군이 파병한다면 4주 교육과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로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고 현재와 차 후 남북관계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에는 국제평화연구소(가칭)를 설치하고 개인 및 부대파 병 교육지원 이외에도 남북공동으로 국제분쟁 연구, PKO정책개발 및 학술연구를 함으로써 긴장완화와 군사협력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길을 유도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을 유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MZ 국제평화지대』내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는 남북한 유엔 및 국제기구 협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내에 남북협력과



〈그림 23〉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현황<sup>92)</sup>

활용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DMZ 국제평화지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평화”, “환경”,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기구들이 유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 면에서 세계 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PF)<sup>93)</su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

9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0080600250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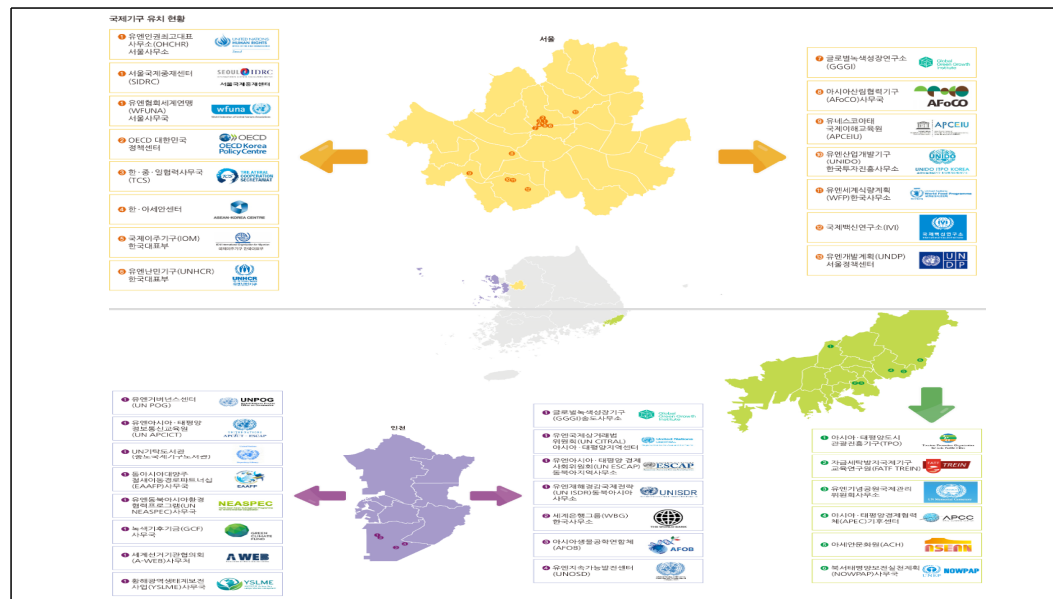
93)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 41.1%), 유엔아동기금(UNICEF, 37.9%),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PF), UNDP, UNOCHA 북한상주사무소 운용 및 지원 21, 21, 12, 20 인터넷 검색, COVID-19로 WHO 2명을 마지막으로 21.4월 전원 철수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약번호 | 기관명               | 협약 일자 | 협약 일자 | 소재지  |
|------|-------------------|-------|-------|------|
| 1    | 국제연합개발기금(UNICEF)  | 1976  | -     | 제노바  |
| 2    | 국제연합여성개발기금(WFP)   | 1976  | -     | 제노바  |
| 3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FAO) | 1976  | -     | 로마   |
| 4    |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IAEA) | 1979  | -     | 빈    |
| 5    | 국제연합인구개발기구(UNFPA) | 1980  | -     | 코펜하겐 |
| 6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 1982  | -     | 제노바  |
| 7    | 국제연합아동보호연맹(IFAD)  | 1982  | -     | 로마   |
| 8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4  | -     | 제노바  |
| 9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0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1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2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3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4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5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6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7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8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19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0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1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2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3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4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5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6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7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8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29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30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 31   | 국제연합농업농촌개발기금(WFP) | 1982  | -     | 제노바  |

(표 35) 정부 간 기구 가입현황



(그림 24) 국내 국제기구 유치 현황

## VI. 맺 음 말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거리는 잿빛으로 뒤덮였고 거리에는 고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으며 아시아의 아주 작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16개국의 회원국들이 전쟁에 참가하여 희생하였고 기타 의료지원, 물자 및 재정을 지원하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아직도 그 상처는 분단이라는 현실로 유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8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G20에 가입하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다.

오늘과 같은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K-POP의 열풍이 전 세계 한류를 일으키는 문화강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G20 정상회의 및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세계적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전 국민이 팔을 걷어붙여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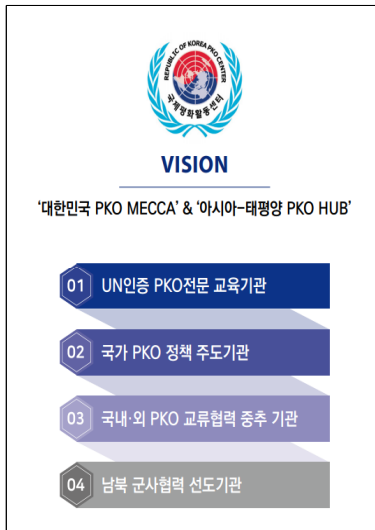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선진국형 국제평화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형 평화활동이라는 특별한 정의는 없다. 물론 국가별로 처한 지정학적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유엔 평화활동에 어떻게 기여해오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병력공여 10위권 국가는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르완다,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중국, 세네갈 순이며 IMF 선정 10대 선진국(병력공여 순위)은 미국(84위), 일본(105위), 독일(36위), 영국(35위), 스페인(32위), 한국(38위), 프랑스(34위), 이탈리아(23위), 캐나다(66위), 호주(57위) 순이다. 우리가 평화유지활동 선진국(스웨덴 52위, 핀란드 55위, 덴마크 94위, 노르웨이 67위)으로 알려진 국가들은 병력공여 순위면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sup>97)</sup>. 이들 국가들은 대규모 병력 파병보다는 경찰과 민간, 군 옵서버 파견, 양자 및 지역협력체 차원에서 지원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해외파병도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평화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은 선진국형 국제평화활동의 방안이 될 것이다. 유엔의 공식 인증된 교육기관으로서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선도하고 기타 파병국가들의 교육과 장비 지원 등 삼각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시대적 이슈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

97) [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01\\_summary\\_of\\_contribution\\_42\\_sep2021.pdf](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01_summary_of_contribution_42_sep2021.pdf)(22.1.13일 검색).

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을 지원하고 군 위주 교육에서 민·관·경이 통합된 평화활동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병력위주에서 기술과 지식위주의 평화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평화활동 전반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이 표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해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고위직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력에 맞는 역할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더욱 복잡해지는 국제분쟁을 연구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유엔의 독립패널 참여, 유엔 파트너 연구기관 역할 수행 등 유엔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유엔 가입 30주년, 이제는 더 나은 미래 비전과 청사진이 필요하다.(사진 5)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까지 상황에 맞추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많은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아직도 분단된 현실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구축과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 현실, 유엔 국제평화활동에서 우리가 이룩한 선진화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에 맞는 유엔 국제평화활동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룩하기 위해서 본고에서 제시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설립방안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사진 5) 국가급 센터 비전과 목표

지금까지 제시한 국가급 국제평화활동센터 설립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유엔 국제평화활동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평화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파병확대에 따른 PKO센터의 역할과 발전 모델, 국방대 PKO저널, 2011, 1
- 정장수. UN PKO 병력공여 발전 방향 PKO 작전환경 변화와 UN 평화활동국軍 능력 소요 중심, 국방대 PKO저널 19호
- 지효근. 2021, 포괄안보 시대 한국의 해외파병 발전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통권 132호
- (사)유엔협회세계연맹,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1. 15, 행복도시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 전북연구원. 전북 국제행사 효과 지속·확산 위해 관련 국제기구 유치 노력 해야 (이슈브리핑), 2021. 2. 2
-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 국민들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2021. 2. 2
- 최원상, 한국의 PKO 참여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고성운, 한국국방연구원, 대한민국,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길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접근, 2011. 3. 15
- 박종현, 군사학과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평화활동에 한국 예비군의 파병 방안에 관한 연구(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2)
- Trustpolitik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론과 실제 참고- 통일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13-05(2013. 11월) 능동적 군사외교 및 국제평화활동 전개
-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 고성운, KIDA국방현안연구위원장, 비무장지대에 PKO 국제기구(UNPOO) 유치 월간조선 2013년 8월호
- 전병환, 국방대교수, 소프트파워 확대를 위한 국가급 PKO센터 구상, 2012, PKO저널
- 평화구축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의 기여, 예비제일 하틀리(유엔지뢰대책기구 정책, 옹호, 공공 정보 책임),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

- 신석현, 동명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조교수,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제35집 제3호, 19.8.26,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센터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pp.82~91)에서 동북아 지역에 유엔 인도적 지원 물류시설 유치 제안
- 김태산, 독일 예비군의 변천과정과 그 시사점,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pp.195-216 2020. 6
- 정철우, 국방인력연구센터 인력정책 연구실 국방인력 POOL확대를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방안, 2019. 8. 29 토론회 발표(대외학술활동 시리즈 2019-41)
- 민병원(서울산업대학교), 최종건(북한대학원대학교), 해외과방관련 법·제도의 국제비교,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8.12)
- 형혁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 정치학 박사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S 제116호 현안분석, 2020. 2. 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2009.4.16.)
- 황규진, 강선, 경찰대 교수, 국제평화활동과 취약국가 국제개발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 경찰학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31호, 2012.8.10.)
- 유재광, 조원빈, 홍미화, 이영주, 권재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성과, 한계, 개선방향 -유엔, PKO, 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3(2020.12.31.)
-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찰의 UN PKO 참여 활성화 및 경찰 PKO 센터 설립방안, 연구보고서, 2007
- 손대선,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강사, 정치학 석사, 중견국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리더십 발휘방안: 고위급 직책 배출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제33권 제1호, 통권 115호, 2017)
- 박종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양교직과 초빙조교수, 국제 분쟁지역에서 한국경찰의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2020.10.29
- 이종운, KIEP 동북아 국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2003. 6)
- 문경연(전북대학교 교수), 이수훈(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전명수(블라디보스토크 경제서비스대학교 교수)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년(1995-2016) 평가와 함의, 2018.9

- 길병옥(충남대 교수), 라미경(순천향대 연구교수) 국제 ODA의 변화와 남북교류 협력: 국제 NGO의 역할
- 정진영(책임연구원), 이성훈, 조희원, 임지성, 전수진(연구원), 경희대학교 유엔 협회 세계연맹, 행복도시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 2019. 1. 15
- 김태진(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강선(크라이스네고 이사), 권구순(서울사이버대학교 조교수), UN 경찰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경찰의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학 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56호, 2018)
- 권구순(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2018
- 문선혜, 법무법인 통인 변화사,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연구(20.11.17)
- 이명진(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정우탁(UNESCO한국위원회 박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2001.8
- 송승중(대전대학교 교수), 유엔의 기술전략, 사무총장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6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 연구-주요문서 번역과 해제-(21. 2. 10)
- 최춘흠(선임연구원), 김영운(선임연구원), 최수영(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UN 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활동(2008. 12)
- 박민형(국방대학교 부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파병 50주년 시점에서 재평가한 베트남전쟁의 현대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4(통권 제 103호)
- 외교부 국제기구국, 2021년 UN개황, 2021.9
-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 유엔(21. 8. 15)
- Partnership for Technology in Peacekeeping Initiative(2014)
- Report of the Expert Panel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UN Peacekeeping(2015)

- Secretary General's Strategy on New Technologies(2018)<sup>98</sup>,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218-2019)
-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2020.6)
- 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UN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21. 6)
- Leadership Selec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KSENIYA OKSAMYTNA King's College London VINCENZO BOVE University of Warwick AND MAGNUS LUNDGREN Stockholm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2021)
- Who runs the international system? Nationality and leadership in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Paul Novosad · Eric Werker, 2018. 1. 13, <https://doi.org/10.1007/s11558-017-9294-z>

## 단행본

-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통일부, 2021.12
- 윤지소(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2021
- 조판기(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정원기(국토연구원 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완성과제, 2015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제36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의결안건 36-3호, 2021.1.20
-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제36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의결안건 36-3호, 2021.1.20

98)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블록체인, 로봇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의 사용이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 하고 유엔헌장의 가치와 인권선언, 국제법규와 규범을 촉진시키는 것에 대해 유엔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정의하기 위한 내부 전략(출처 : [www.un.org](http://www.un.org))

- 애비게일 하틀리, 유엔지뢰대책기구 정책, 옹호, 공공 정보 책임, 평화국축에 대한 지뢰제거 활동의 기여,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 South Korea's PRT in Afghanistan, John Hemmings, Global Lorea: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Security 2012
- 국방부훈령 제738호/1256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규정, 2003. 8. 1/2010. 7. 2
-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 동향과 시사점, - ODA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중심으로-(2020. 10. 20)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일본의 국제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2020. 12)
- 국회국방위원회,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6. 4. 18
- 2010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0. 12. 31
- 미 육군 교범, ADP3-07 STABILITY 2019. 7
- 국회국방위원회, 국방개혁2.0과 국방운영개혁: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2019.5.27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유치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2012. 11. 21)
-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통일부, 2021.12
- 기획조정실,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2013.7)
- 국회간담회, 국방개혁 2.0과 국방운영개혁: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 문민통제제고, 병력구조 개선, 국방인력운영체제 개선 - 2019. 5.27
- Peacekeeping Capability Readiness System(PCRS), UNDP, DOS, 2019. 1
- UNGA, Identical letters dated 21 August 2000 from the Secretary -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2000. 8. 21
-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1992. 7. 17
- From peacekeeping to peacebuilding: the evolution of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peace operations, 2014
- UNGA,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2020. 7. 30

-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building and development, Jelena smoljian, 2010. 6. 30
- A peacebuilding Len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PPAC BACKGROUND PAPER, 2017. 6
- UNMAS strategic plan 2019–2030(2019)
- The Brhimi Report and the Future of UN Peace Operations, william J. dURCH, Victoria K. Holt Caroline R. Earle, Moria K. Shanahan, 2003
- UNGA, Identical letters dated 17 June 2015 from the Secretary –General addressed to the Prek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2015. 7. 17
- Improving Security of United Nations Peacekeepers 2017. 12. 19
-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building and development, Jelena Smoljan 2010. 6. 3
- Developing peace: the evolution of development goals and activities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XFORD DEVELOPMENT STUDIES 2021, VOL. 49, NO. 3, 201-229, <https://doi.org/10.1080/13600818.2021.1924126>
- Youth, Peace and Security Agenda–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for implementation, FBA 2021. 6. 9
- Peacekeepers under threat? fatality trends in UN peace operations, 2015. 9
- The missing peace, Independent progress study on Youth, Peace and Security, 2018. 4
-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June 2019
- Peacekeepers under threat? Fatality trends in UN PEACE OPERATIONS, SIPRI POLICY BRIEF, 2015

## 웹사이트

- <https://www.zif-brein.org/en/what-peace-operations>, zif(center for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 [https://mnd.go.kr/mbshome/mbs/mnd/subwiew.jsp?id=mnd\\_010901040000](https://mnd.go.kr/mbshome/mbs/mnd/subwiew.jsp?id=mnd_010901040000)  
국방부 국방정책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 [www.resource.un.org](http://www.resource.un.org) United Nations Peacekeeping Resource Hub
-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0703161804071#csi-dx9f20ad8a-040c2c48f69f748a8ee73c8> 유엔총회 ‘반기문 개혁’ 만장일치 승인 (경향신문 2007. 3. 16)
- UN 홈페이지,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 Data Strategy of the Secretary-General for Action by Everyone, Everywhere with insight, Impact and Integrity 2020-2022,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en/content/datastrategy/index.shtml>
- <https://nationalatlas.ngil.go.kr/pages/page-1806.php>, 2018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2019,
-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2> 북한은 세계식량계획(WFP, 41.1%), 유엔아동기금(UNICEF, 37.9.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PF), UNDP, UNOCHA 북하상주사무소 운용 및 지원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00806002500044>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ww.un.org](http://www.un.org) 파병현황
- [www.un.org](http://www.un.org) United Nations Peacekeeping 파병현황
-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은 2021년 이전부터 북한에 지속적 지원 중
- <https://hairo.unikorea.go.kr/stat/StatFrngntySubject.do>  
<https://fts.unocha.org/countries/118/summary/>대북정보지원시스템
- [www.iaptc.org/IAPTC-secretariat](http://www.iaptc.org/IAPTC-secretariat)

-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triangular-partnership-programme-tp> 삼각파트너십
- KOICA 홈페이지 [www.koica.go.kr](http://www.koica.go.kr) 사업전략 및 정책, 분야별 지원현황
-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 [www.koica.kr](http://www.koica.kr),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1/L01_S01_01.jsp)
- <https://blog.naver.com/mogefkorea> UN WOMEN CGE(CNETE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 기능을 수행
- <http://unrecruit.mofa.go.kr/>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introduce.jsp>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
- [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https://www.mnd.go.kr/mbshome/mnd/subview.jsp?id=mnd_01090210000) 국방부 국방정책 세계속의 한국군, 국방부는 PRT부대 방호를 위해 '10.7~'14.6 까지 총 1,745명 파병
- [www.ncds.go.kr](http://www.ncds.go.kr), 지속가능발전 포털
- [www.uia.org](http://www.uia.org) 세계협회연합 홈페이지
- [https://www.youth4peace.info/UNSCR2250/Youth, Peace and Security Introduction](https://www.youth4peace.info/UNSCR2250/Youth,PeaceandSecurityIntroduction)
- <https://peacekeeping.un.org/en/action-for-peacekeeping-a4p>, A4P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gender\\_equality-egalite\\_des\\_genres/elsie\\_initiative-initiative\\_elsie.aspx?lang=eng](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gender_equality-egalite_des_genres/elsie_initiative-initiative_elsie.aspx?lang=eng) CanadaGovernment
- [https://www.mnd.go.kr/mbshome/jcs2/subview.jsp?id=jcs2\\_030102010000](https://www.mnd.go.kr/mbshome/jcs2/subview.jsp?id=jcs2_030102010000)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 현황(21. 12. 1일 기준) 다국적군/국방교류 협력 현황

# UN평화활동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 탐색

A Study of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of UN Peace Operation

증령(진) 김세하  
Kim, Se-Ha



## 요 약

본 연구는 평화활동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차후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리더들의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구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UN 평화활동 상황에 부합하도록 해당 역량들을 재통합하였다. 재통합된 역량은 레바논 임무단(UNIFIL: United Nations Truce Monitoring Forces in Lebanon)에 현재 파병 중인 타국군 장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평화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18개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UN 평화활동에 요구되는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군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in UN Peace Operations, and to serve as a cornerstone to equip the military and diplomatic capabilities of global leaders who will be active on the world stage in the future. To this end, what factors are in the competency of global leadership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 competencies were re-integrated to meet the situation of UN Peace Operations. The re-integrated capabilities were interviewed by UNIFIL(the United Nations Truce Monitoring Forces in Lebanon) with 10 officers currently deployed. Through this, 18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essential for Peace Oper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present basic data and implications for fostering global human resources in the Korean military by presenting the capabilities required for Peace Operations.

# UN평화활동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 탐색

A Study of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of UN Peace Operation

중령(진) 김세하<sup>1)</sup>

Kim, Se-Ha

##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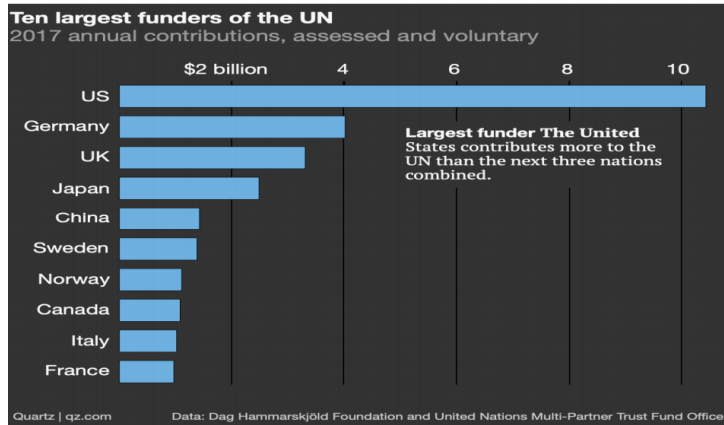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이후 집단안보체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유엔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평화유지”라는 대안을 고안하였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발발한 1차 중동전쟁에 파견된 UNTSO(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가 평화유지의 첫 임무단으로 창설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72년여간 71개의 임무단에 125개국이 100만명 이상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sup>2)</sup>

UN 평화활동은 세계평화를 유지한다는 숭고한 목표를 이루고자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의 수단으로 평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르완다 등의 개발도상국은 평화활동에 가장 많은 병력을 공여하며 외화획득의 재원이자, 국제무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유엔 분담금의 양적 지원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 · 노르웨이 ·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Middle

1) 교육공학 석사(연세대), 국가안보학 박사과정(상명대), (현)UNIFIL사령부 기획장교

2) <https://peacekeeping.un.org/en>(검색일 22. 4. 18.)

Power)들이 최대 분담금 기여국 순위에 올랐다는 것은 유엔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며<sup>3)</sup>, 그들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UN을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들 나름의 국가이익을 위한 보이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림 1〉 유엔 분담금 Top10<sup>4)</sup>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지 약 30여 년이 흘렀다. 1993년 상록수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개 임무단에 누적병력 약 17,0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고, 지금도 531명의 평화유지군이 세계 각지에서 평화활동을 수행 중이다.<sup>5)</sup> 뿐만 아니라 10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 선진국<sup>6)</sup>으로서 당면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다자외교의 양적, 질적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sup>7)</sup>

대한민국은 2019년, 아시아 태평양 PKO센터 연례회의(AAPTC: Association of Asia-Pacific Peacekeeping Training Center)와 유엔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SMLC: Senior Mission Leaders' Course)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거의 병력·재정 위주의

3)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국제기구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13호, 2020, p. 37.  
 4)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국제기구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13호, 2020, p. 37.  
 5) <https://peacekeeping.un.org/en>(검색일 22. 4. 18.)  
 6)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2. 4. 16.).  
 7)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국제기구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13호, 2020, p. 33.

양적 기여에서 기술·인재<sup>8)</sup> 중심의 질적 기여의 방안까지 그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진출한 대한민국 국적의 고위직 인원을 살펴보면, 1999년 10명 수준에서 2019년 38명 수준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유엔사무국 인구대비 자국민 진출 정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 중 0.1%에 불과하지만 유엔사무국 고위직 자리를 4.4%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세계 인구의 0.8%를 차지하지만 유엔사무국에서 고위직 자리는 단지 0.4%만 차지하고 있어 유엔사무국에서 한국은 과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이러한 문제는 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임무단의 군사령관 및 감시단장은 지금까지 5명이 선발되었으며, 한국보다 더 적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중견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을 배출하였다. 평화활동을 관장하는 UN DPO(Department of Peace Operation)에 진출한 한국군 장교(대령~소령)들을 살펴봐도 지금까지 14명<sup>10)</sup>이 전부이다. 유엔 가입 이후 30여 년이 지난 것을 감안 할 때 2년에 1명도 채 선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30여 년간 기여한 병력·재정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 순위  | 국가   | 자리에 대한 지분 | 세계인구에 대한 지분 | 초과 대표성 |
|-----|------|-----------|-------------|--------|
| 1   | 핀란드  | 0.028     | 0.001       | 24.03  |
| 2   | 스웨덴  | 0.044     | 0.002       | 22.15  |
| 3   | 노르웨이 | 0.019     | 0.001       | 19.21  |
| 6   | 덴마크  | 0.014     | 0.001       | 11.80  |
| ... |      |           |             |        |
| 81  | 한국   | 0.004     | 0.008       | 0.45   |

〈표 1〉 유엔사무국 인구 대비 자국민 진출 정도<sup>11)</sup>

8)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검색일 22. 4. 18, 네이버 사전)으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고위직을 의미

9)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국제기구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13호, 2020, p. 27.

10) 국방부 평화협력과 자료확인(기준일 '22. 4. 20)

11) Novosad & Werker(2018, Table 2. Secretariat excess representation, all years)

평화활동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평화활동은 국제기구와 국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다이내믹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파병된 국가의 국기를 어깨에 달고 비공식적인 군사외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높은 직위에 오를수록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는 크게 다르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전 중인 국가로, 전시에 유엔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는 것을 감안 할 때 고위급 인사의 유엔진출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IBM이 최근 1,500명의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복잡성의 증가는 CEO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sup>12)</sup> 글로벌 리더들은 매우 다양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13)</sup> UN 평화활동의 환경 또한 점점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고 있다. 임무의 형태가 과거 전통적인 임무에서 다차원적인 임무로 전환되고 있으며, 평화활동을 하는 주체 또한 군인, 민간직원, 경찰, NGO 등 다양한 국적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개발, 육성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적절한 역량을 갖춘 리더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해 졌지만,<sup>14)</sup> 유능한 글로벌 리더들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sup>15)</sup>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5%가 적절한 수의 글로벌 리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존 리더의 67%는 더 많은 글로벌 능력을 필요로 한다.<sup>16)</sup>

다양한 글로벌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더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는데 적합한 포괄적인 글로벌 리더십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12, 김범성). 리더의 역량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 달리, 글로벌 리더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며,<sup>17)</sup>

12) Berman, S., & Korsten, P. (2010). Capitalizing on complexity: Insights from the global chief executive study. Somers, NY: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13) Carey, C. E., Newman, P. M., & McDonough, L. M.(2004). Global Leadership Capability; An Asia-Pacific Perspective. Performance Improvement, 43(8), 13-18.

14) Suutari, V. (2002). Global leader development: An emerging research agenda.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7(4), 218-233.

15) Adler, N. J., & Bartholomew, S. (1992). Managing globally competent peopl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6(3), 52-65.

16) Gregersen, H. B., Morrison, A., & Black, J. S. (1998). Developing leaders for the global frontier. Sloan Management Review, 40(1), 21-33.

17) 김범성, 글로벌 리더십 역량 모형의 재구성,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 2.

특히, UN 평화활동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평화활동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으로써, 차후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리더들의 군사적, 외교적 역량을 구비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평화활동 상황에 부합하도록 해당 역량들을 재통합하였다. 재통합된 역량은 필자가 실제 파병된('22. 3월 ~ '23. 2월) 레바논 임무단(UNFIL: United Nation Forces in Lebanon)에서 파병 중인 타국군 장교 10명(대령~소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평화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도출하였다.

## II. 본 론

### 1. 글로벌 리더십과 역량

글로벌 리더십은 1990년대 경영학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전략을 채택하고, 기업을 세계시장으로 확장, 경쟁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태동되었다.<sup>18)</sup>

글로벌 리더십이란 특정 상황 하에서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리더십 개념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sup>19)</sup>

글로벌 리더십의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글로벌 리더십의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하고 있다. 주요 학자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정의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18) Mendenhall, M., & J. S. Osland, (2002). An overview of the extant global leadership research. Symposium presentatio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Puerto Rico, June.

19) 신유근, (2005), 한국형 글로벌 리더십, 한국노사관계학회, 제16권 p. 178.

| 학 자                        | 정 의   |
|----------------------------|---|
| Pucik & Saba(1998)         | 국가적·기능적·사업적 영역에서의 협의의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가 글로벌 정보,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균형을 맞추는 태도의 집합 |
| McCall & Hollenbeck (2002) | 리더의 업무에 초점을 둬으로써 글로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의 집합  |
| Maznevski & Lane(2003)     | 리더가 속한 국가의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통해 형성된 개인 및 조직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 능력을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 차동욱 (2007)                 | 글로벌 리더십은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경영자 및 관리자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
| Lokkesmoe (2009)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가 조직목표의 대상의 지리적, 국가적, 경제적, 인종 간, 언어적 영역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
| 송영수 (2010)                 |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개방적 사고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이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사고, 태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

〈표 2〉 글로벌 사회와 리더십<sup>20)</sup>

평화활동은 다양한 국가의 군인,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수행된다. 평화활동을 수행하는 지휘관 또는 부서장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지휘해야 한다. 특히, 국내와 다르게 지휘관에게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평화활동의 환경에서 자발적 복종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지휘환경을 고려하면 지휘관의 글로벌 리더십은 임무성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sup>21)</sup>

역량(Competency)이란 McClelland(1973)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우수한 직무 수행자가 평균적인 직무수행자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식, 기술, 태도, 기타 제 특성을 의미한다.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GLC :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은 개인이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국가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20) 안광현 「글로벌 사회와 리더십」무역경영사, 2020, p. 205.

21) 이호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리더십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 78.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자질로 정의된다.<sup>22)</sup> 오늘날 각 조직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한 역량 모형을 규명하고 이를 선발, 평가 및 보상 등 일반적인 조직의 인사관리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직무교육 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sup>23)</sup> 학자별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역량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평화활동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역량 탐색이 필요하다.

## 2. 글로벌 리더십 역량

평화활동을 배경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경영 환경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을 탐색하려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과 군 환경에서 이미 규명된 리더십 역량을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하여 다양한 역량들을 도출한 후, 도출된 역량들을 가지고 현재 레바논 임무단에 파병 중인 10명의 타국 군 장교(소령~대령)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역량들을 제시하고, 개수에 상관없이 인터뷰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선택하게 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역량들을 최종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였다.

### 가. Jokinen's 역량 모형

Jokinen의 글로벌 리더십 통합모형에 따르면, 먼저 역량의 수준을 행동적 기술과 정서적 특징, 핵심요소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한다. 행동적 기술은 글로벌 리더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행동 능력으로, 사회적 능력과 네트워킹 능력 그리고 지식을 포함한다. 정서적 특성은 인지적 역량과 감정적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낙관성,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판단능력, 공감능력, 국제 환경에서 일하는 동기, 인지능력, 복잡성의 수용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는 다른 특성 개발에 필수요소로 간주되는 항목으로 자기인식력, 개인변화의 수용력, 탐구심을 포함한다.

22) Jokinen, T. (2005).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a review and discussion.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9(2/3), 199-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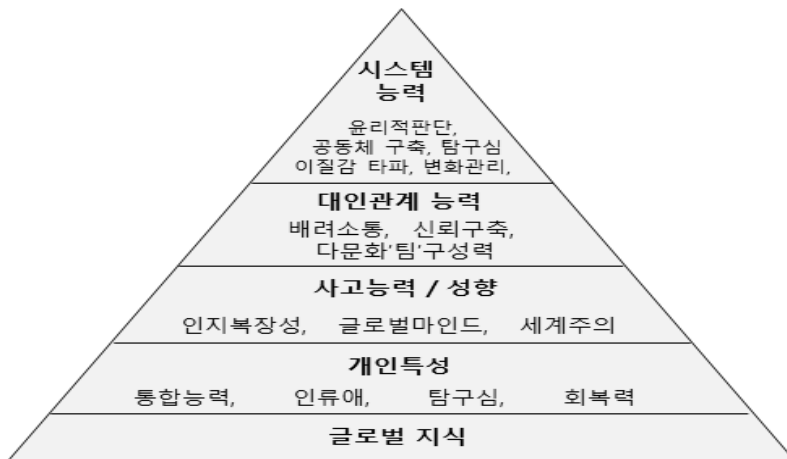
23) 박경선 · 배을규, 보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권 1호, 2012, p. 1.

| 역량의 수준    | 역 량   |
|-----------|---|
| 1. 행동적 기술 | 사회적 능력, 네트워킹 능력, 지식   |
| 2. 정서적 특징 | 낙관성, 자기조절능력, 사회적 판단능력, 공감능력, 국제 환경에서 일하는 동기, 인지능력, 복잡성의 수용력 |
| 3. 필수요소   | 자가인지력, 개인변화의 수용력, 탐구심                                       |

〈표 3〉 Jokinen’s 글로벌 리더십 통합모형<sup>24)</sup>

나. Osland’s 피라미드 역량 모형

피라미드 모형은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다. 이 모형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으로 올라갈수록 글로벌 리더의 지식과 특성에 임계치가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 모형은 개인적 특성(글로벌 지식, 개인특성 및 사고능력/성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시스템 능력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특성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세 개의 층(글로벌지식, 개인특성, 사고능력/성향)을 포함하며 통합능력, 인류애, 탐구심, 회복력, 인지복잡성, 글로벌마인드, 세계주의 등의 역량으로 구성된다. 대인관계 능력은 배려 소통, 신뢰구축, 다문화 팀 구성력을 포함하며, 시스템 기술은 윤리적 판단, 이질감 타파, 변화관리, 공동체 구축, 탐구심 등을 포함한다.



〈표 4〉 Osland’s 피라미드 모형<sup>25)</sup>

24) Jokinen, T. (2005).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a review and discussion,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9(2/3), 199-216; 김범성, 글로벌 리더십 역량 모형의 재구성,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 p. 221. 〈표 1〉 각색

#### 다. 국내 기업환경에서의 글로벌 역량 모형

송영수(2011)는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 영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기업의 임원진과 HRD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총 5개의 역량군과 18개의 세부역량을 도출하였다.

| 역량군               | 세부역량   |
|-------------------|--|
| 1. 글로벌마인드         | 경영환경 변화 이해, 경영환경 변화 예측, 변화대응전략 수립              |
| 2.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 개방적 의견 수용, 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구축, 이문화 이해             |
| 3. 글로벌 네트워크       | 인적네트워크 관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구사 능력, 글로벌 매너 및 에티켓 |
| 4. 성과개선 스킬        | 전략적 목표설정, 지식과 기술의 확보, 글로벌 인재 육성                |
| 5. 기본태도 역량        | 정직성, 도전정신, 창의성, 글로벌 시민의식                       |

<표 5> 기업환경에서의 글로벌 역량<sup>26)</sup>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군은 글로벌 마인드,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글로벌 네트워크, 성과개선 스킬, 기본태도 역량 등 5가지로 구성된다. 글로벌 마인드는 경영환경 변화이해, 변화예측, 변화대응 전략 수립으로 구성된다.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개방적 의견 수용, 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구축, 이문화 이해를 포함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인적네트워크 관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구사능력, 글로벌 매너 및 에티켓을, 성과개선 스킬은 전략적 목표설정과 지식과 기술의 확보,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기본태도 역량은 정직성, 도전정신, 창의성, 글로벌 시민의식을 포함한다.

25) Osland, J. S. (2008). Overview of the global leadership literature. In Mendenhall, M. E., Osland, J. S., Bird, A., Oddou, G. R., & Maznevski, M. L.(2008). Global leadership: Research, practice,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34–63.

26) 송영수. “국내 기업의 글로벌 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7.1, 2011, p. 15. <표 8> 각색

라. 군에서의 전략적 리더십 역량 모형

김영춘, 백유성(2011)은 군에서 전략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4가지 역량군에 12개의 역량들을 도출하였다. 인격 및 품성에는 윤리·도덕성, 진정한 용기·소신, 원칙준수 및 공정성이, 지식 및 역량에는 다양한 지식 및 전문성, 전략적 판단 및 결단력, 전략적 비전 및 목표제시, 전략적 통찰 및 사고력으로 구성된다. 전략적 조직운영은 조직·부하사랑·존중·배려, 의사소통, 자기헌신 및 봉사, 인재양성 및 활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변화관리는 변화와 혁신·도전 주도로 도출되었다.

| 역량군       |          | 구성요인  |
|-----------|----------|---|
| 자질 요소     | 인격 및 품성  | 윤리·도덕성, 진정한 용기·소신, 원칙준수 및 공정성                       |
|           | 지식 및 역량  | 다양한 지식 및 전문성, 전략적 판단·결단력, 전략적 비전·목표제시, 전략적 통찰 및 사고력 |
| 실천 및 행동요소 | 전략적 조직운영 | 조직·부하사랑·존중·배려, 의사소통, 자기헌신 및 봉사, 인재양성 및 활용           |
|           | 변화관리     | 변화와 혁신·도전 주도  |

〈표 6〉 전략적 리더십 구성요인 탐색<sup>27)</sup>

마. 통합된 글로벌 리더십 모형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4개의 역량 모형들을 아래 〈표 7〉과 같이 통합하였다. 각각의 리더십 역량을 통합하면서 지식, 기술, 태도로 분류 기준을 선정한 것은 직무에 주된 영향을 주고, 측정 가능하며,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정의한 Parry(1996)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sup>28)</sup>

27) 김영춘, 백유성, 전략적 리더십 구성요인 탐색 - 군 고급제대를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8권 제3호, 2009, p. 14.

28) 송영수, “국내 기업의 글로벌 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평생교육·HRD연구 7.1, 2011, p. 6.

| 역량<br>구분 | 역량  |   |   |   |
|----------|---|---|---|---|
|          | Jokinen   | Osland  | 송영수   | 김영춘 외   |
| 지식       | · 지식  | · 글로벌 지식<br>· 글로벌 마인드<br>· 세계주의                                       | · 경영환경 변화 이해<br>· 경영환경 변화 예측<br>· 변화대응전략 수립<br>· 전략적 목표 설정  | · 다양한 지식 및 전문성<br>· 전략적 판단 · 결단력<br>· 전략적 비전 · 목표제시<br>· 전략적 통찰 및 사고력               |
| 기술       | · 사회적 능력<br>· 네트워크 능력   | · 공동체 구축<br>· 변화관리<br>· 배려 소통<br>· 다문화 팀 구성력<br>· 통합능력                | · 개방적 의견 수용<br>· 조직문화 구축<br>· 인적네트워크 관리<br>· 글로벌 커뮤니케이션<br>· 외국어 구사 능력<br>· 글로벌 매너 및 에티켓<br>· 지식과 기술의 확보<br>· 글로벌 인재 육성 | · 의사소통<br>· 인재양성 및 활용<br>· 변화와 혁신, 도전 주도  |
| 태도       | · 낙관성<br>· 자기조절능력<br>· 사회적 판단능력<br>· 공감능력<br>· 국제환경에서 일하는 동기<br>· 인지능력<br>· 복잡성의 수용력<br>· 자기인지력<br>· 개인변화의 수용력<br>· 호기심 | · 윤리적 판단<br>· 이질감 타파<br>· 신뢰구축<br>· 인지 복잡성<br>· 인류애<br>· 탐구심<br>· 회복력 | · 다양성 존중<br>· 이문화 이해<br>· 정직성<br>· 도전정신<br>· 창의성<br>· 글로벌 시민의식  | · 윤리 · 도덕성<br>· 진정한 용기 · 소신<br>· 원칙준수 및 공정성<br>· 조직 · 부하사랑 · 존중 · 배려<br>· 자기헌신 및 봉사 |

〈표 7〉 글로벌 리더십 역량 통합 모형

### 3. 연구방법 및 결과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10년 이상의 군생활 경력을 보유한 자

둘째, 24개월 이상의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자  
셋째, 24개월 이상의 글로벌 환경에서 최소 12개월 이상의 평화활동 경험자  
인터뷰를 진행한 10명의 각국의 장교들의 평균 군 경력은 22년, 해외 경험은 42개월, 평화활동 경험은 27개월로 <표 8>과 같다.

| 구 분 | 국 가   | 계 급 | 군 근무 경력 | 해외 경력 | 평화활동 경력 |
|-----|-------|-----|---------|-------|---------|
| 1   | 가나    | 소령  | 약 14년   | 52개월  | 38개월    |
| 2   | 네팔    | 중령  | 약 23년   | 47개월  | 32개월    |
| 3   | 아일랜드  | 소령  | 약 16년   | 34개월  | 34개월    |
| 4   | 인도    | 소령  | 약 13년   | 26개월  | 18개월    |
| 5   | 인도네시아 | 대령  | 약 25년   | 50개월  | 41개월    |
| 6   | 인도네시아 | 중령  | 약 25년   | 28개월  | 21개월    |
| 7   | 이태리   | 대령  | 약 28년   | 52개월  | 24개월    |
| 8   | 이태리   | 대령  | 약 27년   | 42개월  | 19개월    |
| 9   | 중국    | 대령  | 약 22년   | 35개월  | 23개월    |
| 10  | 프랑스   | 중령  | 약 27년   | 50개월  | 15개월    |

<표 8> 인터뷰 대상 집단

본 연구를 위해 2022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약 9일간 10명의 대상자를 직접 대면 인터뷰하였다. 첫 질문은 인터뷰 대상의 국가, 계급, 근무경력, 해외경력, 평화활동 경력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표 7>의 통합 글로벌 역량 모형을 보여주고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 대상이 생각하는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선택하게 했다.

인터뷰 결과, 10명의 대상자 중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포함한 역량을 도출한 결과 18개의 역량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역량은 다음 <표 9>와 같다. 지식의 범주 내에서 6개의 역량이 도출되었다. 이 중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은 모든 인터뷰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평화활동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PKO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글로벌 리더가 수행할 미션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글로벌 지식, 글로벌 마인드, 변화대응전략, 전략적 목표설정, 전략적 통찰 및 사고력이 핵심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기술의 범주 내에서는 4개의 역량이 도출되었으며,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선택하였다. 모든 업무가 영어로 진행되는 UN의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임을 알 수 있다. 이 외 네트워크 능력, 통합능력, 글로벌 매너 및 에티켓이 핵심역량으로 도출되었다.

태도의 범주에서는 8개의 역량이 도출되었는데, 이 중 “다양성 존중”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이어서 “이문화 이해”가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다양한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등을 가진 UN의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UN의 작전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 자기조절능력, 공감능력, 이질감 타파, 신뢰 구축, 회복력, 윤리·도덕성이 핵심역량으로 도출되었다.

\* ( ) : 인터뷰 대상이 해당 역량을 선택한 수

| 역<br>량<br>군 | 역 량                      |                                      |                                      |   |
|-------------|--------------------------|--------------------------------------|--------------------------------------|---|
|             | Jokinen                  | Osland                               | 송영수                                  | 김영춘 외                                   |
| 지식          |                          | · 글로벌 지식(8)<br>· 글로벌 마인드(6)          | · 변화대응전략 수립(6)<br>· 전략적 목표 설정(7)     | · 다양한 지식 및 전문성(10)<br>· 전략적 통찰 및 사고력(8) |
| 기술          | · 네트워크 능력(8)             | · 통합능력(6)                            | · 외국어 구사 능력(10)<br>· 글로벌 매너 및 에티켓(7) |   |
| 태도          | · 자기조절능력(6)<br>· 공감능력(5) | · 이질감 타파(5)<br>· 신뢰구축(7)<br>· 회복력(7) | · 다양성 존중(10)<br>· 이문화 이해(9)          | · 윤리·도덕성(7)                             |

〈표 9〉 연구결과, 도출된 역량 모형

### Ⅲ. 결 론

본 연구는 그동안 소홀했던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고위급 장교들에게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탐색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역량모형과 군에서의 리더십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유지활동에서 요구되는 글로벌리더십 역량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역량은 현재 필자가 임무수행 중('22. 3월 ~ '23년 2월)인 레바논 임무단(UNIFIL : United Nations Inftreme Force in Lebanon)에서 실제 파병되어 근무하고 있는 10명의 타국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평화유지활동에서 요구되는 18개의 글로벌 리더십 핵심역량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평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연구(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과 평화활동이라는 영역 내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역량을 도출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방법에 있다. 평화활동 상황에 부합한 “통합모형<표 7>”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한 기존의 역량 모형 또한 1회성의 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검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평화활동 상황에서 연구된 선행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에 평화활동과 관련된 역량들과 그 상관관계가 다소 빈약할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평화활동과 관련된 역량들을 더욱 다양화하기 위해 인터뷰 및 설문, 델타이 기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함께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5030클럽에 가입한 국가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 동시에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이기도 하다. 4대 강국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인 요인과 북한이라는 주적을 대결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은 국제무대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결과를 낳았지만,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평화활동은 국제무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첫째,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PKO센터가 국방대학교 내 편성되어 있다는 구조적·지리적 이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국방대학교에는 리더십 학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 교수 및 군 위탁생들이 상당수 수학하고 있기 때문에 PKO센터와 협업하여 연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군 또한 교육사 및 사관학교 예하에 리더십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평화활동에서의 글로벌 리더십과 관련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글로벌 리더십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에게도 필수적인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인재관리가 절실하다. 글로벌 리더의 경험적인 요소 즉, 관련 지식, 문화적 경험, 언어능력 등은 핵심역량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UN에서 고위직을 선발할 때 후보자의 경력 사항 중 UN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PKO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인재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군에서도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기 관리 및 경력모델 등을 예규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진급 및 보직 등 실질적인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위직으로까지의 연계된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남기봉 · 신상우, 「군리더십개론」 진영사, 2020.
- 안광현, 「글로벌 사회와 리더십」 무역경영사, 2020.
- 임윤갑, 「국제분쟁과 평화유지」 북코리아, 2021.
- 김동성,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리더십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연구, 2016,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리더십 연구, 2014,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범성, 글로벌 리더십 역량 모형의 재구성,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2012.
- 김영춘, 백유성, 전략적 리더십 구성요인 탐색 -군 고급제대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관리연구 제18권 제3호, 2009.
- 박경선 · 배을규, 보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학교보건 학회지 25권 1호, 2012.
- 손대선, 중견국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리더십 발휘방안 : 고위급 직책 배출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7.
- 신유근, 한국형 글로벌 리더십, 한국노사관계학회, 제16권, 2005.
- 이효미 · 김명소 · 한영석, 글로벌 마인드 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지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Vol. 24, No. 3, 2011.
- Adler, N. J., & Bartholomew, S. (1992). Managing globally competent peopl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6(3), 52-65.
- Berman, S., & Korsten, P. (2010). Capitalizing on complexity: Insights from the global chief executive study. Somers, NY: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 Gregersen, H. B., Morrison, A., & Black, J. S. (1998). Developing leaders for the global frontier. *Sloan Management Review*, 40(1), 21-33.

- Jokinen, T. (2005). Global leadership competencies: a review and discussion.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9(2/3), 199–216.
- Suutari, V. (2002). Global leader development: An emerging research agenda.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7(4), 218–233.



#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구상과 유엔의 위기

Suggested Peacekeeping Operations for Ukraine and the  
Crisis of United Nations

대전대학교 교수 송승종  
Professor Seongjong Song



## 요 약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력침공을 개시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 2조 4항에 명기한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제1의 임무로 표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불법적 야만행위다. 비유하자면, 은행을 무장강도로부터 지켜달라고 경찰서(안보리)를 설치했더니, 이곳에 배치된 경찰이 백주대낮에 은행을 상대로 무장강도 행각을 벌이는 꼴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침략에 대응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 ABSTRACT

On 24 February 2022, Russia launched an arm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under the pretext of ‘special military operation.’ This is tantamount to an illegal, illegitimate and barbaric behavior, which violates a sacrosanct clause of Article 2.4 in the UN Charter, which prohibits the threat 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long with a responsibility and a duty as one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whose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maintain global peace and security. An appropriate analogy would be that while a local community established police station to protect its bank from bank robbery, one of the policemen is seen at a bank committing robbery in broad daylight. Notwithstan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 as well as Security Council are demonstrating a puzzling inaction faced with Russia’s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in flagrant violation of the UN Charter.

#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활동 구상과 유엔의 위기

Suggested Peacekeeping Operations for Ukraine and the Crisis of  
United Nations

대전대학교 교수 송승종<sup>1)</sup>

Professor Seongjong Song

## 1. 서론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력침공을 개시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이 헌장 2조 4항에 명기한 ‘무력사용금지’ 원칙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제1의 임무로 표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불법적 야만행위다. 비유하자면, 은행을 무장강도로부터 지켜달라고 경찰서(안보리)를 설치했더니, 이곳에 배치된 경찰이 백주대낮에 은행을 상대로 무장강도 행각을 벌이는 꼴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불법적 무력침략에 대응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對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상정되었지만, 당사국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기권함에 따라 결의안 통과가 무산되었다.<sup>2)</sup> 안보리 결의

1)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2) “Russia blocks Security Council action on Ukraine,” *UN News*, 26 February 2022.  
<https://news.un.org/en/story/2022/02/1112802>

안이 좌절되자, 유엔은 3월 2일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 러시아 침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개탄, △ 무조건적 철군, △ 러시아 핵무력 태세의 강화 결정을 규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sup>3)</sup> 유엔은 3월 24일 재차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우크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sup>4)</sup>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당시 폴란드는 평화유지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행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들에게는 “스스로의 방어능력이 있어야 함”을 밝히며 ‘무장병력’ 파견을 주장했다.<sup>5)</sup> 그러나 ‘지켜야 할 평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평화유지활동 구상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전쟁을 계기로, 향후 우크라에서 수행될 수 있는 평화유지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오늘날 안보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소극적 행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과연 그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2. 집단안보와 유엔 평화유지활동<sup>6)</sup>

### 가. 집단안보 이론

집단안보의 요체는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one for all, all for one)’란 표현으로 요약된다. 핵심은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어느 일국이 타국에 대한 강요나 영토점령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타국에 대한 공격, 정복, 또는 평화파괴 행위를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demands end to Russian offensive in Ukraine,” *UN News*, 2 March 2022. <https://news.un.org/en/story/2022/03/1113152>

4) “UN General Assembly demands Russia end Ukraine war,” *EURAC T/V*, 25 March 2022.

5) 이본영, “‘더 강하게 나가자’ vs ‘푸틴 자극할라’…나토 동·서 입장차,” 『한겨레』, 2022.3.21.

6) 제2장의 내용은 다음 자료를 요약한 것임. 송승중,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문화사, 2006), pp. 27-138. (제2장-4장)

저지르지 않도록 잠재적 침략국을 자제시키는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집단안보 개념은 매우 간명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부정확하거나 상이한 의미로 사용된다. 일례로 집단안보는 동맹체제 같은 선별적(selective) 안보와 구분된다. 후자의 목적은 특정 동맹체제 외부에서 비롯되는 위협으로부터 동맹국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집단방어(collective defense)는 집단안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전자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의 개념을 내포하는 반면,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더 개방적(open-ended) 공약에 기초한다. 집단방어의 목적은 가상 적(敵)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집단안보의 목적은 폭력적 도전으로부터 현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이다. 요컨대, 집단안보는 사전 결정된(predetermined) 적을 상정하지 않는다.

집단안보는 개념적 혼란뿐 아니라 현실세계 적용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드러냈다. 첫째, 일부 국가들은 피아 구분이 명확할 경우 집단적 제재조치의 참여에 주저한다. 냉전시절 미국이 NATO 동맹국을 처벌하기 위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다. 둘째, 강대국에 관련된 문제로, 설령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이를 응징하기 위한 집단안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집단안보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문제다. 예컨대, 경제제재는 ‘양날의 칼’이어서, 제재 대상국뿐 아니라 제재 시행국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넷째, 집단안보의 전제는 모든 피해국(victims)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정국을 방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스(Ernst B. Haas)는 집단안보의 문제와 유엔과의 관계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다. 그에 의하면 집단안보의 본래 개념은 ‘실패’했다. 즉 여타의 대안보다 이념적·규범적 전제가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universal moral obligations)’에 입각한 집단안보 개념은 한 번도 만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sup>7)</sup>

## 나. 국제연맹의 실패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창시자들은 ‘항구적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았다. 양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해, 기존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응징조치를 허용하는 제도가 자국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역사상 집단안보의

7) Michael Sheehan, *The Balance of Power: History and Theory* (New York: Routledge, 1996), pp. 160–162.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중세시대 말기의 일이다. 일레르 뒤부아(Pierre Dubois)는 신성로마제국에 속한 국가들이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에게 집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집단안보라기보다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집단방어 조약에 가까운 것이었다.<sup>8)</sup> 1610년 프랑스의 설리 대공(Duke of Sully)은 유럽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연합과 함께, 평화강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다국적군 창설을 제안했다.<sup>9)</sup>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한 1815년 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에서 평화유지를 바라는 국가들의 집단적 시도가 처음으로 이뤄짐에 따라, 20세기 국제기구 출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비엔나 체제를 대체한 유럽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는 미래분쟁의 예방보다 영토분할 및 국경선 재조정 등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문제들에 이해관계를 공유한 지역공동체는 현대적 의미의 국제기구 출현의 전제조건이다. 18-19세기 유럽은 유럽협조체제가 정착된 이후 100여년 동안 유례없는 평화를 구가하며 “구(舊)외교(Old Diplomacy)”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구외교의 은밀성과 폐쇄성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따라 “신(新)외교(New Diplomacy)”가 등장하였다. 신 외교는 국제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훗날 국제연맹의 기초가 되었다.<sup>10)</sup>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국가 간 폭력방지를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영국 정부였다. 윌슨 대통령은 1920년 1월 베르사유 회담에서 국제연맹 규약(League of Nations Covenant)의 공식 발의를 주도했다. 연맹규약의 핵심은 집단안보체제다. 연맹규약 제10장은 집단안보 개념, 제11장은 집단안보의 기본원칙, 제16장은 회원국들의 책임·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제16장은 전쟁에 호소하는 행위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집단적 군사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처음부터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첫째, 국제연맹의 창시자는 윌슨 대통령이었으나, 미국은 의회의 비준 거부로 회원국에 가입하지 못했고, 결국 집단안보체제의 신뢰성과 위상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둘째, 연맹규약은 전쟁수행의 권리를 ‘제한’했

8) Joel Larus, *From Collective Security to Preventive Diplomacy* (New York: John Wiley, 1965), pp. 1-5.

9) Ibid, p. 4.

10) Thomas J. Knock,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36-37.

을 뿐, ‘불법화(outlaw)’ 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1928년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Briand Pact)에도 미달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 의사결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중대한 현안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잠재적 적대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는 상호불신으로 인하여 집단안보보다는 자국 국익의 극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섯째, 당시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국제연맹이 일탈국가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해졌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국제연맹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이로써 집단안보 개념의 제도화를 시도했던 국제연맹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국제연맹의 역사는 “집단안보의 원칙을 한껏 고양시키려 노력하였다가, 나중에는 그 적절성을 감소시키려 애썼던 기이한 노력의 혼합”이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어느 일국의 침략행위는 국제 사회 전체의 응징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 국제연합의 탄생

세계질서의 철저한 붕괴는 개선된 형태의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더욱 단호한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헐(Cordell Hull)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은 것은 평화수호의 대가(price)로 국제적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근본적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연합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의 일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참전을 선언하기 4개월 전인 1941년 8월에 영국의 처칠 수상과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에 합의하였다. 처칠은 전후 강력한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희망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를 우려한 루스벨트는 완곡한 표현을 선호했다. 1942년 1월 미국·소련 등 26개 정부가 서명한 「국제연합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처음으로 ‘국제연합’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연합국들은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에 합의했다. 1943년 12월 1일 테헤란 회의에서 모스크바 선언의 원칙이 재확인되었고, 이듬해 8~10월 미국의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담에서 국제연합의 골격이 마련되었다.<sup>12)</sup>

11) Claude Inis, *Pow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p. 153.

12) A. B. Fetherston, *Towards A Theory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 1.

덤바턴 오크스 회담은 훗날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사안들의 기초를 제공했다. 일례로 총회(General Assembly)는 모든 회원국들을 대표하지만, 세계평화 유지의 핵심기구는 전승국들로 구성된 안보리(Security Council)로 명기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강제행동(enforcement action)은 안보리에서만 다루도록 하고,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도록 하였다.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을 공식화한 것이다.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가 열렸다. 참여국들은 효과적 안보체제의 탄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또 필요하다면 집단안보체제가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데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미 얄타 회담에서 5대 강대국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합의되었지만, 거부권 조항(Veto Provision)의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가장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안보리 거부권을 경제제재 같은 강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국한시키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에는 어느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자는 중소국가(the smaller Powers)들의 주장이었다. 호주가 강대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투표에서 찬성 10, 반대 20, 기권 15, 불참 5로 부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안보리 이사국은 11개 국가(즉,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6개)<sup>13)</sup>’이라는 조항이 헌장 23조에 명시되었다. 마지막 논란의 대상은 총회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덤바턴 오크스 선언은 총회-안보리의 역할 구분 및 혼란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일례로, 총회는 논의를 하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며, 행동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안보리 소관이다. 수많은 개정안이 제출·검토 및 논의된 끝에, 총회는 평화와 안전을 포함하여 모든 전세계적 관심사를 논의 및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되, 안보리의 요청이 없는 한, 안보리 고유권한에 속하는 국제분쟁에 관한 토론이나 건의는 할 수 없도록 정리되었다.

#### 라. 초기 집단안보 체제의 실험

유엔은 출범 직후부터 강대국간 대립으로 현장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냉전시대 들어 동서 갈등과 이념적 분열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엔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대결무대로 변모했다. 이는 집단안보에 기초한 유엔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사이에 만장일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

13) 지금은 비상임이사국 숫자가 10개국으로 늘었음.

제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유엔은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 현장 43장은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 MSC)’ 조항에서 강제력 행사의 근거를 제공했으나, 지금까지 MSC는 단 한번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는 초기부터 인도네시아(1942년-1949년), 팔레스타인(1948년-현재), 카슈미르(1947년-현재) 등, 무력충돌이 수반된 일련의 사례에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유엔은 스스로의 역할을 강제수단 이행보다는 적대행위 종식에 국한시켰다. 초창기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의 해석, 준수 및 실천을 분쟁 당사자들에게 맡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경험했지만, 분쟁 현장에 파견한 ‘옵서버 집단’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초 ‘인도네시아 영사위원회’로 시작된 유엔 평화감시기구는 한결 업그레이드된 ‘팔레스타인 감시단’으로 발전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전 초기단계에서 유엔은 현장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안보에 대한 새로운 운용적 개념(operational concept)을 시도했다. 일례로 1950년 11월 3일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UfP)”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의 목적은 안보리가 거부권 행사로 교착상태(deadlocked)에 빠지는 경우, 24시간 내에 긴급총회 결의로 안보리의 거부권을 우회하는 것이다. 긴급총회는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7개국 이상 또는 회원국 과반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된다. 이 결의안은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침략자(aggressor)를 지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침략자 응징을 위한 제재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유엔 현장은 언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안보리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안보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제재조치에 동참할 법적의무가 없다. UfP는 현장 규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각국이 총회 권고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재해석(reinterpret)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총회의 결의를 수용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UfP는 “평화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권한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부터 평화강제를 위한 느슨한 협조계획으로의 복귀를 나타내는 분수령(watershed)”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sup>14)</sup>

“거의 완벽한 집단안보의 모범”이 적용된 역사상 최초 사례<sup>15)</sup>로 평가되고 있는

14) Julius Stone, *Legal Control of International Conflicts* (New York: Rinehart & Co., 1959), p. 266.

15) Clark M. Ekelberger, *UN: The First Fifteen Years* (New York: Harper, 1960), p. 20.

한국전쟁은 역설적으로, 집단적 강제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촉진하기보다는 회원국들이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부추겼다. 집단안보에 대한 열정의 감소는 회원국들이 군대공여를 요청하는 UfP 권고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잘 드러난다. 한국전쟁 참전을 둘러싸고 유엔과 회원국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부담은 강제조치에 대한 동참 의지를 위축시키는데 기여했다. 대부분 회원국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전투부대 파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도주의 지원을 선호했다. 한국전쟁처럼 침략자가 명백한 분쟁에서 회원국들이 군사개입을 주저한 모습은 집단안보의 전제에 근본적 결함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즉, 자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쟁에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집단안보체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 유엔은 한국전쟁 직후 베트남, 과테말라, 헝가리 등에서 벌어진 일련의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무기력한 유엔의 모습이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전쟁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의 존재 의미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마. 유엔 헌장과 유엔 평화유지활동

침략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제행동을 이행하기 군사력의 효과적 투사능력은 국제연합(유엔)을 실패한 국제연맹과 구분 짓는 핵심 요소다. 냉전시기에는 이러한 군사적 강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이 동의 또는 묵인할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국제기구가 평화수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평화유지활동은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국제평화와 안보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1950년 중반 이래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본격화되었고, 1988년에는 노벨상이 시작된 지 87년만에 군사조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노벨상을 받았다.

‘평화유지(peacekeeping)’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56년 수에즈 운하 사태를 계기로 UNEF-I이 설치되었을 때의 일이다. 1965년 유엔 총회가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를 설치하면서, ‘평화유지’가 공식 용어로 자리잡았다. 이는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의 일종으로, 적대행위 예방 또는 종식을 위한 국제적 도구로서 각국의 파견부대(military contingents)를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평화유지’라는 개념은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명확한 정의의 부재(不在)는 역설적으로 이 용어에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flexibility)’을 부여한다. 반면, 이것이 느슨한 의미로 사용되고 모호하게 이해되는 것은 분명한 단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학자들은 평화유지활동을 협의의 기능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일례로 셰리(G. Sherry)는 이를 “통제된 교착상태(controlled impasse)”로 정의했다. 대부분의 분쟁이 “객관적으로 해결불가(objectively insoluble)”하여 영구히 “통제된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런 분쟁은 장기적 관점에서 역사적 환경이 변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6)</sup> 또 어떤 학자들은 평화유지활동을 “적극적 외교를 위해 시간을 버는 중간단계(interim step),” 또는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ceasefire)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신뢰구축수단,” “분쟁을 예방 또는 저지(forestall)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등으로 정의했다. 요컨대, 상기의 기능적 개념들은 장기간의 분쟁을 초래한 뿌리깊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을 도외시하고 현상유지(status quo)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유지활동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또 첨예한 분쟁과 갈등의 해결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은 군인·군부대가 참여하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런 면에서 ‘강제행위(enforcement actions)’와 구별된다. PKO 관련 논의는 용어에 대한 공통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복잡해지며, 이는 PKO의 실패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엔 헌장의 111개 조항(articles) 어디에도 PKO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유엔이 용어의 정의를 적극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유엔 헌장의 조항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태생적 한계’뿐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와 중립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의미의 ‘정직한 중재자’로 역할이 확대되고, 오늘날에는 범치질서 회복, 인도주의 구호, 정부조직의 기능 회복 등 광범위한 국가건설에 관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PKO가 진화과정에 있음을 유엔이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요컨대, PKO가 현장의 구조적 결함과 집단안보체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임기응변적(improvised)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때, 이는 정적인(static) 개념이 아니라 국제정치 역학관계와 분쟁양상 변화를 반영하는 역동적(dynamic)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16) Fetherston, 1994, p. 125.

### 3. 대(對)우크라 평화유지활동(PKO) 구상

#### 가. 러시아 침략전쟁 이전에 제시된 PKO 방안들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자행하기 전인 2017년~2018년 여러 외국과 비국가 행위자들은 우크라 동부지역(돈바스) 분쟁에 평화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일례로 2017년 9월, 러시아는 자국이 통제하는 영토와 ‘드네프르공화국/루한스크공화국(DPR/LPR)’이 통제하는 영토를 분리하는 최전선을 따라 유엔군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다. DPR/LPR은 우크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동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전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 동부에 평화유지군을 설치하는 ‘우크라 구상(Ukraine Initiative): UI’ 제목의 포괄적인 방안을 제출했다. UI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기존에 돈바스에서 수행하던 임무도 어떤 면에서는 PKO로 볼 수 있으나, 명확한 정치적 목표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라스무센은 UI가 모든 분쟁 당사자(러시아, 키이우,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 등)들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주요 강대국의 이익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스크바 제안이나 UI는 수용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 명백한 이유는 키이우-모스크바, 워싱턴-모스크바 간의 상호 불신 때문이지만, 더 깊은 이유도 있다.

일례로 ‘성숙이론(ripeness theory)’에 따르면, “당사자는 갈등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갈등을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이 차단되고 당사자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곤경에 빠졌다고 느낄 때”이다. 것처럼 ‘성숙된 순간’에 당사자들은 탈출구를 제공하는 제안을 모색하거나 수용한다. 성숙이론을 우크라 위기에 적용하면 상기 2건의 PKO 구상은 모두 잘못된 시기에 제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우크라나 동부의 분쟁은 고강도 단계, 즉 PKO가 침략을 멈추고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아마도 더 큰 문제는 모스크바와 키이우(서방의 지원을 받는)가 PKO 개입을 분쟁에서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우크라-러시아는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 PKF) 배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를 보였다. 모스크바는 DPR/LPR과 우크라가 통제하는 영토 사이의 경계 지점에 PKF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 속셈은 현상태를 동결(freeze the status quo)하고, 키이우의 군사적 복수를 불가능하게 하며, 모스크바가 도네츠크의 분리주의자

들을 지원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PKF에 대한 키이우의 입장은 분명한 “레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우크라 정부에 의하면 PKF는 우크라-러시아 사이의 국경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모스크바의 지원에서으로부터 분리주의자를 차단하고, 키이우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키이우의 당면 목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DPR/LPR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당시 전문가 추정예에 의하면,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DPR/LPR 군대는 우크라군의 공세에 기껏해야 닷새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PKF가 우크라-러시아 국경에 배치된다면 이는 돈바스 지역의 대리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을 의미한다. 이는 크렘린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방안이다.<sup>17)</sup>

#### 나. 폴란드의 PKF 배치 구상

다음으로 제기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개시할 무렵에 폴란드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PKF 배치 구상이다. 세부사항은 지금까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핵심은 △ 규모는 최대 1만명으로 제한하고, △ 유엔이 아닌 NATO 회원국 중심으로 구성하고, △ 러시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우크라 지역에만 배치하며, △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및 통행의 안전 보장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것이다. 동 구상은 폴란드 총리/부총리, 체코와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직후 언론에 공개되었다.<sup>18)</sup>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주요 국가는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다.<sup>19)</sup> 그 전에 리투아니아와 덴마크는 이런 임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폴란드 제안에 대하여 “우크라에 미군 파병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NATO는 전에도 PKF를 우크라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부했다.<sup>20)</sup> 가장 큰 장애물은 러시아

17) Tetyana Malyarenko, “Why a UN Peacekeeping Mission in Ukraine Is Doomed to Fail,” *ISPI*, 10 November 2021. <https://www.ispionline.it/it/publicazione/why-un-peacekeeping-mission-ukraine-doomed-fail-32116>

18) Alya Shandra, “A Secret Plan to Deploy NATO Peacekeepers to Ukraine Is Brewing in Poland,” *Euromaidan Press*, 22 March 2022. <https://euromaidanpress.com/2022/03/22/a-secret-plan-to-deploy-nato-peacekeepers-to-ukraine-is-brewing-in-poland/>

19) “Polish, Czech and Slovenian Leaders Show Support to Ukraine During Kyiv Trip,” *DW News*, 15 March 2022.

20) Jan Gerber, “A Proposed NATO Peacekeeping Mission to Ukraine Could Deepen the Conflict,” *Defense One*, 24 March 2022.

가 NATO 회원국 군대로 편성된 PKF의 우크라 배치를 ‘독립적 다국적군’으로 간주하여 러시아에 대한 고의적 도발이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크렘린궁은 그런 활동이 “매우 무모하고 극히 위험할(very reckless and extremely dangerous)”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폴란드가 구상한 PKF 배치 방안은 처음부터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수면 밑으로 내려간 모양새가 되었다.

#### 다. 달라진 가정과 우발계획 수립(Contingency Planning)의 필요성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탈과 돈바스에서의 위기사태 이후 우크라에서 PKO를 수행하는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OSCE는 크림반도 점령 초기에 우크라에서 특별감시임무(Special Monitoring Mission: SMM)를 시작했다. 비무장 민간 임무였던 SMM에는 최대 1,400명의 국제기구 인원 및 현지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전투상황에 대한 공정한 보고로 확고한 명성을 얻었다. 한편, 푸틴이 2017년 우크라에 유엔 임무단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키이우와 서방국들을 잠시 흥분시켰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유엔 PKO 미션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대화했다. 후자는 2만명 이상의 군인·경찰로 구성된 PKF를 DPR/LPR 지역에 배치하여 이들과 우크라의 재통합(reintegration)을 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모든 노력은 유용하면서도 헛된 것이었다. 당시에 미국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총론에서 동의하기는 쉽지만 각론에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러시아가 실제 어느 수준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7년 전후의 시점에서는 상기 개념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직·간접적 임무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현재 시점에서 NATO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NATO 스스로가 인정한다. 따라서 이제 우크라 PKO 구상의 출발점이 전혀 달라진 것이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은 돈바스를 훨씬 넘어서까지 확산되었는데, 이는 전쟁의 진행 상황과 주요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상황에 따라 PKO 임무의 활동지역이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적어도 지금 당장은 임무 성공을 위해 러시아와 외부 행위자 간의 협력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의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크라에서 수행될 수 있는 PKO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우발계획의 수립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크라-러시아 간 협상타결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예컨

대 적대행위 중단 및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감시(monitoring)·검증·촉진, 양측 군대 철수, 정치적 화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개 휴전·평화협정에는 일시적 적대행위 중단보다 더 강력한 검증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휴전·종전 조건들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휴전·종전의 신뢰성을 우려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일례로 러시아는 병력·장비·물자의 재보급 및 교대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속셈으로만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합의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재해석 등의 수법으로 전투재개 명분을 축적한 다음, 더욱 강력한 공세를 재개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론상으로는 유엔, OSCE, EU 옵서버들이 남부 레바논과 조지아 등의 최전방에서 다양한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우크라이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종전·휴전이 이뤄진다면, 외부 행위자들이 모든 전선에서 다양한 대규모 PKO 미션을 수립 및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레바논과 조지아 등에서의 감시임무를 우크라이나에서 시행한다면 반드시 대규모 병력이 요구되지 않고, 경무장·소수의 PKF에 의한 전방 관측소 유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유엔은 이스라엘~시리아 사이 골란고원(분쟁지역 길이는 65km)에 약 1천 명의 PKF를 배치하고 있다. 한편, 헤르손에서 마리우폴까지 이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남부전선(southern front)”만 4백km가 넘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는 골란고원 같은 형태의 PKO를 적용시키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적용될 수 있는 PKO 임무는 광활한 지역에 경무장 관찰단을 전개하여, 무력충돌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신속히 조사 및 보고하고, 관련 메시지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현지 사령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개되었던 SMM이 학습한 교훈에 의하면, 드론 사용을 통해 옵서버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지역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엔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미션에서 유사한 기술을 시험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 어떻게 앞서 언급된 경무장·소수의 PKF 요원들을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을까? 한가지 방안은 OSCE의 기존 SMM을 대기상태(hold on standby)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아니면 양국 모두가 휴전감시를 위해 군인·민간인으로 구성된 옵서버 미션을 원할 수도 있다. OSCE는 제한적 군사임무 수행에도 적합하지 않다. 반면, 유엔은 1940년대 후반부터 군사 옵서버 임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종종 느리다는 비판을 받지

만, 유엔은 유사시 매우 신속하게 경무장 임무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일례로, 2012년 유엔은 불과 6주 만에 3백명의 군 옵서버와 1백명 이상의 민간요원들을 시리아 전역에 배치했다. 이는 일단 유사시 유엔이 우크라 전역에 신속하게 해당 인원들을 배치 및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크라-러시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국의 장교단을 식별 및 확보하는 것이다. 우크라는 NATO 회원국을 선호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비동맹국이나 구소련 연방국들을 선호할 것이다. 잠재적 후보로는 오랜 세월을 걸쳐 UN PKO 경험을 축적해 온 남미국가, 또는 NATO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했지만 우크라 사태에서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UAE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유엔 회원국조차도 PKO 요원들이 위협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다. 또 다른 유력한 대안은 OSCE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크라-러시아가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우크라-러시아 장교들로 구성된 ‘혼성위원회(mixed commission)’를 설치하고, 양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제3국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정전과 전투행위 중단 등의 이슈를 관장하는 방안에 우크라-러시아가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방안의 장점은 다자적 방식의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동시에, 소수의 외국인 군사인원들만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상기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또 언제 우크라에서 적대행위 중단이 가능한지를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는 동안 관련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은 SMM의 대기상태 유지, 군 옵서버 미션의 창설에 필요한 계획 수립, 참여 가능국들의 식별 및 협조 등을 조용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PKO 미션이 되건 간에 관련국들의 국방·군사당국은 우크라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유엔 옵서버 미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원들에 대한 소집명부(rosters)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1)</sup>

21) Richard Gowen, "A Tentative First Look at Options for Peace Operations in Ukraine," *ReliefWeb*, 24 March 2022, <https://reliefweb.int/report/ukraine/tentative-first-look-options-peace-operations-ukraine?msclkid=82cd2a922ce671ec97853e90b0937241>

#### 4. 결론: 우크라 전쟁과 유엔의 위기

유엔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침략과 대량학살을 막지 못하고, 위기해결을 위한 중재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벌인지 사흘만에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3월 2일이 되어서야 유엔 총회가 제11차 긴급총회를 열어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ES-11/1)을 통과시켰다. 193개 회원국이 참석해 141개국 찬성, 35개국 기권,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5개국이 반대했다. 3월 24일 긴급총회는 러시아 철군과 우크라의 주권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ES-11/2)을 14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4월 7일 긴급총회는 러시아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축출하는 결의안(ES-11/3)을 9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5월 6일에는 안보리가 “우크라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깊이 우려”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sup>22)</sup> 이는 안보리가 러시아의 침략전쟁 이후에 최초로 내놓은 문서다. 그러나 성명서는 ‘침략’이나 ‘전쟁’ 대신에 ‘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러시아군이 부차(Bucha) 등에서 벌인 전쟁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맹탕(watered-down)’ 수준의 성명서밖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거부권 문제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의 소극적인 행보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월 23일 안보리 회의에서 주유엔 러시아 대사 바로 옆에 앉아있던 그는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일축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시인했다. 사실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유럽국 관리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2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 국경 일대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혼련을 “거대한 블러핑(enormous bluffing)”으로 생각한 구테흐스는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아마 그 시점이 유엔의 외교적 개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호기를 놓친

2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Expresses Strong Support for Efforts by Secretary-General in Seeking Peaceful Solution to Ukraine Conflict,” SC/14884, 6 May 2022. <https://www.un.org/press/en/2022/sc14884.doc.htm>

다음부터 유엔은 빠르게 전개되는 위기사태의 ‘따라잡기(catch-up)’에 허둥대는 모습이다. 급기야 4월 15일, 2백명 이상의 전직 유엔관리들이 사무총장의 미온적 행보를 질타하며,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면서, 임시로 사무총장 집무실을 유럽에 옮기라고 제안했다. 동 서한은 우크라 사태에서 “유엔의 존재이유”가 위협받고 있으며, 다시금 유엔이 “국제연맹의 운명”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sup>23)</sup>

우크라 위기사태로 안보리와 유엔이 ‘기능부전(dysfunction)’을 넘어 ‘중대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미온적 대응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우크라전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푸틴을 만났으나, 크렘린궁은 “우크라가 돈바스를 내놓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결국 구테흐스는 길이 5m의 초대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푸틴의 일방적 설교를 듣는 모양새가 되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1946년 이후 총 295회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러시아가 143회로 단연 선두다. 그 다음으로 미국(86회), 영국(30회), 중국과 프랑스(18회) 순이다. 상기 맥락에서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국제평화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sup>24)</sup>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위 P5(5대 상임이사국) 내에서 1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회원국의 이해와 상충하는 경우, 안보리가 기능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안보리 개혁을 주장한다. 그 핵심은 P5의 거부권 행사에 대항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례로 리히텐슈타인이 주도하고 미국·영국을 비롯한 83개국이 공동 발의한 유엔 총회 결의안의 골자는 최소한 회원국의 2/3와 세계 인구의 2/3를 대표하는 다수가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할 수 있는 조항을 유엔 헌장 27조에 추가하자는 것이다.<sup>25)</sup> 결의안은 이를 가리켜 “안보리 무대응(inaction)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5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침략전쟁을 일으

23) Colum Lynch, “The Reluctant Peacemaker,” *Foreign Policy*, 28 April 2022.

24) Kemal Derviş and José Antonio Ocampo, “Global Governance: Balancing Power And Equitable Representation,” in Brahima S. Coulibaly Kemal Derviş (eds), *Essays on A 21st Century Multilateralism That Works For All* (Washington, DC: Brookings, 2022), pp. 20–28.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2/02/21st-Century-Multilateralism.pdf>

2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General Assembly Adopts Landmark Resolution Aimed at Holding Five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Accountable for Use of Veto,” *GA/12417*, 26 April 2022. <https://www.un.org/press/en/2022/ga12417.doc.htm>

킨 러시아가 ‘셀프 거부권’을 ‘셀프 면죄부’로 악용하여 유엔을 식물기구로 만든다는 비판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집단적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결의안에 의하면,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10 근무일(working days) 이내에 총회를 열고, 해당 상임이사국 대표가 첫 발언자로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토론을 벌일 수 있다. 결의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지만 총회에서의 논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거부권 행사가 어렵도록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의안은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상기 결의안은 북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는 안보리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총회가 소집될 것이고, 그때마다 총회에서 해당 사안이 공론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러는 지금보다 한층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방안은 안보리의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운용적 방식면에서의 개선책 정도로 보이며, 새로운 체제가 얼마나 P5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장기적 과제다. 모든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종전협정·휴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등의 형태로 막을 내린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는 유엔 차원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선정(善政, good governance)이라는 유엔 공공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벌이기 전에 중재에 나섰던 행위자들은 터키, 프랑스,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의 존재감이 실종되었다. 1961년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가 발생하자 새로 임명된 우탄트(U Thant) 사무총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미국-소련 갈등의 중재 및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1991년 걸프전이 준비되는 와중에도 케야르(Javier Pérez de Cuéllar) 사무총장은 미국에게 이라크와 협상하도록 설득했다. 전문가들은 구테흐스의 정치적 위상이 유능한 중재자로서의 수완을 발휘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이나 케야르 같은 전임자들에 현저히 미달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구테흐스가 “오늘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탄식하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sup>26)</sup> 우크라와 더불어 유엔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6) UN Secretary General, “Secretary-General’s Remarks at Press Encounter Following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on Ukraine,” 23 February 2022.  
<https://www.un.org/sg/en/content/sg/press-encounter/2022-02-23/secretary-general%E2%80%99s-remarks-press-encounter-following-the-security-council-meeting-ukraine>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은 우크라이나와 유엔 모두의 목숨과 존재이유를 위태롭게 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과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변모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Derviş, Kemal and José Antonio Ocampo. 2022. “Global Governance: Balancing Power And Equitable Representation,” in Brahima S. Coulibaly Kemal Derviş(eds), *Essays on A 21st Century Multilateralism That Works For All*, Washington, DC: Brookings.
- Ekheberger, Clark M. 1960. *UN: The First Fifteen Years*, New York: Harper, 1960.
- Fetherston, A. B. 1994. *Towards A Theory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 Gerber, Jan. 2022. “A Proposed NATO Peacekeeping Mission to Ukraine Could Deepen the Conflict,” *Defense One*, 24 March.
- Gowan, Richard. 2022. “A Tentative First Look at Options for Peace Operations in Ukraine,” *Relief Web*, 24 March.
- Inis, Claude. 1962. *Pow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 Knock, Thomas J. 1992.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rus, Joel. 1965. *From Collective Security to Preventive Diplomacy*, New York: John Wiley.
- Lynch, Colum. 2022. “The Reluctant Peacemaker,” *Foreign Policy*, 28 April.
- Malyarenko, Tetyana. 2021. “Why a UN Peacekeeping Mission in Ukraine Is Doomed to Fail,” *ISPI*, 10 November.
- Shandra, Alya. 2022. “A Secret Plan to Deploy NATO Peacekeepers to Ukraine Is Brewing in Poland,” *Euromidan Press*, 22 March.
- Sheehan, Michael. 1996. *The Balance of Power: History and Theory*, New York: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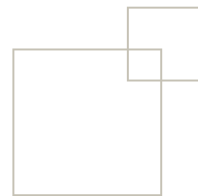
- Stone, Julius. 1959. *Legal Control of International Conflicts*, New York: Rinehart & Co.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22. “General Assembly Adopts Landmark Resolution Aimed at Holding Five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s Accountable for Use of Veto,” *GA/12417*, 26 April.
-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2022. “Secretary-General’s Remarks at Press Encounter Following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on Ukraine,” 23 February.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22.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Expresses Strong Support for Efforts by Secretary-General in Seeking Peaceful Solution to Ukraine Conflict,” *SC/14884*, 6 May.
- 송승중. 2006.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문화사.
- 이본영. 2022. ‘더 강하게 나가자’ vs ‘푸틴 자극할라’...나토 동·서 입장차, 「한겨레」, 3월 21일.

#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

UNIFIL Mandate Implementation and Its Dilemma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문진혁  
Moon, Jinhyeok





## 요 약

UNIFIL은 1978년 설립 이후 약 44년이 경과하였다. 그 과정에 4차례의 이스라엘 침공과 2006년에 위임명령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00년 남부 레바논으로부터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블루라인 (Blue Line)’이라는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이 글은 레바논-이스라엘 분쟁을 중심으로 UNIFIL 임무단과 블루라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직면한 딜레마를 다루고자 한다.

## ABSTRACT

It is 44 years since UNIFIL establishment in 1978. And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on the mandate in 2006 due to the 4 Israeli invasions over the period. UNIFIL set the Blue Line to confirm the withdrawal of the Israeli forces from South Lebanon in 2000. This paper will explore the history of UNIFIL and the disputed areas near the Blue Line. On top of that, it will deal with the UNIFIL mandate implementation and its dilemma faced.

#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

UNIFIL Mandate Implementation and Its Dilemma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문진혁

Moon, Jinhyeok<sup>1)</sup>

## 1. 서론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고착화되고 경계선 블루라인(Blue Line) 인근에서 로켓발사와 포격 등 교전은 지속되는 가운데 위태로운 평화는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학자들은 PKO 임무단 단위의 효율성을 규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전(intra-state conflicts)을 배경으로 다차원 평화유지활동을(multi-dimensional PKO)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딜(Paul F. Diehl)은 PKO 활동이 분쟁 당사국에서 무력분쟁을 중단시키고 분쟁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1993년 이전에 시행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나미비아 임무단(UNTAG)의 활동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레바논 임무단(UNIFIL)의 활동은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sup>2)</sup> 반면 바달라이(A.K. Bardalal)는 UNIFIL의 목적은 ‘분쟁 종결’이 아니라 ‘분쟁 재발 방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레바논의 지정

1) 레바논 국방무관 역임, 국방대학교 PKO센터 교수

2) Paul F. Diehl, *International Peacekeeping: Perspective on Security*(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3), p.167; 양철호,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군사』 101호 (2016), pp.85-86에서 재인용.

학적 환경과 하위 국가행위자<sup>3)</sup>의 영향을 고려하였다.<sup>4)</sup>

이 글은 레바논-이스라엘 분쟁을 중심으로 UNIFIL임무단과 블루라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위임명령에 변화가 있었던 2006년 이후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살펴보고, 결론에서 UNIFIL 소속으로 임무수행 중인 동명부대의 발전방향에 대한 필자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UNIFIL과 블루라인

### 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UNIFIL

1978년 설립된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임무단 배경은 1964년 설립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이하 PLO)와 1차 중동전쟁(1948년) 및 3차 중동전쟁(1967년)과 연관이 있다. 1, 3차 중동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의 패배로 약 30만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70년 초까지 레바논으로 이동하였으며, 베이루트에는 PLO 본부가 설립되고 남부 레바논은 PLO 조직원의 무장활동 거점이 되었다. 한편 시리아는 레바논 내전(1975~1989년)에서 형제국임을 자처하고 약 3만명의 군대를 레바논에 파병 및 내전에 개입하여, PLO와 연대함으로써 레바논 기독교 세력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8년 3월, PLO 조직원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한공격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7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이 이스라엘 1차 침공의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티르를 제외한 남부 레바논을 1주일(3.14~21) 만에 점령하였으나 PLO 축출은 결국 실패하였다. 이스라엘의 철수와 함께 유엔은 UNIFIL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안보리결의안(425/426) 위임명령<sup>5)</sup>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이 시작되었다.

3) 국제정치에서 국가행위자(State Actor)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구분한다. 하위 국가 행위자(Sub-state Actor)는 국가와 연계된 비국가행위자에 속하나 특별하게 구체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4) A.K. Bardalaj,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Delhi: Pentagon Press, 2021), p.203.

5) 위임명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 Confirm the withdrawal of Israeli forces from southern Lebanon, ii)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ii) Assist the Government of Lebanon in ensuring the return of its effective authority in the area.

1982년 6월, PLO가 영국 런던 주재 이스라엘 대사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이후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지역에서는 PLO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2차 침공(작전명 ‘갈릴리의 평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PLO를 소탕하기 위해 본부가 위치한 서부 베이루트까지 공격하였는데, 1982년 8월 미국이 중재하면서 PLO는 결국 베이루트 본부를 철수하였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으로 철수하였으나 자체 조직한 민병대 ‘남부레바논군’(South Lebanon Army, 이하 SLA)<sup>6)</sup>을 전면에 내세웠다. SLA가 1982년 팔레스타인 난민촌 ‘사브라 샤틀라’ 대학살<sup>7)</sup>을 주도했던 레바논 기독교 정당의 민병대를 지원하자 팔레스타인 대학살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군은 SLA가 경계를 제공하는 검문소 내부의 ‘안전지대(Security Zone)’에 주둔하면서 2000년까지 남부 레바논에서 활동하였다.

이스라엘의 점령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5년 티르 인근에서 헤즈볼라 고위관리가 암살되고, 로켓을 이용한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38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1996년 이스라엘의 3차 침공(작전명 ‘분노의 포도’)의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레바논 민간인과 사회기반시설 피해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역시 사상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철수 여론이 대두되었다. 때마침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에훗 바락’이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되자 2000년 5월 이스라엘군과 SLA는 레바논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였는데, 뒤에서 설명하게 될 블루라인 설정의 배경이 된다.

1980년 초 활동을 시작한 헤즈볼라는 초기에 레바논 내 다국적군 미국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대규모 테러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7월 국경지역 자릿(Zarit) 마을을 순찰 중이던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결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납치된 사건이 발생하였다.<sup>8)</sup>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4차 침공의 계기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대한 보복공격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공습, 항공 및 해상 봉쇄, 지상 침공과 함께 약 9,500여 회 폭격을 실시한 결과, 34일간 전쟁에서 레바논 민간인 사망 1,200여 명 및 부

6) 기독교 무장단체로부터 분리된 민병대, 1980.5월부터 SLA로 명칭을 사용하면서 2000년까지 남부레바논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7) 1982년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레바논 기독교 정당(Kaetab)은 사브라 및 샤틀라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과 시아파 민간인을 대상으로 최소 460명~최대 3,500명을 학살하였다.

8) 이스라엘 구조 작전에서 이스라엘군 5명이 추가로 사망하였다.

상 4,000여 명과 약 10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이스라엘의 4차 침공이 종료되면서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1701)에서 UNIFIL 병력상한선을 15,000명으로 대폭 조정하고, 임무단 역할을 강화하였는데 (1) 적대 행위 중지 감시, (2) 이스라엘이 철수한 지역에 레바논군의 전개 지원, (3) 책임지역에서 레바논 정부군과 UNIFIL 이외에 인원, 장비 및 무기 등의 무장해제를 위한 레바논군 지원, (4) 국경 및 출입국 지점 안전에 대한 레바논 정부 지원(요청 시), (5) 피난민의 귀환과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활동 지원, (6) 민간인 보호 등을 포함하였다.<sup>9)</sup>

### 나. 블루라인과 영토분쟁

이스라엘은 2000년 5월 자국 결정에 의해 레바논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계선이 블루라인이다. 이 과정에서 UNIFIL은 1923년 영국과 프랑스의 시리아-팔레스타인 간 위임통치 경계협정<sup>10)</sup>과 1차 중동전쟁 이후 1949년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정전협정(Armistice Demarcation Line: ADL)에 근거한 조사를 바탕으로 120km에 걸쳐 198개 좌표를 결정하였으며, 2000년 6월, UNIFIL 조사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하자, 당사국들은 국경선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설정된 경계선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엔은 블루라인은 국경이 아니고 앞으로 당사국 간 국경선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으며,<sup>11)</sup> 자체 의사소통을 위해 이 경계선을 블루라인으로 명명하였다.

쉐바농장은 <그림 1>과 같이 골란고원의 일부로서 블루라인 우측에 위치하는데,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이다. 또한 골란고원은 UNDOF(UN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임무단 책임지역이기 때문에, UNIFIL은 쉐바농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UNDOF와 협조하고 있다. 한편 레바논 정부는 쉐바농장 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자국민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유엔이 설정한 블루라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의 점령을 저항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블루라인을 기준으로 쉐바농장은 시리아 영토이나, 과거 레바논에 속했던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RES/1701(11 August 2006).

10)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년), 산레모 협정(1920) 및 영국과 프랑스의 Anglo-French 협정(1923) 등이 블루라인 설정의 역사적 배경 및 근거 자료가 되었다.

11) <https://peacekeeping.un.org/en/its-time-to-talk-about-blue-line-co>(검색일 2022.3.30.).



〈그림 1〉 블루라인과 쉐바농장

출처: 위키피디아 (검색일: 2022.2.26.)

쉐바농장 좌측 가자르(Ghajar) 마을에도 분쟁이 있다.<sup>12)</sup> 블루라인에 의하여 마을 북쪽은 레바논, 남쪽은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2000년 5월, 이스라엘군은 예외적으로 가자르 마을에서 철수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북쪽을 포함해 마을 전체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보고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르 마을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 3. UNIFIL 성과와 도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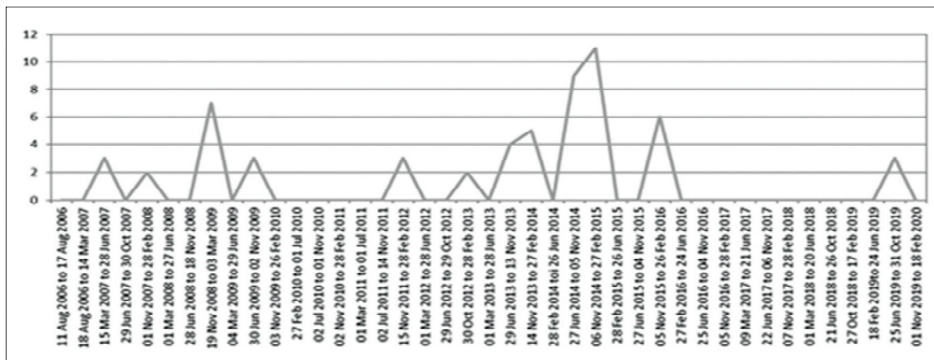
#### 가. 적대행위 중단

2006년 이후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희석할 수 있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많은 사건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던 것은 UNIFIL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블루라인 인근 로켓 발사는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UNIFIL은 이스라엘 및 레바논군과

12) 마을 인구는 약 3,000여 명의 알라위 파 시리아인이며, 국제적으로 시리아 영토로 인정되고 있다.

의 연락체계 및 UNIFIL 주관으로 레바논 및 이스라엘군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의(Tripartite talks) 등을 통해 군사적 위기와 양국의 갈등을 관리하여 왔다.

〈그림 2〉에서 2015년 발생했던 로켓 발사는 1.18일, UNIFIL 책임지역 동남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전투원을 공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28일, 헤즈볼라가 로켓으로 응사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원점에 대해 총 118발의 포병사격(155밀리 90발, 박격포 28발)을 실시하였다.<sup>13)</sup>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6명, 이스라엘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스라엘 155밀리 오발사격으로 UNIFIL 동부여단 소속 스페인 PKO 요원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였다.<sup>14)</sup> 같은 해 12.20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헤즈볼라 부지도자급 조직원을 암살하자 헤즈볼라가 로켓으로 응사하고, 헤즈볼라 로켓 원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박격포 사격이 있었다. 2019년 9월, 헤즈볼라는 레바논 마루나라스 지역에서 2~3기의 대전차화기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국경(Avivim) 지역 초소와 차량을 공격하면서<sup>15)</sup> 베이루트 상공에서 이스라엘의 드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이스라엘은 공격헬기 및 포병 등 합동화력으로 마루나라스 지역의 원점에 약 100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와 이스라엘의 포병사격은 지난 2006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상호 보복공격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림 2〉 블루라인 로켓 발사

출처: Bardalal A.K.,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 (2021)

13) A.K. Bardalal(2021), p.136.

14)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UNIFIL사령부 참모장교 귀국보고서』 (2021.8.13), p.54.

15)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UNIFIL사령부 참모장교 귀국보고서』 (2021.8.13), p.25.

16) 2019. 8월,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베이루트 헤즈볼라 미디어센터를 공격하려다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건 직후 하산 나스랄라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 상공의 이스라엘 드론을 격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블루라인에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로켓 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5.13~19일, 라마단 기간 중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유혈사태<sup>17)</sup>에 불만을 가진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이 로켓을 발사하였으며(총 11발), 로켓 원점에 대해 이스라엘은 대응사격(총 47발)을 실시하였다. 또한 8.4~6일 카타르의 팔레스타인 재건자금 지원을 이스라엘이 차단하자, 팔레스타인 및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로켓을(약 15발) 발사하였다. 로켓 원점에 대해 이스라엘은 포병사격(총 135발)으로 대응하였으며, 8.5일에 2006년 이후 최초로 이스라엘 공군이 남부 레바논 공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로켓이 발사되면 UNIFIL 자체 감시레이더에 의해 포착되거나, 이스라엘측 직통선으로 UNIFIL은 연락을 받는다. UNIFIL은 이스라엘이 대응사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만, 대체로 이스라엘은 UNIFIL에 통보 후 원점에 대한 사격을 실시한다. 사례로 언급한 2021. 5월 교전에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UNIFIL 임무단장이 직접 중재해야 할 정도로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sup>18)</sup> 한편, 교전이 종료되면 UNIFIL 현장 확인 및 연락팀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상 발사지점에 대한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로켓 발사의 재발방지 활동을 실시한다.

#### 나. 블루배럴 설치

UNIFIL은 블루라인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우발적인 블루라인 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2007년 9월부터 시작하여 총 527개의 블루배럴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레바논 정부가 블루라인을 설정한 근거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3개 지역(reservation areas)에 대하여 UNIFIL에 이의를 제기하여 272개를 완료한 상태에서 2017년 이후의 작업은 중단되었다.

17) 라마단 마지막 날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 이스라엘 시위에 나서자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하마스 측에서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무장충돌이 11일간 지속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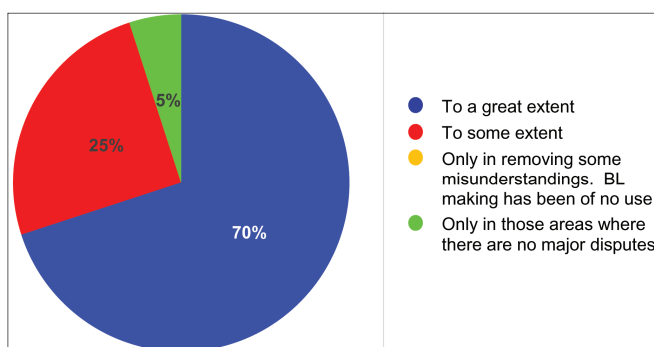
18)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동명부대 25진 파병성과 교훈집』(2022.2월), pp.22-23.



〈그림 3〉 블루배럴 설치

출처: 구글 홈페이지 (검색일: 2022.2.26.)

블루배럴 설치가 당분간 중단되었지만 바달라이(A.K. Bardalal)가 UNIFIL 파병부대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sup>19)</sup>에서 〈그림 4〉와 같이 응답자의 과반 이상(70%)이 블루배럴 설치에 레바논 민간인들의 의도하지 않은 블루라인 침범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블루배럴 설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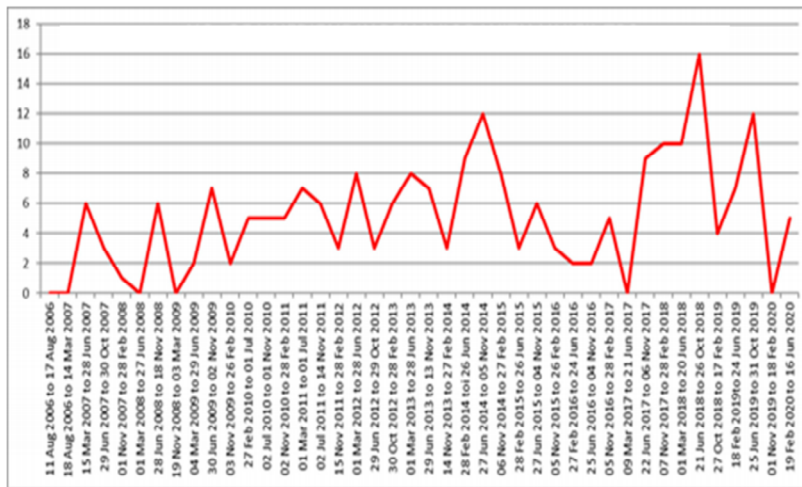
〈그림 4〉 블루라인 표식에 대한 의견

출처: Bardalal A.K.,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 (2021)

19) A.K. Bardalal(2021), p.174.

#### 다. PKO 요원의 안전과 이동의 자유

PKO 요원의 안전과 이동의 자유는 2006년 안보리결의안(1701)<sup>20)</sup> 이후 위임 명령에 매년 포함되었다. 2007년 IED 폭발로 스페인 평화유지요원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악의적인(malicious) 행위에 의한 평화유지요원의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림 5>와 같이 평화유지요원에 대한 이동 방해 등 비우호적(unfriendly)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바달라이(A.K. Bardalai)는 단기적으로 2014년 및 2018년 비우호적 행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헤즈볼라가 시리아 내전에 참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으면서, 헤즈볼라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전환시키고,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남부 레바논에서 자신들의 존재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21)</sup>



<그림 5> 평화유지요원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

출처: Bardalai A.K.,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 (2021)

#### 라. 지뢰 및 폭발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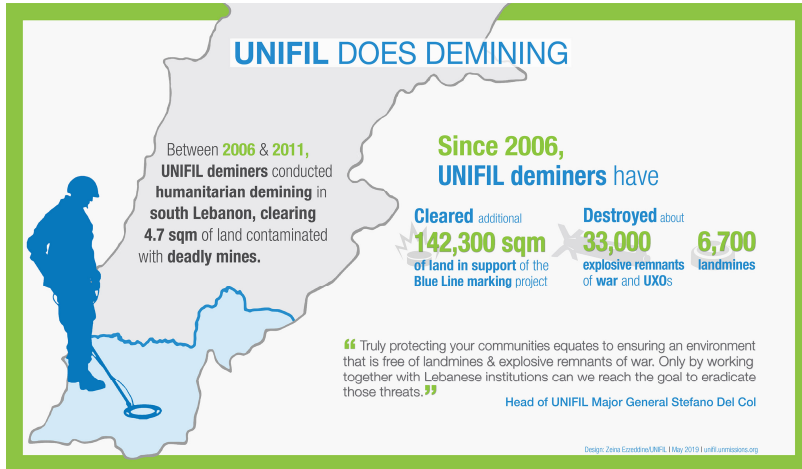
UNIFIL 지뢰 및 폭발물 제거팀의 임무<sup>22)</sup>는 불발탄과 지뢰를 제거하여 유엔 인원과 장비의 이동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엔의 인도적 지뢰제거팀 UNMAS(UN

20) S/RES/1701(2006), para. 12.

21) A.K. Bardalai(2021), p.204.

22) S/RES/1701(2006), para. 10(d).

Mine Action Service)의 일부로 참가하여 남부 레바논 지역의 집속탄과 항공 폭격, 로켓 및 미사일, 불발탄 지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UNIFIL은 8개의 지뢰제거 및 EOD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및 이태리 대대가 지원하고 있다.<sup>23)</sup>



〈그림 6〉 UNIFIL 지뢰제거 현황

출처: UN DPO 홈페이지 (검색일 2022.2.28.)

UNIFIL은 2006년 이후 남부 레바논에서 4.8km<sup>2</sup> 피해지역을 개척하여 3만 4천 발 이상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였으나, 남아있는 약 42만 5천발의 지뢰 및 폭발물은 지역사회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집속탄 및 불발탄 사고로 남부 레바논 민간인 27명이 사망자와 2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EOD 요원의 사망자도 14명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UNIFIL 활동 및 위험예지 교육 결과, 2008년 이후 민간인 희생자는 월 2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마. 남부 레바논(블루라인~리타니강) 허가되지 아니한 무장 인원 활동 및 무기 반입에 대한 안전조치,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UNIFIL은 고정감시 및 이동정찰 감시 포함 일일 450여 회의 작전활동과 함께 남부 레바논(블루라인~리타니강)에 허가되지 아니한 무장 인원 활동과 무기 반입에 대한 안전조치<sup>24)</sup>를 실시하고 있지만, UNIFIL에게 헤즈볼라는 가시와 같은 존

23) <https://unifil.unmissions.org/un-mine-action-service-unmas-and-unifil>(검색일 2022.2.28.).

24) S/RES/1701(2006), para. 8 and 9.

재가 되어 왔다. ‘알라의 당’ 또는 ‘신의 당’이라는 의미를 가진 헤즈볼라는 1982년 이란의 후원으로 창설되었으며 1985년 ‘헤즈볼라 성명서’에서 목표와 비전을 밝히고, 존재를 공식화하였다. 설립 초기에 대규모 테러<sup>25)</sup> 등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하였으나, 1992년 ‘나산 하스랄라’가 헤즈볼라 3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치군사복합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도권 정당으로 재탄생하였다. 한편 헤즈볼라가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스라엘 4차 침공이다. 헤즈볼라 때문에 촉발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대량보복으로 레바논 국민의 분노가 높아진 가운데 34일간 헤즈볼라의 저항으로 이스라엘이 철수하게 되었다고 레바논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헤즈볼라가 전후 신속한 복구 지원을 실시하면서 레바논 정부 또는 군 보다 신뢰받는 집단이 된 것이다.<sup>26)</sup>

2004년 안보리 결의안(1559)<sup>27)</sup>의 무장해제를 요구에 대하여 ‘하산 나스랄라’는 2006년 3월 개최된 국가대화(National Dialogue)에서 이스라엘의 ‘가자르 마을’ 및 ‘쉐바농장’ 강제점령을 명분으로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레바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헤즈볼라뿐이라고 밝혔다.<sup>28)</sup> 또한 2006년 전쟁이 종료된 이후 시니오라(Fouad Siniora) 내각은 안보리 결의안(1701) 준수를 위해 재차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헤즈볼라가 내각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어서 2008년, 정부와 여당이 베이루트 공항에 설치된 헤즈볼라 감시카메라 및 통신망을 철거하였을 때, 헤즈볼라가 무력으로 베이루트 공항을 15일간 점령하면서 사망 65명, 부상 200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와 헤즈볼라 간 충돌은 내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아랍연맹 중재 하 2008년에 카타르 도하 회의에서 레바논 정치권은 헤즈볼라를 포함한 무장단체의 무장해제와 정치적 위기 해결을 논의하였으나, 헤즈볼라를 저항단체로 인정하면서 이후 이들의 군사적 역할과 지역적 모험주의를 무마하게 된 것이다.

25) 1983. 4월, 헤즈볼라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 대사관 폭탄테러에 의하여 사망 40명, 부상 90명이 발생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미 해병대 본부에 폭탄테러에 의해 미군 241명, 프랑스군 58명이 사망하였다.

26) 지효근, “헤즈볼라의 정치군사적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1, 2차 레바논전쟁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81호 (2020.07), p.169.

27) S/RES/1559(2004), para. 3.

28) 지효근(2020.07), p.160.



〈그림 7〉 헤즈볼라가 굴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땅굴

출처: Avihu Shapira 이스라엘(검색일: 2022.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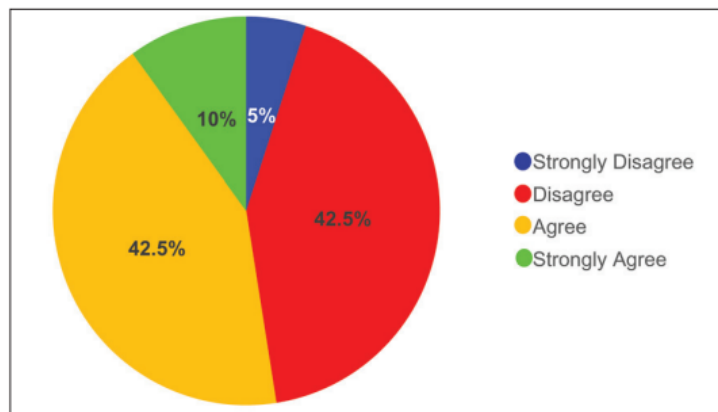
남부 레바논(블루라인~리타니강)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장 인원 활동 및 무기 반입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안보리결의안 1701(2006) 위임명령 8항은 명시적으로 헤즈볼라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정치와 경제에서 헤즈볼라가 하위 국가행위자로서 이미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초래하는 유엔의 딜레마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는 〈그림 7〉과 같이 2018년 12월, 남부 레바논(블루라인~리타니강)에서 헤즈볼라 소행으로 의심되는 땅굴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에서 6개의 땅굴 출구를 발견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예상 땅굴 입구를 UNIFIL에 통보하였다.<sup>29)</sup> UNIFIL은 헤즈볼라가 굴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레바논 정부의 협조 거부로 예상 입구 지역에 대한 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sup>30)</sup>

또한, 2017년 이후로 GWB(Green Without Border)라는 NGO가 나무를 심는다는 명분으로 블루라인 인근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감시초소와 유사한 건물을 총 23개소에서 신축하고 사진촬영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비무장 활동이기 때문에 UNIFIL은 GWB 활동을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한편 이스라엘은 GWB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는 조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헤즈볼라가 NGO로 위장하여 활동하는 이유는 UNIFIL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레바논 정치권

29) <https://www.timesofisrael.com/the-dangerous-impotence-of-unifils-mission-in-lebanon/>(검색일: 2022.3.28.).

30) 총 6개의 땅굴 가운데 레바논 블루라인 인근 카파 킬라(Kfar Kila) 마을에서 5개가 있을 것으로 UNIFIL은 판단하고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레바논 정부는 조사지역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결의안(1701) 위임명령은 8항과 11항(e)은 허가되지 아니한 무장 인원 활동 및 무기 반입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 UNIFIL 역할은 레바논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sup>31)</sup> 1993년 소말리아에서 UNOSOM-II는 군벌의 무장해제와 법과 질서의 유지로 임무를 확대하려다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이와 같은 실패와 헤즈볼라의 존재라는 레바논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유엔은 UNIFIL 위임명령을 융통성 있게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림 8>에서 남부 레바논 지역주민 약 52%가 헤즈볼라 존재에 동의하고 있어서, UNIFIL이 강력한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한다면 지역사회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sup>32)</sup>



<그림 8> 무장단체(헤즈볼라) 존재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

출처: Bardalal A.K.,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 (2021)

## 바. 합법성

평화유지활동의 원칙과 지침(2004)에 의하면, 평화유지활동 수행 자세는 현지에서 합법성의 인식에 강한 영향을 준다.<sup>33)</sup> 즉 개개인 요원에 의한 규율, 해당 지역의 관습·제도·법에 대한 존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바른 행동 등이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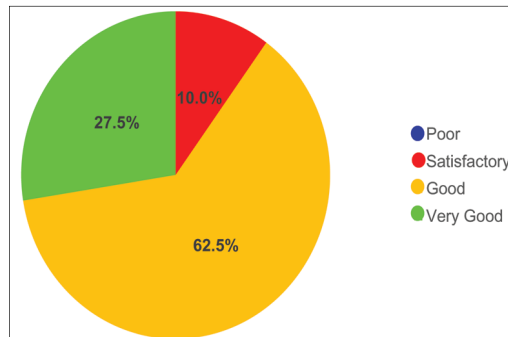
31) para 8. security arrangements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hostil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between the Blue Line and the Litani river of an area free of any armed personnel, assets and weapons other than those of the Government of Lebanon and of UNIFIL as authorized in para. 11, deployed in this area; para 11(e) Assist the Lebanese armed forces in taking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area as referred to in para. 8: S/RES/1701(2006).

32) A.K. Bardalal(2021), p.177.

33) UN DP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p.36.

단의 합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바달라이(A.K. Bardalal)는 UNIFIL 근무 유경험자와 실시한 전화 인터뷰에서 <그림 9>와 같이 90% 이상이 지역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sup>34)</sup> 또 다른 조사에서 현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의 15%만 양호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UNIFIL 평화유지요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평화유지요원의 행동은 지역사회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달라이(A.K. Bardalal)는 작전 현장에서 비우호적 행위는 지역 주민의 감정을 훼손하는 행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 주민들은 평화유지요원이 사진을 촬영한 이후 이스라엘 측으로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촬영장비를 강탈하거나 또는 평화유지요원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동정찰팀의 장갑차량이 마을에 진입할 때 농경지 피해를 우려하면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는데, 특히 장갑차량의 질주를 오만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바달라이(A.K. Bardalal)는 밝히고 있다.<sup>35)</sup> 또한 민사활동을 수행하는 UNIFIL 프랑스 대대와 이태리 대대를 비교하면서, 헬멧과 방탄복 착용 등 과도한 부대방호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36)</sup> 2010년, 프랑스 평화유지요원이 가정에 있는 레바논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지역사회는 ‘성적 도발’이라면서 극도의 분노를 표현했다는 것에서 현지 문화에 대한 평화유지요원의 태도와 성 착취/남용(SEA) 행위가 임무단 합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UNIFIL과 지역주민 관계

출처: Bardalal A.K.,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 (2021)

34) A.K. Bardalal(2021),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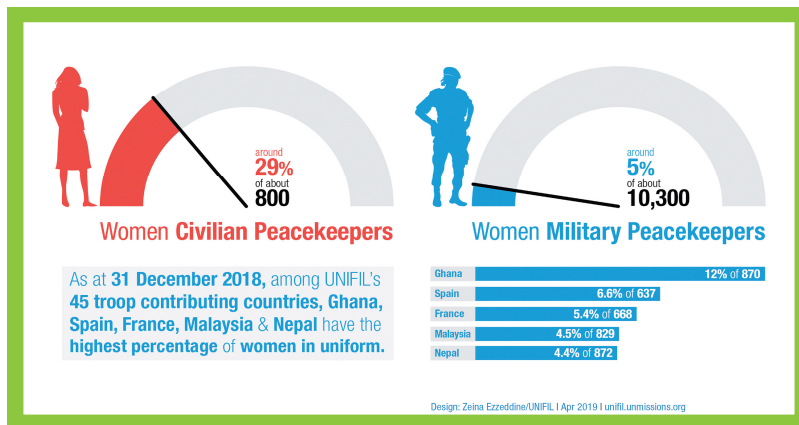
35) A.K. Bardalal(2021), p.149.

36) A.K. Bardalal(2021), p.184.

### 사. 여성, 평화와 안전(WPS)

UNIFIL 안보리 결의안 2591(2021)은 여성 참여를 위임명령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sup>37)</sup> PKO 임무단에 대한 연구에서 WPS를 임무단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기도 한다.<sup>38)</sup> 과거 레바논에서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활동을 꺼려했던 사례가 있는데, 1992년 노르웨이 부대는 자국의 여성 평화유지요원이 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UNIFIL 여성 참여는 편차가 있으나 민간참모는 약 30%, 군 평화유지요원은 약 5% 수준이며, UNIFIL 및 캐나다 조지타운 연구소<sup>39)</sup> 자료에 의하면 UNIFIL 여성의 참여는 평화유지요원(군·경·민간) 가나, 스페인, 프랑스, 말레이시아, 네팔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고, 군의 평화유지요원 여성의 참여는 약 5%로 다른 PKO 임무단과 유사한 수준이다.

UNIFIL 여성평가지원팀(Female Assessment Support Team)이 2017년 12월, 도보순찰을 하면서 실시한 조사에는 UNIFIL 여성 참여가 (1) 지역 여성에 대한 접근 및 지원을 용이하게 하며, (2) 남성 평화유지활동 요원의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고, (3) 레바논군 여군 모집에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40)</sup> 또한 레바논 정부가 2019년 유엔의 WPS의제를 국가행동계획(2019-2022)을 발표하면서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림 10〉 UN PKO 여성 참여

출처: UN DPO 홈페이지(검색일: 2022.2.26.)

37) S/RES/2591(2021), para. 26 and 27.

38) Lise Morje Howard et al,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MINUSMA* (EPSON, 2022), p.25.

39) <https://gjwps.georgetown.edu/wp-content/uploads/2021/05/UNIFIL-Case-Study.pdf>(검색일 2022.2.26.).

40) Robert U. Nagel et a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Georgetown Institute for WPS, May 2021). p.5.

## 4. 결론 및 제언

1978년 창설된 UNIFIL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4차례 전쟁을 예방하는데 실패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희석할 수 있지만, 블루라인 인근에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와 이러한 원점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사격이라는 악순환과 관련 학자들은 ‘통제된 교착상태(controlled impasse)’ 또는 ‘객관적으로 해결 불가(objectively insoluble)’고 표현하였다.<sup>41)</sup> 분쟁과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자칫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UNIFIL이 군사적 위기나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예방 또는 저지해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부 레바논에서 발생하는 비우호적 행위는 PKO요원의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현지 지역주민의 임무단 합법성 인식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UNIFIL은 안보리결의안(1701) 12항에서 위임명령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평화유지(Robust Peacekeeping)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헤즈볼라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UNIFIL 위임명령 연장 거부, 예산지원 보류(삭감) 등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레바논 내 정치군사 복합체로서 헤즈볼라의 영향력과 다수의 시아파 공동체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압적인 방법은 현실성이 없으며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갈등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임무단을 철수할 때, 국제사회가 부담할 전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근시일 이내에 UNIFIL 임무단의 역할 변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UNIFIL 소속의 동명부대는 현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한국의 파병 역사상 최장기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명부대 임무 확대 또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UNIFIL 위임명령 이행과 딜레마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 번째, 블루라인 임무에 참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블루라인 임무 참여는 ‘제로섬 게임’이므로 철수하는 국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타 국가와 연합부대로 참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휘통제와 군수지원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본론의 사례와 같이 포격에 의한 우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우호적 행위 및 NGO로 위장한 헤즈볼라 활동 등 작전 마찰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41)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동명부대 25진 파병성과 교훈집』 (2022.2월), pp.22-23.

두 번째로는, EOD팀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부 레바논에 남아있는 지뢰 및 폭발물 현황을 통해 EOD팀 활동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역량 협력체계 기반의 지뢰제거 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이 EOD팀을 파병한다면 (1) 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2)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약과 연계할 수 있으며(UNIFIL 예하 캄보디아 EOD팀 지원), (3) 레바논 지뢰제거센터(LMAC, Lebanese Mine Action Centre) 및 UNMAS(UN Mine Action Service)와 연계된 활동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4) 우리 EOD 로봇 등 첨단 기술을 PKO 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파병부대 임무를 UNIFIL 작전활동으로 제한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국가적인 외교자산으로서 부대 역량을 200%, 300%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sup>42)</sup> 그동안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보다는 군사적 활동에 그치고 국가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미흡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파병부대의 군사·외교적인 가치를 보고 UNIFIL 임무단장과 현지 한국 대사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여국 제한사항(National Caveats)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개최되는 유엔 총회 C-34(PKO 특위)의 보고서는 공여국 제한사항(National Caveats)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병부대가 타국군 부대는 물론 레바논 정부 및 군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임무 확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UNIFIL 예하 NATO 서방국가들은 자국군 파병을 계기로 유엔 및 주둔국(레바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2) 박동순·구형희, 『국제분쟁과 평화활동』 (서울 마포: 선인, 2019), p.248.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박동순 · 구형희, 『국제분쟁과 평화활동』(서울 마포: 선인, 2019).
- 송승중,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서울: 연경문화사, 2006).
- Bardalal, A.K.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Assessment and Way Forward* (New Delhi: Pentagon Press LLP, 2021)
- Diehl, Paul F. *International Peacekeeping: Perspective on Secur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3)
- Novosseloff, Alexanda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UNFICYP and OSASG* (Oslo: Norweg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21)
- U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DPO & DFS, 2008)

### 2. 학술지

- 지효근. “헤즈볼라의 정치군사적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1, 2차 레바논전쟁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통권 81호(2020).
- 양철호.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군사』 101호(2016).
- 장삼열.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30주년 평가와 발전방안,” 『군사논단』 105호(2021년 봄).
- Nagel, Robert U. et a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GIWPS: Georgetown Institute for Women, Peace and Security(2021).

### 3. 유엔안보리결의안

- United Nations. S/RES/1559(2004).
- United Nations. S/RES/1701(2006).
- United Nations. S/RES/2591(2021).

### 4. 인터넷

<https://giwps.georgetown.edu/wp-content/uploads/2021/05/UNIFIL-Case-Study.pdf>. (검색일 2022.2.26.).

<https://www.timesofisrael.com/the-dangerous-impotence-of-unifils-mission-in-lebanon/>(검색일: 2022.3.28.).

<https://peacekeeping.un.org/en/its-time-to-talk-about-blue-line-co>(검색일 2022.3.30.).

### 5. 기 타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2021.8.13.). UNIFIL사령부 참모장교 귀국보고서.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2022.2월). 동명부대 25진 파병성과 교훈집.



# 서구의 패권에 대한 푸틴의 2022년 판 도전

Russia's Challenge in 21st Century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임윤갑  
Professor LIM, Yoonkap




## 요약

나토의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 상황은 지정학적, 경제적 교차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명제의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푸틴 정권은 또 다른 한 시대의 유물 또는 새로운 권위주의 물결의 선구자라는 명제이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통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힘을 축적했다는 사실로 무게를 둘 수 있다. 러시아의 정교한 무기체계와 사이버 역량이 러시아 경제의 광범위한 기술적 잠재 역량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금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유와 가스이다. 푸틴은 이를 활용하였다. 러시아가 석유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국가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사고일 수 있으나 이라크나 알제리보다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전략적인 석유 산업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러시아가 석유 산업 국가라는 것은 중의적이다. 러시아는 유럽 가스 수입의 40%에 달할 정도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제재는 이란과 같이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에 상당한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다른 주요 석유 수출국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화석 연료를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러시아는 석유 수출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러시아의 불평등 이후 지금은 사회적 구조가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푸틴 정권은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를 잘 관리해왔고 현재 러시아의 예산도 적정 수준의 원유 가격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원유 비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가 석유 산유국으로서 위상을 결정짓는 변수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이다.

러시아의 지금까지의 군사작전의 수행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 효과를 고려해볼 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서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러시아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장악하더라도 매일 매일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서구의 대응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푸틴이 믿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국가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When NATO tried to expand its influence to the eastward after the cold-war collaps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made blistering remarks against the West in Munich Security Conference issuing warning sign that Russia will not tolerate the West's behavior. However, Putin's attitude to keep his own ways with all necessary means drew the West rage and the disparity between the two sides has been widening since then.

The West, especially US and EU created the new boundary line along with their diplomatic preference with her hard power, soft power and financial power. They sometimes give pressure by these power in order to achieve their objectives. Nevertheless, Putin's challenge could not be stop by the West and he also tried to pioneered his own ways to resist the West. These situation from 1990s and up to now tremb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 and made overall situation unstable.

In the mean time, Ukraine, having faced the threat from Russia since 2014, annexation of Crimea, had a few options to survive either to cooperate with Russia or close to the West. But when the threat from Russia became imminent, Ukraine was inclined to the West, accordingly Russia provoked more aggressively.

The end of war is not seen yet, however, if Russia won the war by her definition, there will be lots of loss because of war. On the other hands, The West also will face new order after the war.

## **ABSTRACT**





# 서구의 패권에 대한 푸틴의 2022년 판 도전

Russia's Challenge in 21st Century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임윤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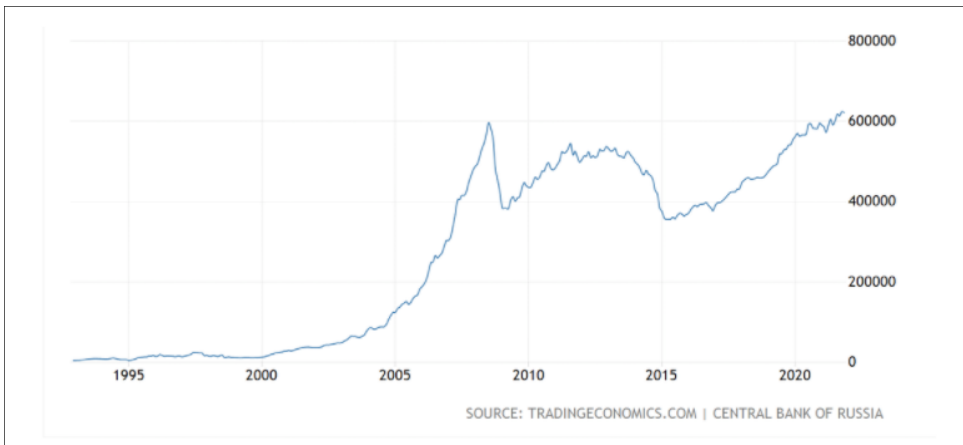
Professor LIM, Yoonkap

나토의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 상황은 지정학적, 경제적 교차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명제의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첫째, 푸틴 정권은 또 다른 한 시대의 유물 또는 새로운 권위주의 물결의 선구자라는 명제이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통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힘을 축적했다는 사실로 무게를 둘 수 있다. 러시아의 정교한 무기체계와 사이버 역량이 러시아 경제의 광범위한 기술적 잠재 역량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금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유와 가스이다. 푸틴은 이를 활용하였다. 러시아가 석유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국가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사고일 수 있으나 이라크나 알제리보다는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전략적인 석유 산업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러시아가 석유 산업 국가라는 것은 중의적이다. 러시아는 유럽 가스 수입의 40%에 달할 정도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제재는 이란과 같이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에 상당한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다른 주요 석유 수출국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화석 연료를 축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러시아는 석유 수출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러시아의 불평등 이후 지금은 사회적 구조가 상당한 수준으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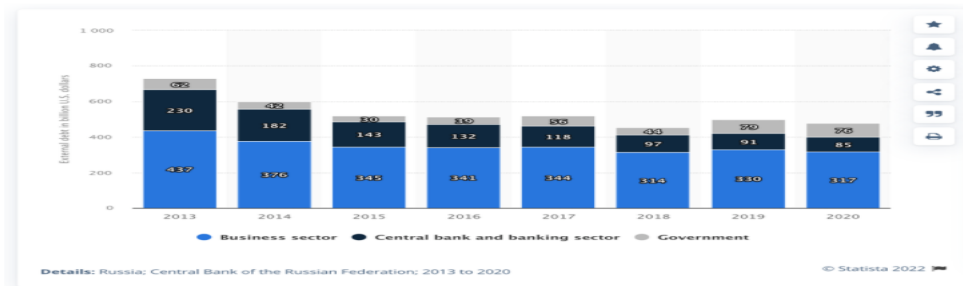
정되었다. 푸틴 정권은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를 잘 관리해왔고 현재 러시아의 예산도 적정 수준의 원유 가격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상당한 정도의 원유 비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가 석유 산유국으로서 위상을 결정짓는 변수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이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사이를 오가며 중국, 일본, 스위스에 뒤를 이어 네 번째 국가이다. 이는 푸틴에게 전략적 기동성을 제공한다. 외환보유고는 다른 경제 부분에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며 루블(Rouble)화의 가치하락의 속도를 낮추고 사적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차대조표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현황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큰 만큼, 사적 부채가 외화일 경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의 사적 달러 채무는 2008년과 2014년 상당한 고층에 노출된 바 있었지만, 이후 재조정되었다.



〈표 2〉 러시아의 정부, 중앙은행, 사업 분야의 외부 부채 현황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채무는 2021년 60억 달러에서 3,94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외환보유고에 의해 쉽게 상쇄되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재정적 균형은 푸틴의 러시아가 1998년 국가적 차원에서 충격을 주었던 포괄적인 재정적 위기와 같은 경험을 이후 다시 겪지 않게 하였다. 이는 푸틴이 2008년 러시아가 더 이상 '지정학적 후퇴'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시기에 외환보유고는 정점을 찍었다. 이것이 검토되어야 할 두 번째 명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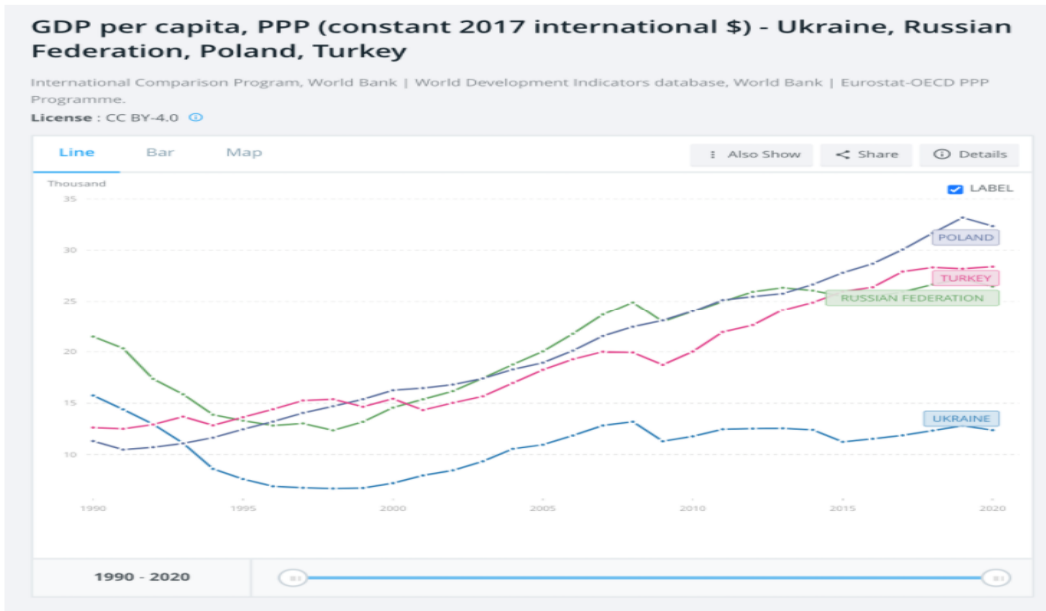
푸틴은 2007년 2월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쪽으로의 더 이상의 확장을 거부하는 독설을 쏟아 내었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반대는 국제사회의 경제가 국제무대를 지배하는 구조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적 성장이 조화나 통합보다는 분쟁과 갈등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푸틴의 2007년과 2008년이였다.

모든 필요한 수단을 통해 러시아의 자율성을 유지하겠다는 푸틴의 이와 같은 입장은 서구의 격노를 불러왔다. 서구 세력,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자신의 강점과 선호에 따라 경성(Hard) 권력, 연성(Soft) 권력 그리고 금융 등 서로 다른 형태의 힘의 경계선을 통해 탈냉전 이후 질서를 만들었다. 서구 세력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압박, 연성 권력 그리고 군사력을 혼합한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푸틴의 도전은 서구가 만들어 놓은 탈냉전 이후의 질서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외교적 설득, 연성 권력, 재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군사적 위협과 강압의 전략 변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유럽을 흔들고 있다.

세 번째 명제는 결국 러시아 권력의 재부상과 도전에 서구 세력이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유럽의 핵심 문제는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이전에 구소련에 속하였거나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의 회원국이었거나 상관없이 1990년대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충격에서 어떻게 헤쳐 나왔느냐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는 1990년대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 공산주의 정치 시대 이후 고도로 기능을 발휘하는 국가로 변모하였고 나토(NATO)와 유럽연합의 확장 초기 물결에 편승,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모든 면에서 이들 국가와 반대편 스펙트럼에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목표로 삼게 만든 것은 반드시 지정학적 이유만은 아니며 우크라이나 정치와 엘리트의 분열 그리고 경제의 실패 이면을 보아야 한다. 소비에트 연방의 종말은 우크라이나에 독립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

크라이나에 경제적 재앙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과 1996년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sup>1)</sup> 기준에서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반토막 나는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1990년대 몰락한 우크라이나 경제는 2007년에 이르러서야 1990년 당시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이후 여전히 침체한 상태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3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90년대에 비해 20%보다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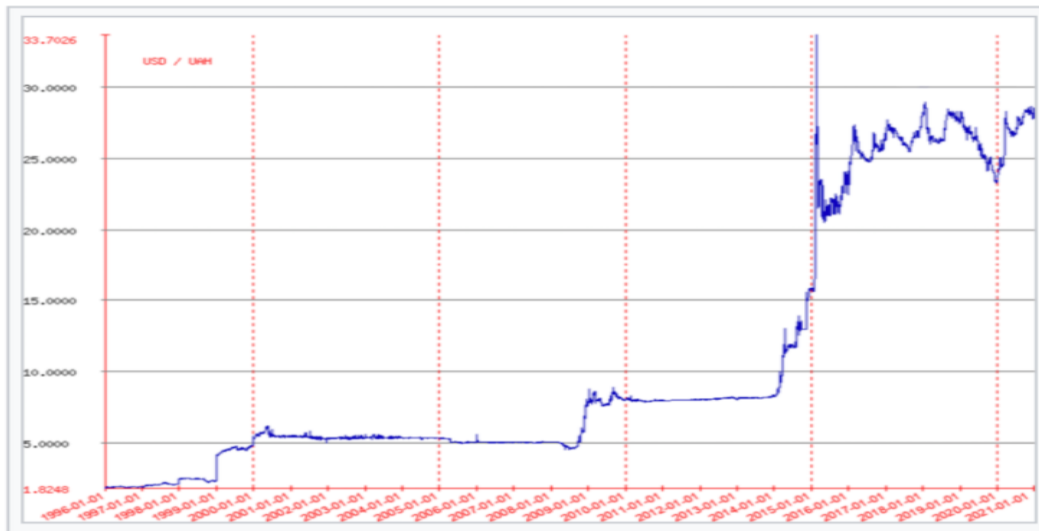


〈표 3〉 1990~2020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1인당 국민총생산 추세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1998년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회복하여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극적으로 대조된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인접 국가인 터키 및 폴란드와 성장 곡선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래 〈표 4〉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정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1) 구매력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 PPP) 이론은 환율이 각국 화폐의 구매력, 즉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지니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으로서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확장·적용한 것이다. 구매력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수준을 감안해 만든 소득지표로 각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높은 것은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의 택시 기본요금은 710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천660원 정도다. 이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2천400원)의 네 배가 넘는다. 이처럼 같은 돈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이 적은 것은 일본의 물가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런 물가 차이를 감안해서 평가한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다. 우크라이나는 환율과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동안 취약점을 드러내었고 이는 달러나 유로화에 대한 우크라이나 화폐 흐리우냐(Hryvina)의 평가절하로 나타났다. 1990년대, 2008년 그리고 2014-5년 사이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 2015년 이후 흐리우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곡선을 일정하게 유지했지만, 백분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상승 곡선은 그리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국제통화기금(IMF)의 보호를 받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표 4〉 우크라이나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국가로서 위신을 간단하게 무시해왔다. 이는 일종의 선전전일 수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엘리트들은 국가로서 합법성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공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경제적 절망은 종교, 언어 집단, 당파적 이익에 따른 분열을 촉진하였다. 독립 이후 소수의 최고 부유층은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해롭고 파괴적인 역할을 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12월 파리에서 처음으로 푸틴과 만난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이며 민주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의 발전 방향은 항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배타적 의지에 따라 선택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경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이웃 국가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이 국가의 발

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존재한다는 주장은 그리 바람직한 정의는 아니었다. 2007년 푸틴의 연설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2008년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자,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유럽연합-나토와 협력하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선호되었다. 그러나 2004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sup>2)</sup>이 일어나고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가 경제적 안정세에 들어선 가운데 러시아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2000년대 중반, 우크라이나의 선택 방안은 서구 세계로 기울었다.

2008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결말짓고자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의 열망을 자극하였고 2008년 4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이 국가들의 회원국 지위 부여를 두고 기존 회원국 사이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가 이러한 선택 방안 사이에서 분열되는 사이 러시아는 나토 확장 움직임으로 극심한 불편함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악의 결과는 조지아에서 나타났다.

부쿠레슈티의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야심가였던 조지아(Georgia)의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은 나토를 활용하여 남 오세티야(South Ossetia) 지역의 오랜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조지아는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것처럼 확신하였고 2008년 8월, 남 오세티야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러시아가 즉각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섰고 '나토의 부쿠레슈티 약속은 잘못된 판단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라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러시아의 추가적인 진출은 없었지만, 미국과 유럽도 경제와 금융의 위기로 발목을 잡힌 상태였다. 2008년 우크라이나는 즉시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공업 위

2) 2000년대 이후에 구소련권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개혁, 시위, 혁명을 의미하며, 종종 독립운동을 포함할 때도 있다. 혁명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며, 정부의 폭력 탄압이 있는 경우를 뺀다면 대체로 비폭력적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정 색깔이나 식물 등을 혁명의 상징으로 한다. 2009년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SNS를 통한 혁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SNS로 혁명이 시작된 해는 2010년 말에 일어난 아랍의 봄이다. 사실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으나 1976년이나 1986년에도 색깔 혁명으로 불리는 사례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색깔 혁명이 나타난 시점은 2000년 이후이지만, 색깔 혁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색이 아니어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나 자연 등을 포함할 때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아의 장미혁명, 키르기스스탄의 튜립혁명,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 등이 있다.

주의 수출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는 2008년 경제적 위기 속에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2013년까지 우크라이나는 절망적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의 지원을 찾아 나섰고 러시아는 협상을 모색하였다. 협상 초기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Yankukovych) 대통령은 유럽연합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금융 조건이 매우 인색하고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이 훨씬 유리해 보이자, 갑자기 러시아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러 정책에 반대해 이른바 ‘광장 혁명(Maidan Revolution)’이 촉발되어 대대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친

서방 과도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자 친서방 정권에 반대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동부에서 친 러시아계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였다. 결국, 2014년 러시아는 크림(Crimea)을 병합하였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Donbas) 지역의 분리주의자를 지원하면서 이른바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이렇게 발전하자 서구 세력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유지하고자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이끄는 국제통화기금을 이용하여 금융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영토를 두고 벌이는 분쟁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동부지역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충분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프랑스와 독일에 남겨 놓은 채 한발 물러섰다. 그리스의 급진 좌파 연합 정부와 유로존을 놓고 충돌하면서 난민 문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이른바 노르망디 형식(Normandy Format)의 협상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sup>3)</sup>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2013년 스노든(Edward Snoden) 사건<sup>4)</sup> 이후 여러 해 동안 경색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민스크 협정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PR) 사이에 서명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이다. 민스크 협정은 양자 간 휴전의 시작,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 주 일부 지역의 지방 정부 임시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도네츠크/루한스크 특수 지위 법률)의 채택을 포함한 권력 분권화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일했던 컴퓨터 전문가 스노든이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한 사건이다. 스노든은 자신의 폭로가 대중의 반대편에 있는 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폭로 이후 모스크바에 체류 중이던 스노든은 독일 주간지 슈테른과 서면 인터뷰에서 'NSA에서 직접 독일인들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일에 관여했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이러한 일은 모든 독일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돈바스 전쟁〉

2014년 민스크 협정은 현재 위기의 핵심이 되었다. 원래 협상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러시아도 전면적인 침략 의도는 없었다. 협상의 결과,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언어 사용 권리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한다는 약속을 담아 러시아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구 국가의 영향력 아래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이나 나토 회원국 지위는 멀어지는 듯하였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민스크 협정이 화두가 되었고 프랑스는 민스크 협정의 재개를 통해 러시아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었고 프랑스는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았다. 드골(De Gaulle) 시대 이후 러시아를 향한 프랑스의 독단적인 외교는 일종의 환상이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위기와 상관없이 러시아와의 경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5년 여름 가즈프롬(Gazprom),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 이온(E.ON) 등 유수 석유회사가 ‘노드스트림(Nordstream) 2’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독일이 영토 내 통과를 허가하면서 5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다.



〈노드스트림 2 송유관 건설 요도〉

그러나 돈바스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였다. 러시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스크 협정은 동부지역의 높은 수준의 자치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적어도 돈바스 지역 선거에서 손을 떼기를 희망하였고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돈바스 지역이 일종의 연방 형태로 남아있으면서 러시아 측으로 충분히 기울지 않는 것이었다. 민스크 협정이 원안에서 한발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일종의 반역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2019년의 이와 같은 상황은 2021년에 접어들면서 1년 내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이번 두려움의 강도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그간 역량을 구축해왔고 따라서 러시아가 힘을 휘두르고자 하는 결정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하였다. 일각에서 푸틴이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의 공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2014년 크림반도의 병합으로 푸틴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이내 점차 사그라들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은 새로운 전쟁을 희망하지 않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래 러시아의 경제는 쇠락하였고 푸틴 정권은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좋은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8년 연금 지급 나이를 상향 조정하였고 러시아 국민은 다시 실망하였다. 푸틴 시대의 사회적 계약 즉, '당신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소련식의 물품뿐

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투표할 것이나 당신이 절도한 것과 뇌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라는 생각마저 변화하였다. 지난 국회 선거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였지만, 현재의 갑작스러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민스크 협정의 진행 과정에서 압도적인 논리적 흐름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미국의 태도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와 푸틴 자신의 정치적 시간이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서도 푸틴의 시간표는 매우 중요하였다. 2024년 푸틴은 권력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지막 출구를 마련할 것인지를 선택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부터 한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푸틴은 이미 이 문제에 지나치게 깊숙하게 개입한 상태이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병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구의 팽창에 선을 긋고자 하는 2007년과 2015년 상황의 연장선에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강화하고 서구에 더 이상의 팽창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국내로 끌어들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2024년이 푸틴의 염두에 있다면, 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중복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러시아 관계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푸틴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순위가 중국임을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략적 위치를 포기하는 정치적 대가를 기꺼이 치렀으며 아마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역학도 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서구의 언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발언을 순수하게 선전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발언을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2008년 조지아와 같은 시나리오도 떠올리게 된다. 서구 세력의 나토 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야망에 가득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정권은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재통합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태도는 러시아와 대규모 군사적 대결을 불러올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외교적 해결 과정에 끌어들이고 친 우크라이나 세력인 독일과 프랑스의 힘을 규합하려 하고 있다. 2018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다시 장악하려 한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젤렌스키는 개방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후보로 비추어졌다. 젤렌스키는 노르망디 형식의 협상으로 돌아왔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어떠한 무력 충돌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젤렌스키의

인기는 무너졌고 그의 전임자들과 같이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반대 세력과 서부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주의자 사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정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해 더욱 분열되고 있다. 2020년 3월 젤렌스키의 비서실장 예르마크(Andryi Yermak)는 푸틴의 실세인 코자크(Dmitry Kozak)를 만나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정부의 대표와 평화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가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자 우크라이나 보안 기관에 의해 범죄자로 체포되어 국회에서 반역죄로 고소되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의 극단적인 열망을 다시 러시아에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국회는 ‘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 통합의 보장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완전한 회원국 지위 확보를 위한 우선적인 절차’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위 결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의 전략적 인내는 2020년 6월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향상된 기회 파트너(EOP, 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극에 달하게 되었다. 향상된 기회 파트너는 정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방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심화하기 위해 나토가 부여하는 지위이며 회원국 간 상호 프로그램과 훈련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더 많은 정보 공유가 가능한 지위이다. 호주와 핀란드, 조지아, 요르단, 스웨덴 등의 국가도 나토의 향상된 기회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가 속한 국민당(Servant of the People Party)의 야스코(Lisa Yasko) 당 대표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군 보급체계를 개선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보 분야의 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유럽-대서양 통합의 약속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하였다. 이어 2020년 여름, 우크라이나는 ‘주요 비 나토 동맹국(MNNA, Major non-NATO Ally)’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비 나토 동맹국 지위는 미국이 지정한 미군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으나 나토 가입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미국과의 집단 안전보장을 자동으로 포함할 수 없으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군사 및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지위이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에서 실질적인 제한사항을 모두 해소하고자 하였고 이는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발전에 즉각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2020년 후반

기 러시아는 2개의 중대 위기를 다루어야만 하였다. 첫째는 8월 전례 없는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그간 미루어진 벨라루스(Belarus)의 대통령 선거였다. 두 번째는 2020년 9월 발생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Armenia-Azerbaijan) 전쟁이었다. 2020년 11월 터키가 지원하는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러시아는 휴전을 위한 중재자로 나섰다. 위 두 차례의 위기는 러시아에 개입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러시아는 두 위기 상황에서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특히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러시아는 균형을 택하였다. 벨라루스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광장 혁명’과 같은 대규모 시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세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복잡하고 값비싼 통합을 강요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친러시아 정부의 정권 이양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루카셴코와 정치 엘리트들이 새로운 동맹을 찾아 나서는 무모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고, 벨라루스도 서구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결정적인 상황의 발전은 2021년 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11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타란(Andrii Taran)은 ‘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 통합의 국방 측면: 미래를 위한 핵심 국면과 과업’이라는 제목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다가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실천계획(NATO Membership Action Plan)을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브리핑에서 타란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실천계획 제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의 결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타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나토 회원국 지위 확보는 헌법에 따른 것이며 나토 회원국 실천계획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세운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지난 7년 동안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나토의 동 측방에서 강력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타란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동맹 참여는 나토로서 올바른 결정이며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토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2021년 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정치인과 언론에 예기치 않은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였다. 2월 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3개의 친러시아 TV 채널을 폐쇄 하면서 이들이 돈바스 분리주의 세력에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푸틴의 하수인과 같은 노릇을 해왔던 메드베드추크(Viktor Medvedchuk)를 국가안보법에 따라 분리주의자를 지원한 명목으로 제재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즉각 대응에 나서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에 전면전으로 확대를 부추겼다. 만약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군수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가 이를 지원할 수 있었고 러시아로서는 이 기회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관계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2021년 초기는 돈바스 지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2008년 조지아의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대통령 신드롬을 떠올리게 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확신한다. 러시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우크라이나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지 않으며 나발니(Alexei Navalny)에 대한 공격과 그의 투옥은 긴장을 고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발니는 러시아의 변호사이자 정치 활동가로 2000년 정계에 입문하였지만, 2009년 이후 러시아 연방 정부의 부패 문제 및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국내의 미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보였으나, 2017년 12월 러시아 연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의 횡령죄 판결에 따라 나발니 러시아의 미래 당 대표 출마자격을 박탈하였다. 2020년 8월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경제인 노비츠크(Novichok)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 푸틴의 실세 코자크도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국가로서 존재의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2021년 내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협력과 러시아의 도발로 여겨지는 강력한 입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하게 중국에 집중한다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로 향한 미국의 관심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봄, 젤렌스키 대통령이 친러시아 정치세력에 대한 움직임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위기는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와 6월 제네바 정상회담을 통해 긴장이 완화하는 듯하였지만, 다시 여름 긴장이 촉발되었고 8월 긴장이 다시 고조되

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문턱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관점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중대한 움직임은 2021년 7월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2015년 문서에 비해 2021년의 문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러시아의 새로운 자국 중심의 사고를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의 이전 행보를 거부하고 이에 30개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이에 동조하면서 극적인 대립을 보였다. 양국 간 긴장은 그간 행보를 통해 명백하게 점증적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감행하였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은 8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분쟁의 정점을 찍었고 유럽 안보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사회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가까스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지만, 도시 대다수는 황폐해졌고 국민 25%가 난민이 되었거나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외교적인 해결책이 있을 것인지, 있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결론지을 것인지에 대한 모습은 아직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지역 기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향후 위상을 결정지을지도 의문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관련하여 일부 분석가들은 냉전 이후 나토의 팽창에 대한 점증하는 러시아의 불만이 구소련의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진 정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의 지도부는 미국과 나토가 구소련의 블록에 더 이상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 초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대가 그들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러시아의 침공 수 주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키예프를 포함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이동을 중지할 수 있었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낮은 사기, 군수지원 능력의 부족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 군사전략으로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구 분석가들은 3월까지 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러시아가 전쟁의 목표를 축소하고 2014년 돈바스 지역에서와같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Kherson) 지역으로 목표를 한정하고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여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에서 거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물론 국방, 경제 그리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을 대거 확대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행동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성과 주권의 회복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물론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공화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외교를 통한 전쟁의 종단을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돈바스 분쟁 당시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s)을 지원하였다.

서구 세력은 러시아의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였다. 미국은 2022년 초 긴급안보 지원 자금으로 10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다. 미군은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했고 저격용 소총, 유탄발사기, 야간감시경, 레이더, 재블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Stinger) 대공 미사일, 정찰 차량, 무인항공체계 등 다양한 장비를 제공하였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는 대규모로 확대되었고 러시아의 경제, 에너지, 방위 그리고 기술 분야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부유한 지배층과 특권 계급을 표적으로 한 개인적 차원의 제재도 결정되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또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의 은행들과의 거래하지 못하도록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통해 러시아를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였다. 스위프트 결제망은 1만여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결제를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이와 더불어 서구의 영향력 있는 회사들은 러시아에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시 중지하였다.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노드 스트림 2 송유관이 독일의 승인 보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몇몇 국가들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가스 시장에 일종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이의 건설을 반대한 바 있었다.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푸틴의 도박은 이미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 푸틴을 지지했던 세력마저도 설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라고 하더라도 점령 이후 실제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뒤편에서 국민의 응집력과 예상 밖의 젤렌스키의 지도력은 물론 외부의 침략에 단호하게 대항해왔던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자 했던 결의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관계 그 이상의 문제로 비화하였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가까운 시기에 달성 가능한 문제는 아니었다. 유로마이단과 러시아의 첫

번째 개입을 불러온 것은 나토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무역을 합의한 아누코비치의 열망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Neutrality)이나 핀란드화(Finlandization)의 약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지금까지의 군사작전의 수행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서 승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러시아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장악하더라도 매일 매일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서구의 대응에 달려 있고 무엇보다도 푸틴이 믿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국가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 유엔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과 평화유지활동(P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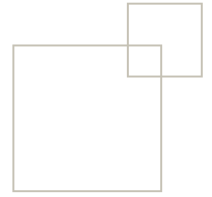
- 한국의 WPS 어젠더 이행방안 중심으로 -

UN Gender Equality policy and PKO

-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South Korea's WPS agenda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강효경  
Kang Hyokyung





## 요 약

지금 평화유지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평화와 안보(WPS)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회원국을 비롯한 지구상의 국가, 다른 국제 및 지역·소지역기구,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의 정책방향과 이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엔 WPS 정책 발전은 국제적 공동기준과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공한다. 유엔 A4P+에서 WPS는 전 분야에 걸쳐 이행해야 할 핵심 어젠더가 되었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히,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이행할 수 있는 현실방안으로 진화해 왔다. 유엔의 WPS가 현장의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적용과 함께 발전적인 한국의 WPS어젠더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 ABSTRACT

UN WPS policy development provid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measures. It affects the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m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as well as member states,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United Nations A4P+, WPS has become a core agenda to implement across all areas, and “how to implement” has evolved into a reality that member states participating in peacekeeping operations can implement. The UN WPS proposes a progressive implementation plan for Korea’s WPS agenda along with its application in peacekeeping operations in the field.

## 유엔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과 평화유지활동(PKO)

– 한국의 WPS 어젠더 이행방안 중심으로 –

UN Gender Equality policy and PKO

–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South Korea's WPS agenda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전문교수 강효경

Kang Hyokyung

### I. 서 론

지금 평화유지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 평화와 안보(WPS)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WPS가 단순히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도 모두가 공감한다. 회원국을 비롯한 지구상의 국가, 다른 국제 및 지역·소지역기구,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의 정책방향과 이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엔 WPS 정책 발전은 국제적 공동기준과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3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이하 PKO로 표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화유지활동 구상, 즉 A4P(Action for Peacekeeping)를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크게 정치, 여성, 평화 및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평화유지요원의 안전, 임무수행능력 및 책임성, 평화 구축 및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 행동강령 준수 등 8대 분야에서 평화유지와 관

련된 행위자들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WPS는 평화유지 활동 참여자의 책무로 포함되었다. 유엔은 이후 일정기간(2021~2023)내 A4P 8대 분야 이행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A4P인 A4P+를 발표하였는데 A4P+에서 평화유지 첨단전략(peacekeeping technology strategy)과 함께 WPS는 전 분야에 걸쳐 이행해야 할 어젠더(agenda)가 되었다. 이처럼 WPS는 평화유지의 핵심 어젠더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히,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회원국가들이 이행할 수 있는 현실방안으로 진화해 왔다.

본고(本稿)에서는 유엔 공식문서 및 각종 문헌을 통해 유엔의 WPS 정책 발전 및 변화를 고찰하고 정책의 변화가 현장의 평화유지활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WPS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여성과 인권

유엔이란 국제기구의 창설은 많은 의미를 가져왔다.

먼저 1945년 제정된 유엔헌장은 특히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주요 목표와 원칙을 제공하였다. 우선 그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대소 국가의 남녀 사이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있다.<sup>1)</sup> 아울러 헌장 제 1조는 인권과 종교, 성, 언어, 또는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과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헌장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넓은 관점에서의 인권이란 개념만 헌장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헌장내 조항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과 한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사이에 충돌의 가능성은 존재했다.

유엔헌장을 근거로 1948년 유엔은 약 2년간의 논의 끝에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

1) 박흥순 등 4명,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APECIU, 2015, p. 25.

선언’은 인권이 국제적 관심이자 회원국이 이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해야 한다는 모호한 유엔 헌장 조항에서 더 나아가 아무런 차별없이 ‘세계의 모든 국민과 국가가 성취를 목표로 하는 공통의 인권기준’을 선언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2)</sup>

세계인권선언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있어 국가적·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인권활동에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여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국제규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인권선언내 고문, 인종차별 금지 조항들이 특정조약에 포함되기 전부터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간주하여 이행해 왔다고 하여 국제관습법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sup> 1966년 유엔 총회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을 승인하였고 1976년이 되어서야 이 규약들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sup>4)</sup> 이렇게 만들어진 세 국제규범은 유엔이 국제 인권협약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 인권협약 체계는 독립된 9개의 구체적 인권 분야에 있어 각각 국제협약을 만들고 해당 위원회를 두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중 1974년 채택된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로 표기)’은 성에 대한 편견에서 발생한 여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바 없고 앞서 기술한 두 국제규약에서는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라는 일반적 용어로 성(性) 간의 차별을 금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CEDAW는 여성과 남성 평등의 관점에서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 무엇인지 더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해 CEDAW 제1조(Article.1)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sup>5)</sup>

“결혼 여부와도 관련 없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2) 앞의 책, p. 26.

3) UNOHCH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New York and Geneva: UN, 2012, p. 3.

4) 세계인권선언,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통칭하여 ‘국제권리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라고 하며 국제사회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보장을 공언한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5) UNOHCH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New York and Geneva: UN, 2012, p. 9.

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권과 기본 자유권이 평등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경우 여성이 인정하거나 누리거나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결과 또는 의도를 가지는, 성(sex)을 토대로 형성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다.(제1조)”

CEDAW는 차별철폐 일반으로부터 동등한 참정권 행사(제7조),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에 참여할 권리(제8조), 교육·고용·보건서비스 이용·가족혜택 및 사회생활,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권리(제10조-14조), 법 앞에서의 평등, 거주선택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 결혼할 권리, 혼인 최소연령 규정 의무 등(제15조-16조) 등이 주요내용으로<sup>6)</sup> 기본적 인권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본 인권으로서의 여성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각 국가들이 권리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CEDAW는 여성에 대한 폭넓은 차별이 존재함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이러한 차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존엄성의 존중,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로 인식했던 것으로 여성관련 모든 유엔 프로그램의 초석이자 ‘여성의 권리장전’이라 일컫고 있다. 이 협약 이후 국제사회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시민조직 참여자들이 모여 여성 권리 강화와 성평등에 있어 각국 정부의 책무를 강조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을 발표하였고 12개 핵심분야를 선정, 그에 따른 목표와 조치를 상정한 ‘베이징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베이징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CEDAW와 베이징 선언 등은 유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성평등,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권한 강화 등 여성 인권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

1990년대 이전의 성 평등, 여성과 인권은 유엔 내부에서도 총회, 경제사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도되었고 비정부기구에 의한 활동이 왕성하였으나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l)는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뿐 아니라 인권문제 자체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sup>7)</sup> 이후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사태,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 등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인권문제는 안보리 승인에 의한 개입

6) 외교부, “여성차별철폐협약”,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검색일: 2022.05.22.).

7) 1946년 설립된 경제사회 이사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총회 산하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 2006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로 대체), 인권 관련 협약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Committees) 등이 있다. 냉전시대 안보리가 인권문제에 관여한 것은 남부 로디지아(현재 짐바브웨)와 남아공 단 두 사례뿐이다.

과 평화유지활동을 통해서 뿐 아니라 평화유지활동의 위임명령(mandate)를 통해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냉전이후 내전과 지역분쟁이 증가하면서부터이다. 즉, 인권유린사태가 안보개념의 확대, 인권 규범의 인식확산 등에 따라 단순히 인권문제 차원이 아닌 국제평화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8)</sup> 안보리는 인권규범을 수용해 왔고 인권분야 비정부기구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 소년병에서부터 여성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언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sup>9)</sup> 여성 인권문제가 안보리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여성이 왜 평화와 안보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한 이유와 야기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처음 다룬 것은 2000년 10월, 유엔 안보리에서 평화와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이하 WPS로 표기)에 관한 결의안 제1325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이 결의안은 분쟁간, 또는 분쟁이후 여성과 소녀의 권리보호를 위해 인권법을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분쟁예방과 해결 및 평화유지, 평화구축 단계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 평화와 안보 유지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equal) 참여 및 온전한 관여(invovement)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베이징 선언과 지속이행 결과문서<sup>10)</sup>에 포함된 내용 이행을 1325에서 재강조함으로써 유엔 현장으로부터 세계인권선언, CEDAW 등 여러 여성인권 관련 선언, 규약, 협약내용이 1325에서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간혹 WPS와 1325 결의요인을 분쟁상황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성폭력 피해, 평화유지요원의 성착취 및 학대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이는 WPS어젠더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유엔 창설 이래 유엔 체계(UN System), 회원국 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조직이 면면히 발전시켜 온 여성 인권을 분쟁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적용하고 진전시킬 것인가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좀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박흥순 등 4명, 앞의 책, p. 38.

9) Margaret P. Karns, Karen A. Mingst and Kendall W. Sti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olitics & Progeresses of Global Governance*, London: Lynne Rienner, 2015, p. 485.

10) 총회 특별회기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문서.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2000. 6.5~9).

## 2. 여성과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국제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분쟁관련 해결수단으로 유엔에서 예산과 인원을 가장 많이 투사하는 활동이 바로 평화유지활동이다. 2021~2023년 효과적인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수립한 A4P+는 7개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각 담당과제를 주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하였다. 예를 들면 A4P+ 우선과제 중 ‘주재국과의 협력’ 과제에서 임무단 위임명령과 전략에 대한 주재국 동의, 주재국 책임에 대해 주재국(정부 및 지역사회)과의 명확하고 개방적 대화라는 결과를 예상결과로 도출하기 위해 이를 주도할 책임을 해당 임무단장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WPS어젠더는 A4P+ 7개 우선과제 전체를 관통한다. 따라서 해당 임무단장은 ‘주재국과의 협력’ 과제를 이행하면서 WPS어젠더를 해당 과제내에 항상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안보리 결의 제1325호와 그 후속 결의를 통해 WPS어젠더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여성의 권한강화(Women’s empowerment), 여성의 참여(Women’s participation), 여성보호(Women’s protection), 성평등(Gender equality)이며 이는 평화유지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 군, 경찰요원뿐 아니라 평화유지활동 전개에 동의한 주재정부 관료, 현지 주민, 행정체계 등에 모두 적용된다. 특히 여성참여는 WPS 최초 안보리 결의 제1325호로부터 가장 최근의 제1538호(S/RES/2538(2020))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현장기반 활동을 증가하기 위한 군 옵서버, 경찰, 인권 및 인도주의 요원의 증가, 분쟁해결과 평화과정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참여증가를 촉구하기 위해 각 국가별 행동전략계획(strategic plan of action)을 작성하여 이행하라고 권고한 것은 1325호에서의 두드러진 내용이었다. 이에 회원국들이 속속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도 현재 제3기 국가 행동계획(2021~2023)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A4P+에서는 단순히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수적 증가를 넘어 관리직책에 더 많은 여성을 모집하고 교육기회를 증가시키며, 평화유지임무단내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요소라고 보았다. 주재국 여성의 완전한, 동등한, 의미있는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여성 지도자들, 여성조직과 더 체계적으로 접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WPS어젠더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안보리 결의안 제2538호는 2020년 채택되

11) UN, “Action for Peacekeeping+Plan”, [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action\\_for\\_peacekeeping\\_plan\\_18april\\_2022.pdf](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action_for_peacekeeping_plan_18april_2022.pdf)(검색일: 2022. 5.22).

었다. WPS관련 11번째 결의안인 셈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WPS어젠더와 우선순위 이행을 위해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동등한,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증진한다.
- 성관점을 주류화(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하고 평화유지활동 전 수준과 고위 리더십 직책을 포함한 전 직책에 걸쳐 민간 및 군경 여성인원 증가에 노력한다.
- 평화유지활동에서 여성참여 증가는 모든 회원국과 사무국의 공동책임이자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여성 군경요원에게 교육, 훈련, 역량 배양에 있어 동등한 접근기회를 부여하고 기회를 조직화하며, 평화유지에서 여성참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장벽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리더십 직책에 여성증가 중요성을 인식하며....임무단 계획 수립과 이행의 전 단계에 걸쳐 여성의 요구사항과 참여를 보장한다.
- 회원국은 평화유지활동에 군경 여성파견을 증가하기 위해 고위 직책을 포함한 여성 요원의 파견기회에 대한 정보 및 접근기회를 제공한다.
- 회원국은 군경 평화유지요원의 모집, 전개, 승진의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한다.
- 회원국의 군 및 경찰 조직내 여성 참여를 증가시킬 방안을 고려한다.
- 회원국은 자녀돌봄과 기타 관련요구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대책을 수립한다.
- 회원국은 모집, 유지, 교육 및 전개에 관한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군경 여성평화유지 요원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 회원국과 유엔 사무국은 여성 평화유지요원을 위해 안전, 성(gendr)을 고려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임무단내 여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숙소, 위생, 보건, 보호장비 등이다.
- TCC/PCC<sup>13)</sup>는 파견하는 모든 군경 인원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제공한다.
- 회원국, 유엔 사무국, 평화유지임무단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 교환, 참여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전직, 현직, 향후 여성 평화유지요원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한다.

12) 안보리 결의안 제2538호(S/RES/2538(2020)), pp. 1-4.

13) TCC(Troup-Contributing Country)는 병력공여국가, PCC(Police-Contributing Country)는 경찰공여국가를 의미한다.

평화유지활동 전 수준에서,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책에의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수적 증가에는 제한사항이 따른다. 민간인력은 유엔에서 충분히 획득 가능하나 국가별 공여에 의존하는 군경의 경우 국가별 공통적으로 제한사항이 있다. 즉 군경 조직내 여성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결의 2538에서는 회원국이 해당 군 및 경찰 조직내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올라갔다.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임무단 근무여건을 성(gender) 인지적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이다. 레바논 임무단(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은 2022년 1월 엘시 이니셔티브 자금(Elsie Initiative Fund for Women in Peace Operations, EIF)<sup>14)</sup> 지원을 받아 가나부대 여군을 위한 숙소시설, 세정공간 및 복지공간 건설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sup>14)</sup>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비율증가는 단순한 수의 증가가 아니라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역량배양을 수반한다. 현장에서는 주재국 정부기관, 주민과의 교류가 점점 더 요구됨에 따라 여성평화유지요원은 이에 걸맞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뿐 아니라 회원국, 특히 군 및 경찰 공여국가에서는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가. 군경 젠더평등 전략 2018-2028(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5년 유엔 안보리는 2020년까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 및 경찰 조직내 여성 수를 두 배로 증가할 것을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 제2242호를 채택하였다. 본 ‘군경 젠더평등 전략’은 2018년부터 이를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유엔 평화유지국에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본 전략은 안보리 제1325호 결의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평화유지요원의 비율이 작은 이유를 대내·외적 문제로 구분하였는데 대외적 요인이 대내적 요인보다 훨씬 많았다. 식별된 대외적 요인은 회원국,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군경 평화유지

14) EIF는 2019년 UN Women 사무국과 함께 유엔과 캐나다 합동으로 설립한 기금이다. 또한 엘시 이니셔티브는 WPS어젠더를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구상중에 하나이다.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press-release/2022/01/the-united-nations-interim-force-in-lebanon-unifil-receives-funding-from-the-elsie-initiative-fund-to-enable-an-inclusive-environment-in-un-peacekeeping>(검색일:2022.5.22).

15) 이 전략의 적용은 유엔 본부 및 현장임무단에 파견근무하는 군경요원에 적용한다. 다만 법적 지원나 선발, 전개, 귀국방법의 유사성으로 군경 요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파견 법무요원(민간)에게도 적용한다. UNDP 문서, *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 2018,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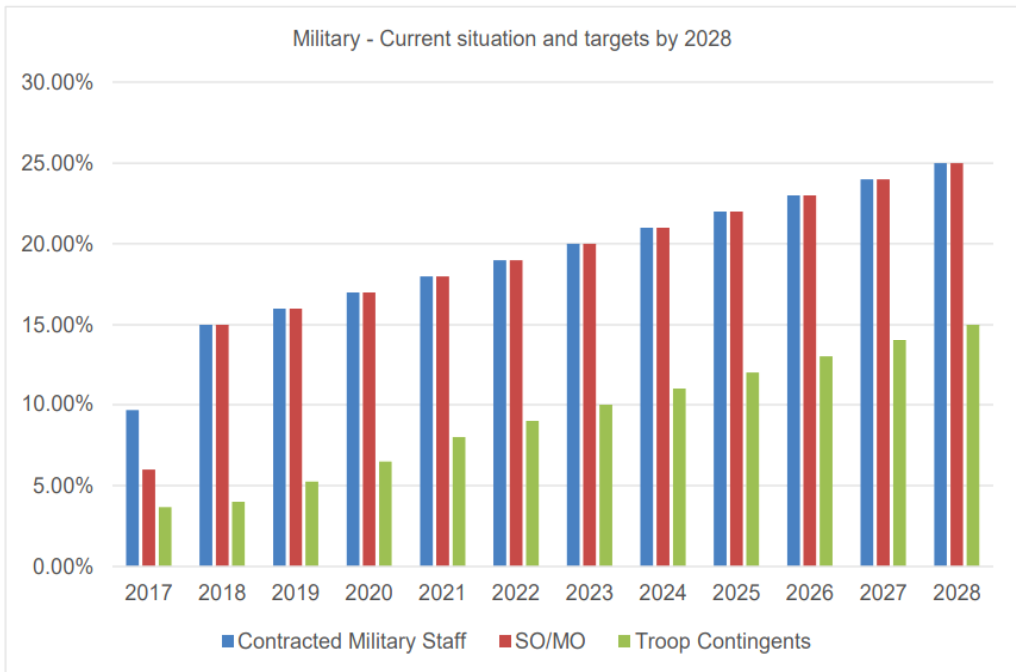
요원과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평화활동국(DPO)이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평화유지활동 참여국은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군경 평화유지요원의 비율증가 방안 수립시 참고사항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증가를 제한하는 대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여성들이 유엔에서의 고용기회를 알지 못하고 또 여성의 역할로 적합한 모델유형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젠더 편향성에 의해 남성 요원에게만 파견기회를 제한하는 회원국이 있다. 셋째, 파견된 평화유지요원 대부분이 한번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12개월을 근무한다. 넷째, 유엔 파견에 필요한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군사참모대(Military Staff College), 경찰대(Police Academy), 유엔 관련 과정 참여를 포함하여 여성을 위한 교육 및 자기계발이 부족하다. 한국의 경우 개인 및 부대 파병요원을 예로 든다면 일정 계급이 되면 군사참모대 입학이 필수 또는 선택이거나 파병전 유엔 관련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다섯째, 군조직은 전투관련 역량을,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또는 기타 치안운영 경험을 요구하는데 이들 일부 TCC/PCC 직책은 남성에게만 가능하거나 최근에 와서야 여성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섯째, 일부 회원국은 파견할 수 있거나 파견을 준비하는 여성 인력이 없다. 일곱째, 일부 임무단에 파견된 교정 담당관의 역할은 자문 및 상담역할로부터 많은 회원국에서 남성이 주로 차지하는 운용역할로 변경되었고 이는 정원을 감소시킨다. 여덟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별인식은 그들이 평화유지를 위한 국가별 선발과정 참여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성은 가족과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 등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여성은 파견기간, 부양가족 연령, 또는 개인적 책임 등으로 인해 파견을 자원하지 않는 개인적 환경이 있을 수 있다.

DPO가 직면한 대내적 제한요인으로는 첫째, 임무단별 파병수당(Mission Subsistence Allowance, MSA)을 포함한 재정 삭감은 특히 여성 군경 개인파견 자처럼 안전한 숙소 또는 현장에서 단독 근무시 부가적인 보호장비를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현장 근무가 덜 매력적이다. 둘째, 유엔 전제조건 또는 해야 할 직무설명에 불필요한 자격요건 또는 무의식적으로 젠더 편향적 문구를 포함하여 여성의 지원과 파견을 제한한다. 한국군의 유엔 파견선발 공고시 개인 파견자 추천공고문의 경우 'UN 평화유지활동 여군 확대정책에 따라 여군 참여기회 보장'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으나 부대 파견자 선발공고문은 이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두 공고문을 비교시 개인파견자 선발의 경우만 여성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여성은 파견시 혼자 고립되거나 성

희롱 또는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넷째, 현장 임무단은 여성에게 충분한 안전, 숙소, 시설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sup>16)</sup> 현장 임무단의 근무여건은 지역으로 갈수록 열악하고 개인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증가를 상정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이 보장된 숙소, 개선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은 여성 파견지원자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본 군경 젠더 평등전략은 WPS어젠더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을 군 개인파견자의 경우 전체 대비 25%, 부대파견자의 경우 전체 대비 15%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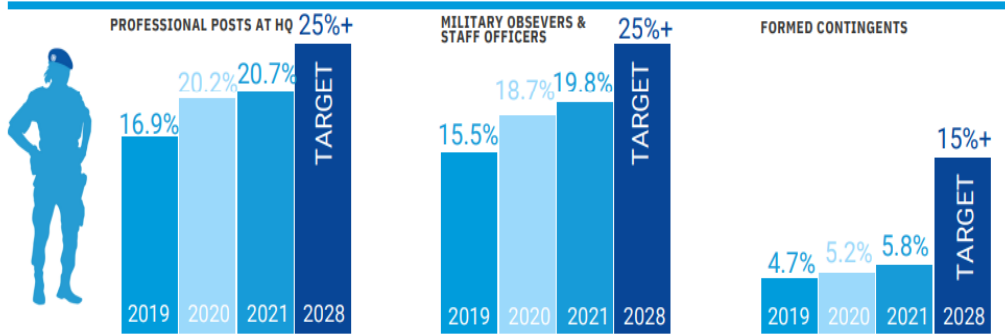
〈표 1〉 2028년까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여성비율 증가 목표치(軍)

출처: 유엔 군경 젠더평등전략(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

2022년 현재 기준, 개인파견 평화유지요원(CMS, SO/MO)은 각각 전체의 19%를 연도목표로 설정하였고 매년 1% 단위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여성 비율을 2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대파견 여성비율 증가는 부대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15%로 설정하였다.

16) Ibid, p. 3.

MILIT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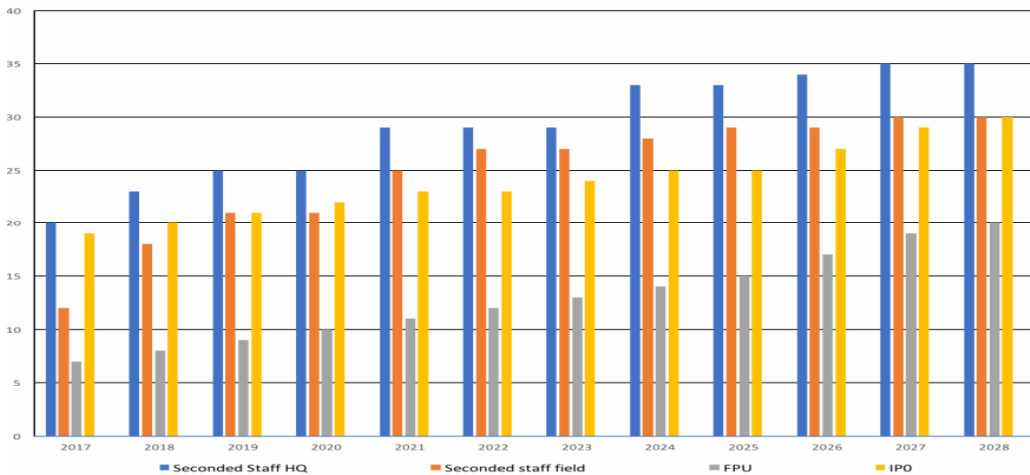


〈표 2〉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여성비율 증가목표 달성치(軍)

출처: 유엔 평화유지 홈페이지<sup>17)</sup>

이러한 목표에 대해 2021년 12월 기준, 개인파견자 목표치 19%를 초과하여 각각 20.7%(유엔 본부), 19.8%(임무단)에 도달하였지만 부대파견의 경우 2021년 목표치 7%에 비해 5.8%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여성장교가 고위직, 즉 군사령관에 임명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 미만으로 여성 대표성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sup>18)</sup>

Police Division Current Situation & Targets by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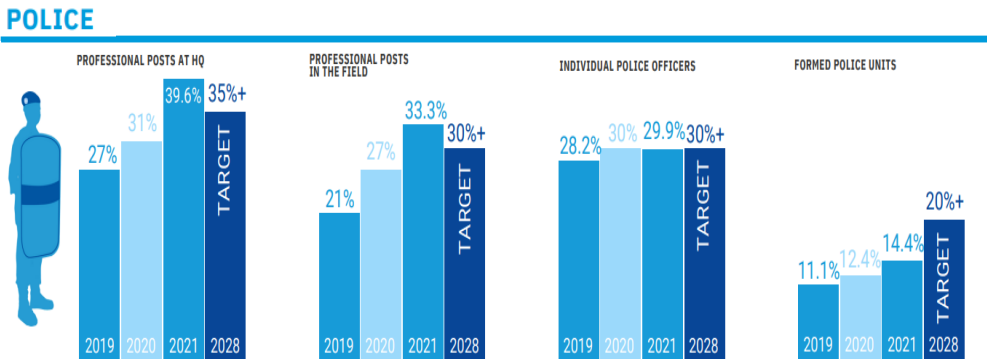
〈표 3〉 2028년까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여성비율 증가 목표치(경찰)

출처: 유엔 군경 젠더평등전략(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

17) <https://peacekeeping.un.org/en/gender>(검색일: 2022. 5.23).

18) 최초의 여성 군사령관은 전통적 평화유지활동 성격을 띤 사이프러스 임무단에 2016년 파견되었다.

2022년 현재 기준, 개인파견 평화유지요원은 유엔 본부 여성비율을 29%, 현장임무단 파견 여성비율을 22%를 연도목표로 각각 설정하였다. 전투경찰부대(Formed Police Unit, FPU)는 12%, 개인파견경찰(IPO) 비율은 23%로 목표설정을 하였으며 2028년에는 개인 파견여성비율을 30~35%로, FPU는 20%까지 여성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표 4〉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여성비율 증가목표 달성치(경찰)

출처: 유엔 평화유지 홈페이지

이러한 목표에 대해 2021년 12월 기준, 개인파견자 목표치 중 유엔 본부 29%, 임무단 참모 25%, 개인파견 경찰(IPO) 23%를 훨씬 초과하여 유엔 본부 39.6%, 임무단 참모 33.3%, 개인파견 경찰(IPO)은 29.9%에 도달하여 그 목표를 달성했다. 전투경찰부대 파견의 경우 2021년 목표치 11%에 대해 14.4%에 도달하여 경찰은 여성평화유지요원 달성치가 목표치를 상회하였다. 경찰은 리더십 직책은 전투경찰부대는 P5-D2급으로, 개인파견자의 경우 P3-D2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전투경찰부대는 리더십 직책의 29%, 개인파견자는 리더십 직책의 16%가 여성으로 군과 비교시 WPS어젠더 이행정도가 양호하지만 아직 성평등(gender parity)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sup>19)</sup>

#### 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C-34) 보고서와 WPS어젠더

C-34로 알려진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유엔 평화유지와 관련하여 전년도 권고사항 이행뿐 아니라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국)에 관련 권고안을 제시해 왔다. C-34는 평화유지활동, 분쟁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에서 여성이 상당

19) UNDPO문서, op.cit, p. 5.

히 기여해 온 것을 인정하며 여성평화유지요원의 존재는 지역사회가 임무단에 대해 큰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무엇보다 위임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했다고 보았다. 이는 A4P, A4P+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숙련된 여성평화유지요원이 유엔 본부와 현장임무단에서 전략적 수준에서부터 작전적 수준까지 포진하고 전 직업군에서 더 많이 운용되는 것은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C-34는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 평화활동국을 포함한 사무국, 회원국, 그리고 주재정부(host country)에게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는데 먼저 현장의 평화유지 임무단에게는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임무단 전체활동에 걸쳐, 그리고 분석·계획·이행·보고 전단계에 통합하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임명령을 이행시 공통 관심사로 고려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성 주류화란 모든 평화유지활동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해, 즉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무단 계획 및 이행 모든 단계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의 의미있고 효과적인 참여를 강화하도록 사무국과 회원국이 지속 노력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사무국과 회원국가, 기타 해당지역 지역기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더 많은 여성 평화유지요원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 시설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요청을 여성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여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현실적 방안은 최근 추세이지만 유엔 평화유지 예산이 점점 축소되는 가운데 이는 장기적 계획 또는 회원국뿐 아니라 기부국가(자)의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과거 유엔 임무에 여성 참여를 증가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혼성으로 구성된 교류팀(engagement team)을 운영해 왔다. 사무국은 특히 평화유지활동에서 더 많은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한 방편으로 보병대대 조직내 지휘구조 내에 이 교류팀의 편성을 신속히 제도화하였고 팀의 역할, 훈련, 조직, 장비를 표준화하였다.<sup>20)</sup> 사실 교류팀은 특히 현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유용한 정보 획득, 조기 경보, 작전적 효과달성을 위해 조직되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교류팀은 각 대대 조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TCC는 교류팀 편성없는 보병대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견이 불가능하다고는 점에서 한국에

20) UN총회 특별위원회(C-34)문서,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2021, p. 48.

서도 2022년 발간된 유엔 보병대대 교범을 참고하여 향후 교류팀 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sup>21)</sup> C-34는 사무국과 회원국에 지휘관, 참모요원, 중요한 전문 직책의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더 많은 여성 평화유지요원이 참여하기 위해 훈련, 전문가 과정을 통해 기술을 연마할 것을 요청하였다.

C-34는 젠더 자문관(gender advisor)의 역할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젠더 자문관은 성 인지적 관점을 임무단활동에 통합하는데 있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DPO에게 전략적 수준에서 조언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직책이다. 젠더 자문관의 임무는 평화유지활동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현장임무단 수준에서는 본부에 위치하여 리더십을 조언하는 것이다. 임무단내 군, 경찰, 민간 구성조직에도 젠더 자문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젠더 담당관(gender focal point)이 편성되어 실무 모든 영역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젠더 자문관과 담당관들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임무단 위임명령 이행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키고 성 주류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WPS어젠더 이행에 있어 C-34의 연례 권고사항은 WPS 결의안, 군경 젠더평등 전략에서 다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무국, 회원국, 주재정부들의 이행을 촉구한다. 다만 해당년도 후반에 권고사항의 이행수준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Ⅲ. 결 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WPS어젠더 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여성평화유지요원 참여비율 확대이다. 유엔은 2028년까지 군의 경우 부대파견은 전체의 15%, 개인 파견은 25%를 여성평화유지요원으로 구성할 목표를 세웠다. 이에 비해 올해 2022년 목표는 부대파견은 10%, 개인파견은 19%가 목표이다. 현재 한국은 부대파견은 5%, 개인파견은 17%가 여성이며 특히 부대파견 여성 평화유지요원 비율은 목표의 50%에 그쳐 목표대비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유엔처럼 매년 1%씩 비율을 증가시킨다해도 2028년까지 목표달성이 요원하다. 첫째 부대파견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자가 많아져야 한다. 개인파견 여성 선

21) UNDPO문서, op.cit, p. 8.

발 공고문에 포함된 홍보문구처럼 부대파견도 ‘UN 평화유지활동 여군 확대정책에 따라 여군 참여기회 보장’을 널리 알린다면 지원자들이 특정직책에만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 참여기회 보장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에게만 우선 특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엔본부 군사실(Office of Military Affairs, OMA)은 해당 군직책의 지원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자격요건이 동등(equal)하거나 또는 뛰어난 경우 여성을 채용한다. 유엔본부나 현장 임무단 군 조직에서 파견자들이 연장신청을 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격요건과 임무수행능력이 동등하거나 또는 뛰어난 경우 여성의 연장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여성에 우선기회를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여성비율 확대 및 교육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다. 둘째, UNFIL 동명부대는 적어도 여성비율이 50%인 교류팀(Engagement Team, ET) 편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모든 보병대대의 일부로서 ET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유엔본부의 정책이 시행시기에 있어 다소 늦추어질 수 있겠으나 현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ET 구성 및 여성인력 획득, 교육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비율 증가에 발맞추어 현재 UNFIL, UNMISS에 파견한 동명과 한빛부대 파견지내 숙소, 복지공간 등을 조기에 확충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서 복귀한 여성평화유지요원의 의견을 지속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지원자 수가 많아지고 경쟁력있는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렴은 형식적이 아니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견하는 군 옵서버 및 참모장교는 대위급 이상을 선발한다. 군경 젠더평등 전략 2018-2028에 따르면 현장임무단에 근무하는 군 옵서버 및 참모장교의 경우 8년 이상 군경력을 갖춘다면 준위 또는 중위급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많은 여성인력 획득을 위한 유엔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지원계급의 폭을 확대할 경우의 장점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여성평화유지요원 비율증가에 따라 더 많은 인원들이 파견을 나갈 것이 예상되지만 이들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성요원의 비율 증가는 단순한 수의 증가가 아니라 많은 점을 시사한다.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자신의 직책을 수행할 임무수행능력이 구비되어야 가능하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접촉, 현지 여성 및 여성조직과의 빈번한 교류를 요구한다. 평화유지활동 계획수립단계와 의사결정간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실무능력뿐 아니라 WPS

어젠더 이행에 필요한 유엔 성평등정책을 이해하고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며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한국은 2023년부터 UN Women과 함께 ‘유엔 여군교육과정(Femal Military Officer’s Course, FMOC)’을 개최한다고 공약한 바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sup>22)23)</sup>

고위급 직책 또는 의사결정권한 직책에 여성인력 임명은 유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군 파견부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군 및 한국사회에 잔존하는 젠더 관점, 유엔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이를 지속추진할 추진세력 부재, 내부저항 등의 고려요소를 상정하여 장기적,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2015년 OMA는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전세계 여성 군파견요원, 과거 참여했던 인원들간 상호 경험공유, 정보 교환, 상담, 훈련 및 지지 공간 구축 목적으로 ‘여성 군 평화유지요원 네트워크(The Female Military Peacekeepers Network)’를 창설하였다. 이 네트워크에서 여성 파견요원들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엔 평화활동에서 모든 계급에 걸쳐 여성 군 평화유지요원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다.<sup>24)</sup> 한국 군내에도 전, 현직, 또는 향후 파견예정인 여성 평화유지요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소통하는 공식 ‘공간’을 마련하여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WPS어젠더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는 WPS어젠더이다. WPS는 평화유지활동이 전개한 지역과 국가에 성인지적 관점,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인권을 보장하여 성(gender)간 차별을 철폐한 ‘성평등’이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속에 있다고 본다.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을 향해, 다른 회원국을 향해 WPS를 외치지만 모든 국가가 WPS어젠더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2) 국방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nd9090/222590957795>(검색일: 2022. 5.22).

23)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견 전 남녀 파견요원들은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파견 전 교육과정을 거치며 이때 WPS어젠더에 대해 수업을 받는다.

24) <https://www.facebook.com/groups/UN.female.military.peacekeepers.network/>(검색일: 2022. 5.20).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박홍순 등 4명,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UN인권(현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APECIU, 2015.
- Margaret P. Karns, Karen A. Mingst and Kendall W. Sti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olitics & Progresesses of Global Governance*, London: Lynne Rienner, 2015.

### 2. 유엔문서

- UNOHCH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System*, New York and Geneva: UN, 2012.
- UNGA, “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2000. 6.5~9).
- 안보리 결의안 제2538호(S/RES/2538(2020)).
- UNDP문서, *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 2018.
- UN총회 특별위원회(C-34)문서,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2021.

## 인터넷 홈페이지

### 국 내

- 외교부, “여성차별철폐협약”,  
[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https://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0)(검색일: 2022. 5.22.).
- 국방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nd9090/222590957795>(검색일: 2022. 5.22).

### 국 외

- UN, “Action for Peacekeeping+Plan”,  
[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action\\_for\\_peacekeeping\\_plan\\_18april\\_2022.pdf](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action_for_peacekeeping_plan_18april_2022.pdf)(검색일: 2022. 5.22).
-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press-release/2022/01/the-united-nations-interim-force-in-lebanon-unifil-receives-funding-from-the-elsie-initiative-fund-to-enable-an-inclusive-environment-in-un-peacekeeping>(검색일: 2022. 5.22.).
- <https://peacekeeping.un.org/en/gender>(검색일: 2022. 5.23).
- <https://www.facebook.com/groups/UN.female.military.peacekeepers.network/>(검색일: 2022. 5.20).

# 효과적 INSTEX 수행 방안에 대한 연구

-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ways for the conduct of INSTEX  
-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nd the application of Military  
Planning Proces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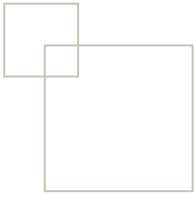
해군 중령 채연정  
CDR Chae, Yeonjeong



## 요 약

UN 참모과정의 핵심인 통합참모연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군사 계획수립절차를 적용한 통합참모연습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5단계로 구성된 UN의 표준 군사 계획수립절차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각 단계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UN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유능한 참모 장교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군사계획수립절차 수행 능력은 유능한 참모 장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이다. 군사계획수립절차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과정으로서, 참모 장교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공통역량이기 때문이다.



All earlier studies on the Integrated Staff Exercise, the essence of the United Nations Staff Officer Course, emphasized that the Integrated Staff Exercise should be conducted taking steps of the Military Planning Process. But there were no studies on the practical way required to apply the Military Planning Process to the Integrated Staff Exercis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describes each five steps comprising UN's *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and explains how each steps are connected systemically.

The UN continues to emphasize the acquirement of competent staff officers for its successful missions, and competent staff officers should have the knowledge of Military Planning Process and should know how to apply it to the real situation. That's because the Military Planning Process is a problem-solving methodology that any staff officers must have regardless of their staff functions.

Keywords : INSTEX(Integrated Staff Exercise), MPP(Military Planning Process), staff officer, capability

## **ABSTRACT**



## 효과적 INSTEX 수행 방안에 대한 연구

–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ways for the conduct of INSTEX  
–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and the application of Military  
Planning Process –

해군 중령 채연정<sup>1)</sup>

CDR Chae, Yeonjeong

###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평화활동센터의 UN 군 옵서버 / 참모장교 과정에 입과한 인원들이 교육 과정 중 하나인 INSTEX(Integrated Staff Exercise, 통합참모연습)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 검토에서 INSTEX와 군사계획수립절차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 UN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5단계를 적용하여 INSTEX를 수행하는 방법을 해설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UN에서 군사계획수립절차 수행 역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합참 정보본부 합동정보분석과 분석관(2022년 하반기 UNIFIL에 정보수집과장으로 파병 예정)

## II.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의 제기

### 1. 선행연구 검토

INSTEX 시행 간 군사계획수립절차 적용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발간하는 『PKO 저널』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벵트 오케 폴케손은 2015년 「UN 참모과정 INSTEX 도입 및 향후 발전방안」에서 무엇보다도 INSTEX가 군사계획수립절차 수행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INSTEX 실시 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는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따라 INSTEX를 진행하는 가운데 참모 상호 간 그리고 여러 롤 플레이어들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UN 임무단에서 수많은 민간기관들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요소와 작전 경험이 부족한 한국군은 INSTEX를 통하여 민간, 경찰 그리고 다른 UN 기관들과의 협조가 UN 임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사전에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장수는 2015년 「SWEDINT<sup>2)</sup> UNSOC<sup>3)</sup> 과정 교육참가 결과」에서 UN 임무단 참모장교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숙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습으로서 INSTEX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INSTEX를 통하여 UN 임무단에서 공동의 위임명령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민간조직의 기능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해림은 2016년 「국제평화활동센터 통합참모연습(INSTEX) 소개」에서 INSTEX의 기반이 되는 것이 군사계획수립절차라고 하면서, INSTEX를 수행하며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INSTEX를 통하여 참모 장교 간 영어를 사용하여 내가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국제적인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INSTEX를 통하여 UN의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조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UN 임무단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외국군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군사계획수립절차에 기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SWEDINT(Swedish Armed Forces International Centre) : 스웨덴군 국제센터

3) UNSOC(United Nations Staff Officer Course) : UN 참모과정

## 2. 문제의 제기

먼저, 연구자는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제공한 교육을 통하여 UN의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득하였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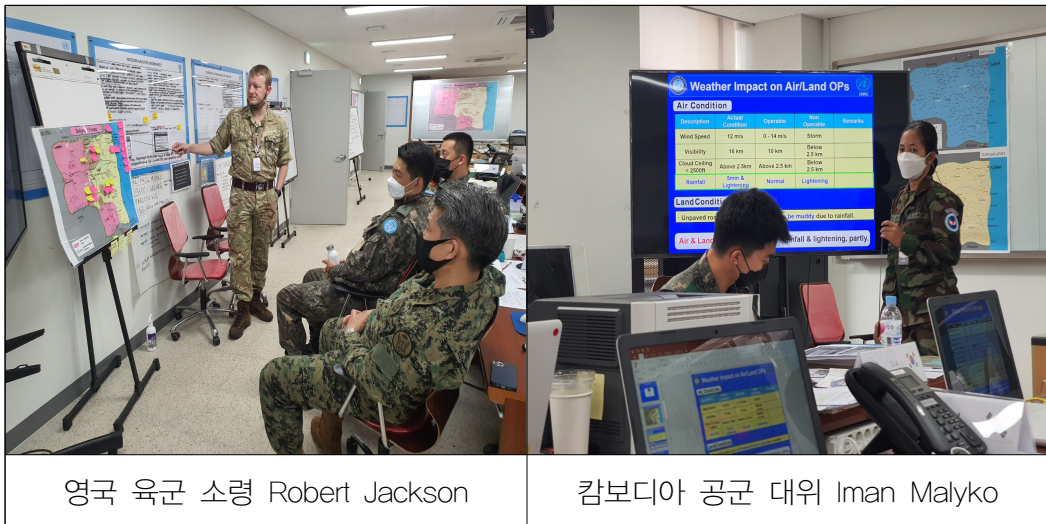
INSTEX 전에 이미, UNHCR 한국대표부 인원과 ICRC 한국사무소 대표가 국제평화활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생장교들이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였다. 특히, UN 임무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기관과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INSTEX 기간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UNHCR 한국대표부, ICRC 한국사무소, 그리고 경찰대 국제경찰 교육훈련센터의 인원들이 국제평화활동센터를 다시 방문하였다. 이때에는 이들도 분쟁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상황을 가정하여 INSTEX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장교들로부터 전반적인 작전 상황을 청취한 후 상황과 관련된 소속 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학생장교들은 UN의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득하는 것은 물론, 실제 UN 임무단에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었다.



<그림 1> INSTEX에 동참한 유관기관 인원들

또한, 연구자는 국제평화활동센터가 학생장교들이 영어를 사용하며 외국군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모든 교육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파병 전 교육을 받는 장교들이 UN 임무단에 갔을 때 다양한 악센트가 섞여 있는 영어에 미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강사를 통한 원어민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영어 구사가 가능한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수탁장교들을 수차례 초빙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INSTEX 기간에는 <그림 2>와 같이 태국(대령), 베트남(중령), 영국(소령), 캄보디아(대위) 장교들과 지휘관 및 참모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UN 임무단의 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



영국 육군 소령 Robert Jackson

캄보디아 공군 대위 Iman Maly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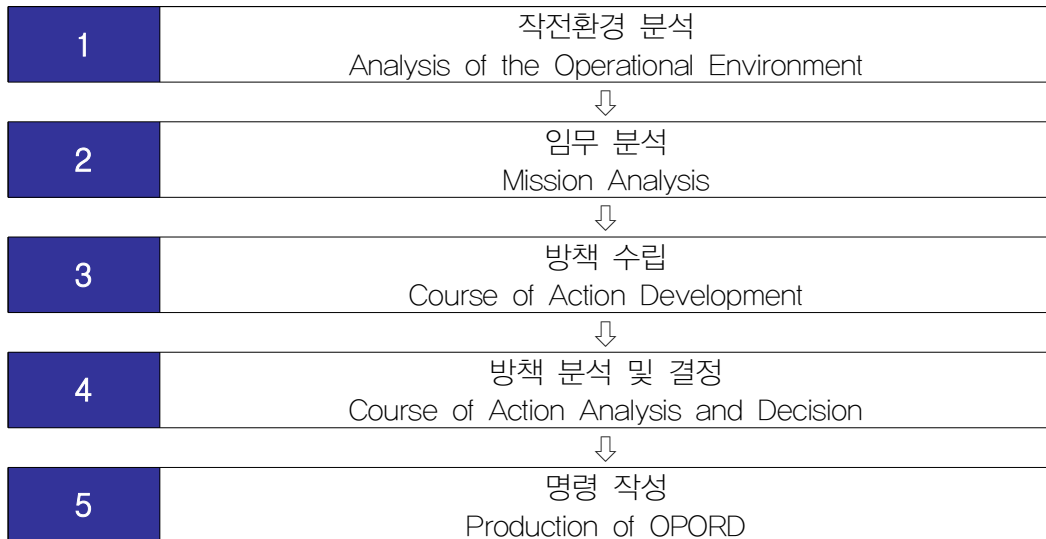
<그림 2> INSTEX에 동참한 외국군 장교들

한편, 연구자는 학생장교들이 INSTEX를 수행하면서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STEX 수행 전 군사계획수립절차 과목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이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지만, INSTEX를 수행하면서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이에 연구자는 ‘INSTEX 수행 간 군사계획수립절차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 Ⅲ.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대한 이해와 적용

#### 1. 문제의 식별

INSTEX에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군사계획수립절차가 ‘임무를 분석하고, 다수의 방안을 수립·분석·비교하며,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여 명령을 작성하는 일련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절차’<sup>4)</sup>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절차의 정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들’<sup>5)</sup>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뿐만 아니라, 각 단계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즉, 군사계획수립절차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각 단계를 거치며 진행해 나가는 문제해결과정으로, 과정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 5단계<sup>6)</sup>

4) 『합동교범 5-0) 합동기획』 (합참), p. 4-1

5) <https://www.collinsdictionary.com/ko/dictionary/english/process>(검색일 : 2022. 5. 5.)

6)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둘째, UN에서도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단계가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군사교리와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 UN의 표준 군사계획수립절차를 다루고 있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는 <표 1>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 군의 『합동기획』과 미군의 『Joint Planning』에 따르면 군사계획수립절차는 <표 2>와 같이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우리 군의 군사계획수립절차 7단계<sup>7)</sup>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우리 군과 미군의 7단계 군사계획수립절차에 익숙해져 있는 인원들이 INSTEX 수행 간 처음으로 UN의 5단계 군사계획수립절차

7) 『(합동교범 5-0) 합동기획』,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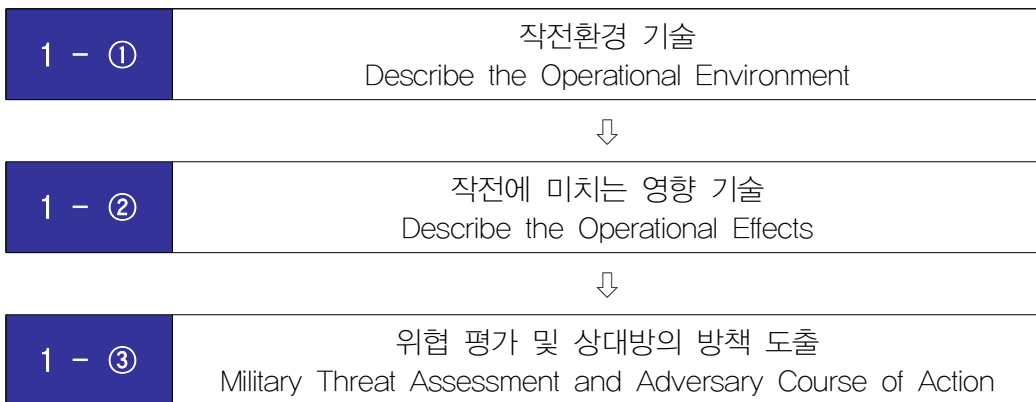
를 적용하면서 혼란을 느꼈다. 군사계획수립절차의 각 단계는 다시 세부 단계들로 구성되는데, 7단계와 5단계 간 세부 단계 구성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강조했다듯이 군사계획수립절차는 각 단계를 거치며 진행해 나가는 문제해결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이를 INSTEX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UN의 5단계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따른 INSTEX 수행

이 연구는 UN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를 기준으로 INSTEX 일자별 중점 수행 과제였던 군사계획수립절차의 각 단계를 해설한다. INSTEX는 일자별로 군사계획수립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며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출했던 교훈들을 함께 기술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우리 군의 『합동기획』의 관련 내용들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한편, 군사계획수립절차의 각 단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해설을 부가하여 군사계획수립절차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가. (1단계) 작전환경 분석

INSTEX 1일차 과제는 군사계획수립절차 1단계인 ‘작전환경 분석’(Analysis of the Operational Environment)이다. 작전환경 분석의 목적은 작전을 시행할 지역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표 3> 작전환경 분석의 3단계<sup>8)</sup>

8)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먼저, 작전환경을 기술하기 위하여 작전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범주화한다. 범주화의 목적은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는 작전환경 기술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리(Geography), 경제(Economic situation), 인구(Population), 인도적 상황(Humanitarian situation), 분쟁 상황(Conflict), 정치(Political System in the Country), 군 및 무장세력(Armed Forces and Armed Groups)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어, 각 참모들은 작전환경에 대한 사실들(raw facts)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들(the effects of those raw facts on the operations)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우기가 ○월부터 ○월까지라는 것이 작전환경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비포장도로가 흙탕길이 되어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제로 INSTEX를 수행하면서 교수들은 학생장교들에게 작전환경 기술과 병행하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작전환경 기술과 이것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방책을 도출한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는 평화활동에서 마주하게 될 상대방(adversary)에 대한 위협 평가가 일반적인 다른 군사작전에서의 위협 평가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UN 임무단이 활동하는 지역은 대체로 상황이 유동적이고, 상대해야 하는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비국가행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 상대방의 관점에서 작전환경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이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장 가능성 높은 방책과 가장 위험한 방책을 도출한다.

군사계획수립절차의 1단계는 작전환경 분석이지만, 이는 1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획수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전환경은 지속적으로 구체화 될 것이고, 이 구체화 된 내용은 계획수립의 전 단계에 걸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나. (2단계) 임무 분석

INSTEX 2일차 과제는 군사계획수립절차 2단계인 ‘임무 분석’(Mission Analysis)이다. 임무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임무 진술로, 다음 <표 4>와 같이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표 4〉 임무 분석의 7단계<sup>9)</sup>

먼저, 임무 분석의 첫 단계로 앞에서 시행했던 작전환경 분석을 검토(Review the AOE)하는 것은 최신화된 변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략지침 분석(Review directives and mandate)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한 위임명령(mandate), 평화활동국 사무차장의 지시(USG for Peace Operations'

9)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directives),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의도(SRSG's Intent)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위임명령·지시·의도 등은 군사계획수립절차 2단계의 최종 목표인 임무 기술에 필요한 상급 기관들의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급 기관으로부터 하달된 전략지침들은 군사계획수립에 필요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사계획수립을 통하여 상급 기관의 전략지침을 구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를 분석해야 한다.

지휘관 최초 계획지침 검토(Draft Commander's Intent)<sup>10)</sup>는 상급 기관의 전략지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관이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계획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세부적인 과업 등을 다루지 않고, '목적'(Purpose), '방법'(Method) 그리고 '최종상태'(Endstate)의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목적'은 작전을 수행하는 이유이고, '방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식이며, '최종상태'는 군사작전의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성공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다.

지휘관 최초 계획지침 검토는 군사계획수립의 방향만 제시하고, 수행해야 할 과업을 다루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은 지휘관 최초 계획지침 검토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업을 세부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지휘관의 계획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군사계획수립을 진행한다. 과업 식별 및 분석은 과업을 '명시과업'(Specified tasks), '추정과업'(Implied tasks) 그리고 '필수과업'(Essential tasks)과 같이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진행한다. 명시과업은 상급 기관의 전략지침에 분명하게 제시된 과업으로, 구체적으로 하달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다. 추정과업은 상급 기관의 전략지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달되지는 않았으나, 명시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과업이다. 추정과업은 상급 기관의 전략지침,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방책 그리고 작전환경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다. 필수과업은 명시과업과 추정과업들을 검토한 후 임무 완수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과업들을 목록화한 것이다. 필수과업을 작성할 때 2단계 임무 분석의 최종 산물인 임무 진술에는 필수과업만 포함된다는 것을 미리 고려한다.

한편, 지휘관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준수사항'(constraints)과 '금지사항'(restrictions)을 식별하고 분석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상급 기관이 우리 부대에 '반드시 어떤 행동을 수행하라'( 'must do' actions)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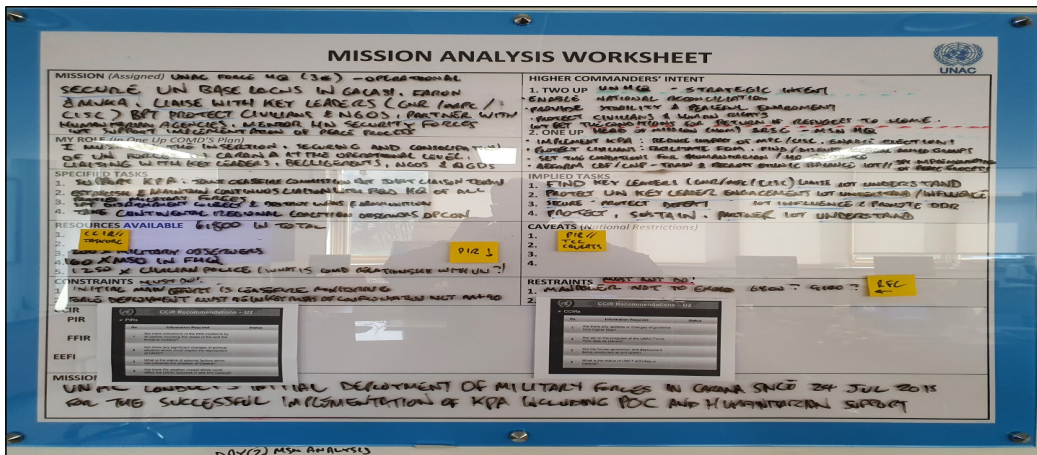
10)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명시된 'Draft Commander's Intent'를 직역하면 '지휘관 의도 초안 작성'이지만, 우리 군의 『합동기획』 교범을 참고하여 '지휘관 최초 계획지침 검토'라고 표현하였음.

시 환경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하라’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금지사항’은 상급 기관이 우리 부대에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must not do’ actions)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알려진 사실 결정 및 가정 발전’(Identify and analyse critical facts and assumptions)은 현재 수준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다. 알려진 사실은 계획수립을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 중 이미 진실으로 확인된 것이다. 가정은 계획수립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만, 아직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를 진실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계획수립을 진행하며 가정을 사실로 전환하기 위하여 즉,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군사계획수립절차 2단계의 최종 산물인 ‘임무 진술’(Draft the Mission Statement)을 하게 된다. 임무 진술은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y), 어디서(Where), 왜(Why)라는 5개 요소(5Ws)로 임무를 정확하고(precisely) 간결하게(concisely)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3〉과 같이 임무 진술을 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임무 분석이 군사계획수립절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임무 분석을 통해 임무 달성의 범위, 즉 상한과 하한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sup>11)</sup> 또한 임무 분석 결과를 통하여 지휘관, 참모, 예하 부대 지휘관 그리고 유관 기관 인원들은 임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노력의 통일에 필수적인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sup>12)</sup>



〈그림 3〉 군사계획수립절차 2단계 임무 분석에 활용한 워크시트

11) 기모토 히로아키, 『전술의 본질』, 보누스, 2020, p. 130

12) 합참, 합동기획, pp. 4-21~22

다. (3단계) 방책 수립

INSTEX 3일차 과제는 군사계획수립절차 3단계인 ‘방책 수립’(Course of Action Development)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sup>13)</sup>



<표 5> 방책 수립의 4단계<sup>14)</sup>

방책 수립의 시작은 나와 상대방의 중심(Centre of Gravity)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심은 나와 상대방의 힘, 의지 또는 행동의 자유의 원천이다. 이러한 중심을 확인하는 것은 계획수립 간 가장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다.<sup>15)</sup> 연구자는 INSTEX 를 수행하면서 나(own force)의 중심을 합법성(legitimacy)으로 확인하였는데, 우리 군의 『합동기획』 교범이 중심의 식별에 대하여 기술한 아래의 내용을 고찰해 본다면, 평화활동의 일반적인 중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을 식별할 때 비정규전과 재래전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비정규전에서는 작전의 중심을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과 합법성 확보에 둔다. 따라서 비정규전에서는 동일한 주민이 적과 아군의 중심이다. 그러나 재래전에서는 적 부대 격멸, 전쟁수행능력 파괴, 적의 정권 또는 정책 변화를 강요하기 위한 영토의 확보나 탈취 등 직접적인 군사력 대결에 작전의 중점을 둔다. 따라서 재래전에서는 피아의 중심 대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 출처 : 『(합동교범 5-0) 합동기획』, p. 3-58

13)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는 3-④ 단계에 해당하는 방책 수립을 다시 개괄적(broad) 방책 수립과 세부적(detailed) 방책 수립으로 구분하고 있다.

14)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15) 합참, 합동기획, p. 3-57

중심 확인의 다음 단계는 핵심능력 분석(Conduct critical capability analysis)이다. 핵심능력은 파괴되거나 무력화되었을 때 작전 능력의 심대한 훼손을 초래하는 요소이다. 핵심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심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상대방은 모두 중심이 중요한 만큼 중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므로 중심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능력을 식별하여 나의 핵심능력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핵심능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 결정적 지점(decisive points)과 작전선(lines of operation)을 발전시킨다. 결정적 지점은 요망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결정적 지점은 ‘○○지역 확보’와 같이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 민심 획득’과 같이 비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작전선은 결정적 지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작전선은 ‘육상 작전선’과 같이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인도주의적 활동 작전선’과 같이 비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결정적 지점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여 작전선을 발전시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중심 확인 및 핵심능력 분석과 연계해 보면 이는 결국, 상대방의 중심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때 핵심능력을 결정적 지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심을 확인하고, 핵심능력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적 지점들을 선정 및 연결하여 작전선을 발전시키는 것은 모두 방책 수립에 필요한 과정들이었다. 방책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정의된다.<sup>16)</sup> 이 정의를 기준으로 군사계획수립절차 2단계와 3단계를 연결해 보면 2단계에서는 임무를 도출하고, 3단계에서는 이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군사계획수립절차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방책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 방책의 시행을 통하여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적합성(Suitability), 가능성(Fea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구분성(Distinguish-ability) 그리고 완전성(Completeness)의 다섯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방책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16) 합참, 합동기획, p. 4-25

| 검증 기준                      | 내 용  |
|----------------------------|--|
| 적합성<br>Suitability         | 지휘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가능성<br>Feasibility         | 계획된 시간, 공간, 자산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수용성<br>Acceptability       | 예상되는 비용 및 위험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 구분성<br>Distinguish-ability | 다른 방책과 충분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
| 완전성<br>Completeness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요소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표 6〉 방책의 유효성 검증 기준<sup>17)</sup>

라. (4단계) 방책 분석 및 결정

INSTEX 4일차 과제는 군사계획수립절차 4단계인 ‘방책 분석 및 결정’(Course of Action Analysis and Decision)이다.

방책 분석의 목적은 각 방책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여 이를 비교한 다음, 가장 적합한 방책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각 방책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평가기준(criteria)을 사용한다. 여기에 표준적인 기준은 없다. 이때 지휘관이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참모 들은 주어진 상황,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휘관이 강조해 온 지침과 의도, 또는 작전구상 요소<sup>18)</sup>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추가할 수도 있다.<sup>19)</sup>

또한, 필요한 경우 각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방책을 비교할 수 있다.<sup>20)</sup> 상황 또는 지휘관 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 중에서 특

17)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와 「합동교범 5-0」 합동기획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작성

18) 작전구상을 할 때, 작전적 접근을 발전시키고 보완하기 위해 작전구상 요소라는 개념적 도구를 사용한다. 「합동기획」은 13개 작전구상 요소(종결조건, 군사적 최종상태, 작전목표, 효과, 중심, 직접접근 및 간접접근, 결정적 지점, 작전선 및 노력선, 작전범위, 작전한계점, 작전배열, 주요 부대 및 기능, 예측)를 제시하고 있다. 작전구상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합동기획」 제3장 제4절 ‘작전구상 요소’를 참조

19) 합참, 합동기획, p. 4-57

20) 합참, 합동기획, p. 4-59

정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가중치를 적용한다.<sup>21)</sup> 이와 같이 평가기준들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방책들을 비교할 때 <표 7>과 같은 방책 결정 매트릭스를 활용할 수 있다.

| 방책 1         |     |    | 방책 2 |    |     |              |
|--------------|-----|----|------|----|-----|--------------|
| 방책의<br>장점/단점 | 가중치 | 점수 | 평가기준 | 점수 | 가중치 | 방책의<br>장점/단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점  |    |     |              |
| 결론 및 건의 :    |     |    |      |    |     |              |

<표 7> 방책 결정 매트릭스<sup>22)</sup>

\* 출처: for Peacekeeping Operations)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방책 비교는 수학 방정식처럼 엄격한 절차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방책 비교의 핵심은 평가 기준을 따랐을 때 선정된 1개의 방책이 왜 다른 방책보다 우수한 것인지를 지휘관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sup>23)</sup>

마. (5단계) 작전명령 작성

군사계획수립절차 4단계에서 방책 분석을 통하여 방책을 결정하면, 5단계에서는 이 방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전명령’(Operation Order)을 작성한다. 작전명령은 예하 부대가 작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혼선과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양식을 사용한다.<sup>24)</sup> 이를 위하여 작전명령은 <표 8>과 같이 5가지의 기본항목으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21) 기모토 히로아키, 전술의 본질, p. 138

22)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 (Military Planning Process

23) 합참, 합동기획, p. 4-59

24) 『(아전교범 기준-1-1) 지휘통제』 (육군본부), p. 5-65 2018. 3.15.

| 구 분 |         | 수 록 내 용  |
|-----|---------|--|
| 1항  | 상 황     | · 예하부대가 계획된 작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상황을 요약<br>· 상급지휘관 의도, 피아 상황 등을 기술                              |
| 2항  | 임 무     | · 지휘관의 임무 진술을 기술   |
| 3항  | 실 시     | · 하급 지휘관이 전반적인 임무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관 의도를 기술<br>· 작전 단계별로 작전목표, 과업, 협조지시 등을 명시 |
| 4항  | 행정 및 준수 | · 인사, 준수, 공보 등을 기술   |
| 5항  | 지휘 및 통제 | · 지휘관계 및 통신지원계획을 기술  |

〈표 8〉 작전명령의 표준 양식<sup>25)</sup>

#### IV. 결 론

연구자는 INSTEX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UN 군용서버 / 참모장교 과정에서 INSTEX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INSTEX 수행 간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 연구자 본인이 INSTEX를 수행하면서 선행연구들이 강조한 사항들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25) 『(합동교범 5-0) 합동기획』, pp. 4-67~68

UN이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현재 그리고 향후 UN PKO에 요구되는 현역군인의 역량」(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sup>26)</sup>은 UN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유능한 참모 장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유능한 참모 장교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각 참모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은 물론, 참모 장교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공통역량으로서 군사계획수립절차 수행 능력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UN 평화활동에 관심이 있고, UN에서 참모 장교로서 역량을 발휘할 뜻이 있는 장교라면 군사계획수립절차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군 대학 등에서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수행할 때 ‘UN에서 성공적인 평화활동 수행을 위하여 어떻게 군사계획수립절차를 적용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와 실습에 참여한다면 UN이 요구하는 유능한 참모 장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또한, UN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계획수립절차」는 물론, 우리 합참의 『합동기획』과 육군의 『지휘통제』, 미군의 『Joint Planning』과 같은 교범들을 UN의 평화활동을 염두에 두고 숙독할 필요가 있다. 한편, UN 군 옵서버 / 참모장교 과정에 참가하는 인원 중 옵서버로 선발된 인원들도 군사계획수립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NSTEX에 참가해야 한다. 다수의 대한민국 옵서버들이 UN 임무단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참모 장교로 보직을 새로 부여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자는 본질적으로 군사계획수립절차가 개념적인 방법론에 해당하는 ‘과학적인 영역’과 지휘관·참모의 숙달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술(術)의 영역’이 혼재<sup>27)</sup>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연구를 마친다. 다시 말해 군사계획수립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려면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제 적용을 위한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26) <https://www.peacekeeping.un.org/en/current-and-emerging-uniformed-capability-requirements-united-nations-peacekeeping> (검색일 : 2022. 5. 5.)

27) 합참, 합동기획, pp. 3-7~8

## 참 고 문 헌

### 1. 국내 참고문헌

- 합참. 『합동기획』, 서울: 합참, 2018. 2.
- 육군본부. 『지휘통제』, 계룡: 육군본부, 2018. 3.
- 기모토 히로아키. 『전술의 본질』, 서울: 보누스, 2020. 12.
- 벵트 오케 폴케손. “UN 참모과정 INSTEX 도입 및 향후 발전방안”, 『PKO 저널』, 2015년 제11호.
- 정장수. “SWEDINT UNSOC 과정 교육참가 결과”, 『PKO 저널』, 2015년 제11호.
- 서해림. “국제평화활동센터 통합참모연습(INSTEX) 소개”, 『PKO 저널』, 2016년 제13호.

### 2. 국외 참고문헌

- Military Planning Service i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Military Planning Proces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November 2009.
- Joint Publication 5-0. “Joint Planning,” December 2009.

### 3. 인터넷 검색

- <https://www.collinsdictionary.com/ko/dictionary/english/process>  
(검색일 : 2022. 5. 5.)
- <https://www.peacekeeping.un.org/en/current-and-emerging-uniformed-capability-requirements-united-nations-peacekeeping>  
(검색일 : 2022. 5. 5.)

#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PKO 파병과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고

UN PKO mission on Woman's perspective and Consideration  
regarding Women's participation in UN Peace Operations

공군 소령 송성은  
Maj. Seong Eun Song





##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PKO 파병과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고

UN PKO mission on Woman's perspective and Consideration  
regarding Women's participation in UN Peace Operations

공군 소령 송성은

Maj. Seong Eun Song

### 서 론

“파병? 애는 어찌려고? 남편이 가도 된다고 해?”

이것은 내가 개인 파병에 선발되어 곧 레바논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이었다. 이런 질문들이 낯설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파병을 생각했을 때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물음표 중 하나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굳이 서두에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어찌면 이렇게 일상에서 사소하게 오가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필요한 변화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 및 질서유지’라는 거창하지만 가슴 뛰는 목적으로 국제기구 UN의 일원이 되어 일할 수 있는 기회인 해외파병. 군 생활 중에 새로운 것, 그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매력적인 파병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평소 봉사에 대한 뜻을 어렵듯 하게나마 늘 마음 한 켠에 갖고 있었으며, 군 생활 역시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으

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해왔다. 그런데 UN 평화유지활동으로의 해외파병이라는 것은 UN의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멋지게 탈바꿈하여 국제무대에서 그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한 군인으로서 또 다른 종류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애는 어쩐다? 남편은 뭐라고 할까?

2020년 5월, 나는 UN 레바논 임무단 의전장교를 선발하는 해외파병 지원 문서가 띄워져 있는 모니터 앞에서 파병을 향한 의지나 결심에 앞서 나에게 주어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숙제처럼 먼저 풀어내야 했었다. 비단 여성들만 파병을 지원하기 전 이런 물음표를 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물음에 대한 무게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다. 남편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파병 지원이 그저 웃으며 박수와 응원을 보내줄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해보겠다는 나의 결정에 대해 남편은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었고, 합격 여부를 떠나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멋진 일이라며 아이들 때문에 지원을 주저하기도 했던 나에게 오히려 포기하지 말라며 용기를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리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만약 선발되면 그때 더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며 나를 토닥여주었다. 그리고 이후, 운이 좋게도 해외파병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마침 시부모님 거주지 근처로 남편의 근무지가 발령이 나면서 시부모님께서도 고향으로 내려가실 계획을 잠시 접으시고 1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흔쾌히 도움을 주셨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니 말이 떨어지지 않아 쉽지는 않았는데, 고심 끝에 아이들을 불러 파병 소식을 차분하게 전하니 “엄마, 거기에서 엄마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영영 가는 거 아니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럼 괜찮아, 가서 일 잘하고 돌아와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큰딸의 예상 밖 반응을 보며 아이들이 때로는 더 어른스럽고 나보다 더 의젓하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파병지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주변 지인들도 내 파병 결심에 대해 서두의 두 질문을 하며, 내 대답을 듣고 나서는 남편과 애들이 대단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가올 1년에 대해 응원과 박수를 보내왔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해외파병은 나에게 일일이 지면으로 옮기기 어려울 만큼 인생에서 귀하고 값진 경험들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내가 분명 처음이라 서툰 지점도 있었겠으며 중간중간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내가 여기에서 구체

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으로서 겪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해외파병이다. 그래서 한 번쯤 ‘해외파병을 갔을 때 여군으로서 이런 입장도 있겠구나’라고 공감해주거나, 또는 파병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나의 상황이 모든 여군 동료 선후배들의 상황과는 같을 수 없기에 내가 여기서 모든 여군들의 상황이나 시각들이 이와 비슷하리라고 대변하기는 힘들다. 나의 경험담과 관점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고정관념을 가져오기보다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있어 또 하나의 유형으로만 참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본 론

### 1. PKO 참여 활성화에 대한 흐름

현재 군내에서 해외파병의 주를 이루는 UN 평화유지활동은 최근 軍警, 민간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인력 참여의 활성화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 agenda인 WPS(Women, Peace, Security)에 대한 대표적 결의안인 UN resolution 1325와도 연관이 되어있는데, 이 1325 결의안의 채택 배경은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그리고 분쟁 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 여성인력 참여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고 평화 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을 강조하려는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해당 결의안을 필두로 하여 2019년까지 10개의 후속 결의안이 나왔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약 98개국) 해당 결의안 실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을 차분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을 시작으로 현재는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에는 각 지역의 지역행동계획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참여의 중요성이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UN PKO 軍警 분야 여성 참여 비율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약 7.6%<sup>1)</sup>(7만 5천여 명 중 5,700여 명)이며,

1) Contribution of Uniformed Personnel to UN by Mission, Personnel Type, and Gender, 2021.12.31., [https://peacekeeping.un.org/en/gender\(2022. 5. 1.\)](https://peacekeeping.un.org/en/gender(2022. 5. 1.))

부대 파병의 경우 올해의 목표 수치인 9%를 넘기려면 아직도 전체적으로 1,000여 명의 여성 파병 인력이 요구되는데, 79개 부대 파병 지원국가 중 14 국가는 여성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 UN 사무총장의 ‘성평등 전략’ 목표에 따르면 각 병력 공여국들은 올해 UNMEM과 SO에 최소 19%의 여성인력을, 부대파견 병력에는 9%, IPO에는 23%, FPU에는 12%의 여성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최근 개최된 2021 서울 UN 장관회의에서도 사무총장은 각 국가들의 단순한 서약이 아닌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한 목표 달성이라는 실질적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는 레바논 임무단 근무 시 UN 사무총장이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의전과에 근무했었기에 방문 변동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했다.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일정을 보면서 UN의 수장인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지를 옆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변동사항들 중에서 눈에 띄게 빠지지 않고 세심하게 준비되었던 스케줄 중 하나가 여성 평화유지군들과의 간담회였다. 뻘뻘한 일정 속에서 사무총장은 여성 평화유지군과의 간담회 시간에 일정 부분을 크게 할애했고, 실제로 간담회간 한명 한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여성인력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자리에서 표명했다. 나뿐만이 아닌 자리한 모든 사람들이 UN에서 여성인력 참여 확대를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사무총장 방문 이후 현재 임무단은 UN 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제반 시설 확충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검증된 인력의 확보 및 충원만이 주요 해결과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2. 하지만, 여전히 불균형한 성비

UN의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여성’인력에 대해 목표화된 비율을 설정하여 필요로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파병으로 배치되는 지역들은 모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서 여성의 권리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여성들 혹은 소수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심지어는 강간과 성폭력 사례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 평화유지군들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구체적 역할들이 있는데, 상부에

서의 계획 수립시 취약계층인 현지 여성과 아이들의 상황을 그들의 입장에서 좀 더 공감하고 반영해 줄 사람이 필요하며, 주민과의 교류 및 현장에서의 역할 역시 여성으로서의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여성, 평화, 안보 전략 보고서 인용된 국가평화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평화협정에 참여할 때 2년 안에 협정 체결을 할 가능성이 20% 상승하며 이 경우 15년 이상 장기평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35% 이상 높아진다<sup>2)</sup>고 하니, 유엔에서 일정 수준의 여성인력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 필요성에 반해 참여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으며, UN 사무총장 역시 성평등은 성취하기가 무척 어려운 영역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UN PKO 전체 여성인력의 참여 비율은 7.6%인데, 내가 근무한 레바논 임무단의 전체 여군의 비율은 6%에 지나지 않았다. 사령부에 근무하는 참모장교로만 따지면 비율이 조금 높았는데 내가 도착했을 당시 46개국에서 온 200명 정도의 참모장교 중 약 20명 정도가 여군이었다. 10%가 남짓한 비율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부대파병 비율에 비하면 높은 수치였지만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군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환경이었다. 잘하는 것이 더욱 부각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못하는 것도 두 배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존재했고, 그런 부담감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있어왔기에 익숙했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사령부 안은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 소문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여군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과장되어 소문이 돌기 때문에 ‘너의 정신건강을 위해 헛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되 어쨌든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유념하라’는 동료의 조언이 내가 유니필에서 처음 들은 생활적 측면의 조언이었고 이러한 수적인 부족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파병이 처음인 나에게 심리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여군’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소수의 부적절한 시선들과 그들이 지어놓은 ‘여성’이라는 바운더리에 머무른 채 위축된 생활을 하진 않았다. 인간관계들에 적극성을 띠고

2) 김형은, 북한과 한반도 평화를 분석하는 여성 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 BBC코리아, 2020.1.8., [https://www.bbc.com/korean/news-50943076\(2022.5.1.\)](https://www.bbc.com/korean/news-50943076(2022.5.1.))

얼마나 긍정적으로 소화하는지에 따라 정보 교환 및 업무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고, 또한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 것처럼 나를 동료로서 인정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진정한 동료들이 훨씬 많이 있었기에 차근차근 내실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늘 그곳에서 아시아 계 군인 여성이라는 소수의 입장에서 그런 꼬리표들을 달지 않아도 되는 다수의 입장에 있는 남군 동료들이 내심 부러웠고, 향후 여성의 참여가 UN이 목표한 수준처럼 더 나아진다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민이나 부담감을 후배들은 느끼지 않아도 될거라는 생각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으로 그려보곤 했다.

### 3. 그리고, 일부 낮은 양성평등 의식

아무리 여성인력이 소수라 해도 전체 인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높다면 사실상 비율은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와 사회 진전의 척도를 나타내는 양성평등 수준은 비단 비율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님이 분명하며 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제기구의 대표역할을 하는 UN도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평화유지활동 파병 인원을 대상으로도 파병 전 교육 커리큘럼에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해외파병을 통해서 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일례로 대화간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는 똥똥하다, 못생겼다, 예쁜 사람은 일을 안해도 된다 등등 외모로 남들을, 특히 여성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같은 동료를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이 있다는 것에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히거나 눈살이 찌푸러진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도 대화 중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고 나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듣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사표시를 정중히 한 적도 있었다.

한번은 타국의 내셔널 하우스에 초대를 받아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어느새 마주하게 된 풍경은 해당 국가의 여성들만 남은 음식들을 치우고 부엌일을 하고 있었으며, 남군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듯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테라스로 자리를 이동해 물담배를 돌려가며 피우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모두 다 똑같은 동료들이었기에 그런 순간이 나에게서는 어색하고 불편했다.

또 한번은 친하게 지내는 여군 몇 명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동료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화할 때 존대와 하대의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 남성 부사관들이 가끔은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남성 장교에게는 존대를 표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나에게서는 하대를 표현하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쓴다, 기분이 나쁘지만 참 애매한 지점이라 지적하기가 뭐한데, 아무튼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여군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유럽이라고 하면 으레 모든 것이 우리나라 보다 선진적일 줄로만 알았는데 양성평등 의식 수준에서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다소 놀랐다.

물론 소수이지만 일부 인원들의 그런 의식 수준에 실망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문화적 다양성이나 인종 등에서 오는 소위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였기에, 나 역시 그들의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이미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야’라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다.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파병 생활을 잘 해 내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서의 생활적인 측면부터 업무적인 부분, 인간관계 등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선이었고, 양성평등적 측면에 대한 타인들의 주관 앞에서도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 이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 의견을 피력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나는 내가 여군이어서가 아닌 내가 하는 업무로 평가받고 싶었으며, 그렇기에 여타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업무로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나의 행동들과 업무로 인정받으며 일하고 더불어 인간관계에서도 다가오는 인연들에 대해 나부터 편견 없이 한 명 한 명 소중히 하며 관계를 쌓아나갔다. 이렇게 파병 생활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의 남녀비율과 양성평등 의식 수준은 개인의 업무효율과 더불어 조직 내 목표달성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인식의 변화는 일단 ‘다름’들이 서로 부딪혀봐야 하고 그렇게 부딪힐만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적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궁극적 변화의 핵심은 그렇게 ‘다름’에 대한 부딪힘 속에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라고 믿기 때문이다.

#### 4. 여성인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 전체적 지원을 향상

그렇기에, 나는 UN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성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자원들의 지원과 확보를 위해 좋은 방법들을 많이 시도

하고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해 특정 성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거나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한다면, 당장의 수치적 목표는 해결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오히려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성인력 참여 활성화 문제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하여, 여성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되, 특정 성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 아닌 전체를 위한 제도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참여 활성화의 과제 앞에 놓여진 장벽을 제거하려는 것이 조직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개선과제는 파병에 대한 낮은 접근성(인지도)과 지원율에 대한 해결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중요성이나 상부 차원에서 기울이는 조직적인 노력에 비해 남녀군인을 막론하고 실질적 지원을 및 인지도가 낮은 것이 내가 체감하는 개인 파병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타군의 상황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내가 공군으로서 느꼈던 것은 그렇다.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선 주변에 파병을 다녀온 공군 선배를, 특히나 여군 선배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군에서 근무하며 파병이라는 길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국방부 근무시절 해외파병을 실제로 다녀오신 타군 선배님의 권유로 감사히도 파병을 접하게 되면서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후 파병 준비를 하면서 공군은 파병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나 부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파병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관심 및 참여에 대한 독려를 위해 지원 적기에 있는 대위-소령이 많이 있는 각군 대학 혹은 각군 교육기관(특성화고, 외국어반, 사관학교 등)에 해외파병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마련한다거나 선발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접근성과 지원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 5. 여성인력 참여 활성화를 위해 - 6개월 단위 근무 직위 확대

두 번째는 육아 부담이다. 남군들에게조차도 파병이라는 것은 본인 병과 상의 주어진 커리어 패스에서 잠시 이탈하여 새로운 경력으로의 한 점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병을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것에 추가되어 생애 주기를 고려했을 때 결혼 및 양육의 단계에 있는 여군에게는 앞선 문제와 더불어 '가정과 육아'라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도맡아 해왔던

가사에 대한 부담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고, 설사 명목만 이어져 왔던 엄마 노릇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 어깨에 짊어진 큰 부분의 책임 중 하나인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에 따라 1년이라는 시간은 파병을 선택하는데 부담되는 기간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인에게 도움을 줄 만한 부분이 있다면 6개월 단위 파병 직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가 조금 더 활발해질거라 예상된다.

레바논 임무단의 경우 개인 파병의 경우 같은 임무단이어도 유럽 인원들은 대개 6개월 단위의 파병이 많았는데 이 인원들은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6개월 단위 파병은 어찌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당 직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개인의 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이 6개월 단위 파병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파병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동료 중에 딸을 다섯이나 양육하고 있는 프랑스 여군이 있었는데, 그 직책의 임기는 6개월이었고 여군들 중에서는(아이가 있을 경우) 대부분 1년보다는 6개월의 기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년과 1년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며 6개월짜리 근무기에 지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기도 했다. 우리도 향후 6개월 단위 파병 직책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면 선택과 경험의 폭도 넓어지고 부재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언급한 부분들은 비단 여군에게만 적용할 수 있거나 여군에게만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개인의 삶과 경력(일)간의 조화를 더욱 중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많다. 본인의 개인적 삶에 충실하면서 커리어적으로도 개인의 발전과 조직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질수록 군과 조직은 건강하고 좋은 자원들을 계속해서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생각들이 당장의 뽀족하고 가시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파병이라는 것이, 개인의 군생활에 있어서 그저 좋은 경험이나, 추억거리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이 이런 의견들에 대해 한 번쯤은 세심하게 고려하고 더 나은 제도로써 발전시켜 나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결 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거야?”

파병 복귀 이후 나는 고민 없이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오로지 업무와 업무 외 시간에는 나 자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파병 시간을 보낸 만큼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졌던 엄마의 부재를 만회하고 싶었다. 티안내며 씩씩하고 무탈하게 잘 살아온 아이들이었지만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며 엄마의 손길과 눈빛을 너무도 그리워했었다고 말해주는 눈물 자국들이 나로 하여금 고민 없이 휴직을 신청하게 했다. 복귀 후 바로 보직을 받아 일하는 것이 경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이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양육에 대한 무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나로서는 엄마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과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이며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도 생각했다.

무엇이 군대의 방식이기에 나를 깎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고 무엇이 다수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집단 속에서 생성된 문화이기에 나 자신의 특질 중 하나인 여성성을 그대로 가진 채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채, 남들과 똑같이, 튀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생도로서 아니, 여생도로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관학교 생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라는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과제 앞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에게로 양육의 무게를 털어내는 방법 등으로 남성 동료들과 계속 같은 생활적 배경을 만들며 커리어 패스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서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은 임관 후의 기간들을 거쳐 나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확신한다. 현시대와 조직은 적절한 ‘일체감’ 및 적절한 ‘다름’ 속의 균형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획일화된 인재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통한 여러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자 조직이 발전하는 길이며, 그러기에 조직은 소수의 집단과 그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내가 파병이라는 인생의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어깨에 있던 육아에 대한 무게를 나 대신 짊어져 준 가족들(아이들 본인 스스로를 포함해서)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가족의 지지와 지원만이 나에게 이 결과물을 선사한 것은 아니다. 파병에 문외한이던 내게 이런 길이 있으니 한번 지원해보라며 새로운 길을 소개해주신 선배님, 선발 이후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전임자 선배님들과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신 PKO

센터 교수님들, 함께 파병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늘 무언의 의지와 힘이 되어준 파병 동료분들, 바쁘신 와중에 늘 임무단 사령부를 찾아와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셨던 무관님, 그렇게 수 많은 인연들 속에 때에 맞는 도움의 손길들이 나의 파병 지원부터 지금까지를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직 군이라는 집단 내 소수인 여성인력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한 명의 결심과 노력만이 아닌 가정과 조직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장려하는 것이 여성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남성의 직위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함께 상생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함이며, 이것은 누가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조직이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양질의 좋은 자원들을 계속해서 군에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한다.



# 군수지원 임무수행 향상 방안

- 보급장교 임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pability Improvement of logistics support

- A case study on Unifl supply officer -

대위 이예별

CPT. YeByul Lee





# 군수지원 임무수행 향상 방안

– 보급장교 임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apability Improvement of logistics support

– A case study on Unifl supply officer –

대위 이예별<sup>1)</sup>

CPT. YeByul Lee

## I. 서 론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란 의미의 ‘동명부대’는 07년도에 최초 파병되어 현재 1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작전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감시 정찰과 주민 친화화를 위한 민군작전을 수행하면서 UN평화유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인은 21년 2월 21일부터 22년 1월 17일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베이루트 폭발, 레바논 금융붕괴에 따른 경제난 등의 악조건속에서 ‘임무완수’와 ‘무사귀환’의 파병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처음 파병을 가는 이들은 파병준비 간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에 ‘군수지원으로 전승보장’이란 말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을 다지기 위해 임무수행하는 파병부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1군지사 31보급대대 중대장 (접수일 2022년 5월 6일)

## II. 준비과정

파병선발된 인원들이 워리어플랫폼을 입어보고 UN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서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보급장교들은 패션쇼의 스태프처럼 선발된 순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당해연도 해외파병부대 군수지원계획을 참고하여 파병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품목들을 인지하고 누락없이 보급하기 위해 선소집 전에 선발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이즈 및 혈액형 등 필요한 자료를 종합한다. 선소집 후 8주간의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부대파병 간 현지에서 구하기 제한되는 품목들을 전진으로부터 종합받아 육분에 예산을 요청하고 구매하고 해상·항공에 가지고 가야 한다. 개인이 지급받는 품목 중 군에서 보급받을 수 있는 슬리퍼 등 9종은 청구 후 2주 이내로 수령 및 불출이 가능하지만 워리어플랫폼 전투복 등 23종의 경우는 파병부대를 대상으로만 보급해주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계약된 업체에서 납품 기일까지 해당 품목을 납품받아 검수 후 보급해줘야 한다. 캐리어 등 기성품들은 납품에 크게 제한사항이 없지만 컴뱃셔츠, 디지털티 등은 규격에 맞는 원단을 구해서 사이즈별 생산공정을 거쳐야 하는 품목들이기에 업체에 한 달정도 생산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선소선 소집 후 일주일 이내에 계약업체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면 디자인과 색상을 선정하고 그 후 선소집 인원들이 대표로 사이즈가 있는 품목들의 옷을 입어보고 본인들에게 맞는 사이즈를 조사한다. 본대소집 전에 모든 사이즈 데이터 작업이 끝나고 업체에 치수를 보내야 출국 3주 전에 받을 수 있으므로 본대는 입어보지 못하고 선소집 인원에게 물어보고 유사하게 사이즈를 적어낸다. 각 업체마다 제시하는 기준 사이즈가 달라 선발대가 입어보고 본대에 간부들에게 본인 신체데이터와 유사하게 알려주더라도 각자 신체적으로 특성이 다라 교체소요가 발생하며, 특히 중앙선발의 계속 꾸준한 체력단련으로 체중감량이 되어 많게는 2사이즈가 커져서 교체소요가 15% 이상으로 변동주기가 많았다. 납기일과 해상물자를 보내는 날이 연계되어있어 다시 옷을 만들어서 납품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업체에서는 내년에도 계약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재고가 남으면 손해가 발생 민원소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신체에 맞게 옷을 입고 싶은 의견과 상충되어 사전에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출국 전까지 납품하지 못하면 임무수행에 지장은 물론, 항공택배를 보내더라도 레바논 현지사정이 좋지 않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체와의 연락, 추적관리를 해야 했다. 실제 검은티의 프린팅이 벗겨

저 물건 하자로 새로 교체 받기까지 2달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전투복 납품 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동명 25진은 1세대 출국 날에 전투복 일부를 납품받았다. 다행히 23진에서 반납했던 전투복 중고를 먼저 대여받아 출국 3주 전 마지막 외박을 나간 가족과 인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적시, 적소, 적량의 보급 지원을 하며 우리가 기존에 받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물자들을 지급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파병부대 보급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선호도가 높거나 고가의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저가의 상품을 받는 것이다. 이는 자칫 군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계약 시 일정금액이 넘으면 경쟁계약을 해야 하고 국가시책에 의거 중소기업판로 정책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계약선발 간 우선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밖에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다. 국가계약 간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국가입장에서라도 입증된 업체를 받기를 선호하므로 해당업체는 다음 계약 시 가점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같되 우수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은 특수계약조건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제 사람들이 보급품을 받고 짐을 싸며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출국·귀국 시 개인당 가져갈 수 있는 무게가 제한되어있기에 보급장교는 파병부대 군수지원계획을 토대로 지원하는 품목과 현금배정품목을 공유해서 중복을 막아야 한다. 파병부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때문에 전에 썼던 속옷류, 세면도구들이 개인 기호를 반영하여 현금배정이 되는 추세이므로 최신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사에서 자체 충성마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 진에서 인계받는 충성마트 잔여수량과 해상물자로 가져가는 수량을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챙겨가야 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외부물품구입이 구하기 수월하므로 부피가 큰 것들은 제외하고 개인물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확인해야 한다. 전임자에게 받을 수 있는 물건, 귀국 시 대부분 가지고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배정된 생활관에 구비된 목록을 확인하면 유용하다. 레바논은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물에 석회질이 함유되어있다. 구매하는 생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부합하여 안심하고 먹어도 되지만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수기 필터를 가져가면 유용하다.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물품은 에어프라이어, 정수기 필터, 후크자석, 샤워필터, 라면이었다. 또한 레바논의 티슈의 질은 비

숫하나 화장지는 한국과 다르게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청구해서 확보해야 한다.

### Ⅲ. 파병지 임무수행

레바논의 현지상황은 내각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파별 갈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했으며 블루라인 일대 무력충돌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사한 로켓에 대한 이스라엘 포격 대응사건 등으로 대피호로 수차례 대피하는 일을 겪었다. 또한 국가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플레이션과 1달러당 1,500LL였던 고정환율은 15,000LL에서 32,000LL까지 화폐가치가 폭락하여 국민의 82%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처음 레바논의 땅을 밟았던 4월에는 일교차가 심했지만 비교적 덥지 않은 날씨였다. 무더운 여름에도 습하지 않아 불쾌지수는 높지 않았지만 햇빛은 긴팔을 뚫고 구릿빛 피부로 만든다. 우기일 때는 국지성호우로 동명부대가 주둔한 지역은 비가 쏟아지는데 20킬로 시돈지역은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보여 한국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를 레바논도 피해갈 순 없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봉쇄령 등 강력하게 주민통제 했으나 초반에 예방접종 미흡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일일 평균 4천여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부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접촉자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방역지침 준수 하 보급지원을 실시했다.

동명부대의 숙소는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 특성상 방음이 약해 초반에 층간 소음으로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빗소리와 바람소리로 잠을 설치는 일이 많으니 귀가 밝은 사람들은 이어플러그가 필수이다. 방에는 냉난방기와 책상, 침대, 매트리스, 책상, 의자, 신발장, 옷장이 구비되어있으며 각 방에 전임자가 유용하게 쓰라고 두고 간 물건들이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냉난방기는 계절적 특성 상 매일 가동해야 하는 소요로 고장이 적고 A/S를 받을 수 있는 한국브랜드 제품으로 특수계약조건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베이루트 폭발, 경제악화로 한국브랜드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중동에 납품되는 것을 병행수입해서 업체가 가져온다. 간혹 모조품 제품들이 많으니 사전에 계약하는 업체와 검사를 해야 하며 검수할 때 꼭 확인해야 한다.

파병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먹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출타가 제한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 중 먹는 것에 비중이 커진다. 당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사태에 대해 물결을 타 레바논의 부실급식을 막기 위해 조리팀들은 주어진 UN부식과 구매부식을 토대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 고군분투했다. 한국처럼 반가공 식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정적인 재료로 조리법을 달리해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찝통같은 조리실에서 묵묵히 임무수행해 준 조리팀에게 감사를 표한다. 매월 급식개선위원회의를 진행하여 부대원들의 선호도 설문은 통해 선호 메뉴는 추가편성하고 비선호 메뉴는 과감하게 줄여 식재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메뉴를 편성하였다. 영양요소를 맞추기 위해 국내의 영양사들에게 협조해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였다. 초반에는 망고, 빵식을 선호하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떡볶이, 김치찌개 등 한식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선호도 및 계절을 고려한 메뉴편성, 조리경연대회를 통해 우수작 메뉴편성 등을 강구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조리병 여건보장을 위해 상시 빵식과 계란후라이를 만들어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를 운영하였으며, 배달음식데이, 브런치데이, 미트데이를 편성하여 피로도 경감을 위해 휴식여건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레바논은 망고, 아보카도 등 열대과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절반 이상이 이슬람교로 돼지고기, 술을 먹지 않아 돼지고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양고기와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해서 급식의 만족도를 높였지만 2번의 원인미상의 복통환자들이 발생하여 홍역을 치렀다. 보존식을 운영하였지만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복통의 원인을 알 수 없었으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개인위생 강화, 자율조리로 운영했던 계란후라이는 삶은 달걀로 대체되었으며, 구매·UN부식 검수 강화, 오이냉국과 같은 메뉴는 전부 고온에 조리되는 메뉴로 변경하는 등 비전투력 손실을 위해서 귀국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지 않았다.

UN에서 지원해주는 부식은 레바논뿐만 아니라 전 국가에서 온다. 유통기한이 짧은 소채류들은 레바논 현지에서 오지만 그 외 식품들은 대부분 타국에서 오기 때문에 각 식료품들이 베이루트항까지 오는 시간과 UN직원이 검수하고 GCC라는 하청업체에서 각 부대로 운송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해서 부식신청은 2달 전에 실시하며 UNIFIL 급식처부인 SO5, SO-FOOD에서 각 부대별 소요를 종합하여 조치한다. 일주일 단위로 청구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2달 뒤의 날씨와 다양한 변수를 예측해서 청구를 넣어야 하므로 유통기한이 긴 품목들의 비중을 높이고 소채류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들은 현지업체와 계약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받아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파병을 다녀온 사람들과 3년 이상 동명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고용인, CGG업체에서 부식을 수송을 오는 매니저에게 물어 정보를 얻고 가격비교를 하여 구매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름부족으로 발전기 가동이 제한되어 통신이 먹통이 될 때가 많아 연락이 수월하지 않았다. 연락이 수월하지 않았지만 이리저리 통신이 터지는 곳을 찾으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배달음식데이에는 한국에서 먹어본 세계적인 브랜드이면서 30분 내에 배달이 가능한 KFC, 맥도날드, 파파이스와 같은 대중적인 음식을 추진했다. 달러의 강세로 망고, 납작복숭아, 무화과, 사과, 바나나, 멜론, 수박, 체리 등 다양한 계절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21년 11월 9일부 2년 동안 중단되었던 마켓웍스 작전이 실시되었다. 당직근무를 서면 상황일지에 종종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해 적혀있어서 UN군에 대해 모두가 우호적인지 않고 다른 나라군은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총기피탈 당하는 상황을 접했을 때 현지인들이 평화유지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기적인 민군작전의 일환인 태권도사업과 학교시설 보수 등과 연계한 마을의 아이들이 먼저 손을 흔들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6.25 전쟁 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군을 보고 느꼈던 심정을 지금 우리가 기여국으로서 느끼고 있었다. 마켓웍스 작전을 하며 한국 농산물식품규격을 기준으로 업체구매품과 UN부식품의 평가했을 때 한국부대를 무시해서 이런 상품의 질이 낮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인가 의아했는데 마을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과일, 소채류들은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고 레바논의 상황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었다.

베이루트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금 부족으로 폐쇄 위험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으로 해상물자 선사와의 날짜가 점점 밀려 출항이 밀리는 상황속에서 구매부식으로 현상황을 개선해보고자 했으나 었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부족으로 사태가 발생했다. 기름부족은 이동수단의 제한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는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통신의 제한을 가져오고 가게에서도 냉동식품이나 냉장고 가동이 안돼 식료품들의 위생에 문제가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기다린 끝에 온 21-2차 해상물자가 해상물자가 운송업체의 잘못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연결하지 않아 1동 전체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대대는 레바논처럼 빵식, 파스타가 주식이라 현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영양을 고려한 한식은 레바논에서 식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UN부식과 구매부식만으로 한식의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는 햄과 김치는 필수비상식품이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햄을 현지에서 구하기 제한되며 김치는 한빛부대처럼 한인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곳

이 없고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 귀국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구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품목 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 시 필요품이다.

다음 진 부대원들에게 UN 블루아이템을 받고 파병에 대한 기대감을 선서하기 위해 보급장교들은 늦지 않게 청구넣어야 했다. UN직원들은 업무처리가 느리고 실무자가 휴가를 가게되면 일이 더더욱 느리게 진행된다. 한국처럼 국방군수통합 정보체계에서처럼 청구 넣은 현황과 불출시기가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넣고 2주만에 물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국에 택배를 보내는 시간 포함해서 늦어도 다음 진 선발결과가 나기전에 청구해야 블루베레모를 쓰고 환송식을 할 수 있다.

보급장교들은 병참병과로 잘먹이고, 잘입히고, 잘재우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다. 이 임무가 완수되고 나서도 파병부대는 한가지 더 관심가져야 한다. 탈레반이 한국군 구형전투복을 입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었다. 전역자들이 구형 전투복을 버리거나 중고로 내놔 보따리상 등을 통해 해외 반출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사전에 모체부대는 재산을 넘겨서 지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발부대는 사전에 전파하고 해단식 후 현장에서 반납받아 한국군의 위리어플랫폼이 유출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나는 보급장교로 임무수행하며 납품지연, 제품하자, 코로나에 따른 해상물자 지연, 기름부족, 해운업체에 의한 냉동식품 폐기, 원인미상의 환자발생 등 다양한 우발상황으로 겪었다. 이에 대안을 제시를 통해 향후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1. 보급품 개선

기성품이 아닌 제작피복의 경우 육군의 기준 사이즈를 제시하여 기준을 통일화 시키며 특수계약조건에 국내생산을 추가조항으로 넣어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상품이 납품되도록 해야 한다. 검은티의 프린팅이 다 떨어져서 국가대표의 위상이 실추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업체에게 하자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이후 중국에서

다시 생산하고 베이루트 공항까지 도착하는데 2달정도 소요되었으며 베이루트 공항에 도착한 물건을 우리가 직접 수령해서 가져오는 등 업무의 소요가 많았다. 해당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35달러에 UNIFIL티셔츠를 구매해서 입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신뢰가 가는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약해야 한다. 군대 WA 마트에서 판매하는 검정 ROKA티 역시 MADE IN KOREA로 파병부대 계약가격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기에 향후 고품질의 신뢰성있는 상품을 받는데 제한사항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낙찰되는 업체의 체육복 디자인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아 귀국 시 무게 제한의 이유로 가지고 오지 않는 인원이 대다수이다. 현재 육군에서는 이 등병부터 참모총장까지 동일한 체육복을 입겠다는 슬로건하에 학교기간에서부터 추진중에 있다. 학교기관처럼 육군전체 동일한 체육복으로 보급하되 파병부대 특성에 맞게 프린팅을 하여 보급하면 기존 자신의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교체소요를 최소화한으로 할 수 있고 납기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으로 계절을 고려한 고품질의 하계 긴팔, 긴바지 등 추가 구매하여 만족도를 높이면 여건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급식의 한국식품업체의 외주화

저출산에 따라 매년 용사들이 급감하고 있는 시기에 급식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조리병들의 여건보장을 위해 밀키트, 레트로트 식품, 완제품의 비중이 늘어났다. 동명부대에 선발되는 조리병들은 2020년 6월부터 군복무가 18개월로 줄어들어 따라 신병교육대에서 5주 교육을 받고 자대에 간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선발한다. 단체급식에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달하는데 시일이 오래걸리고 야전에서처럼 조리병 임무가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 아닌 한 개의 진에서 함께 오고 다 같이 복귀하기 때문에 급식의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급양관 혼자서 숙달되지 않은 조리병 인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한국에서처럼 반가공식품이 들어오는게 아니다보니 전처리하는데 시간소요가 크고 6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숙달이 된 후에는 곧 임무가 끝나는 시점이다보니 매년 동일한 악순환의 연속이다. 영양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다른 부식상황, 메뉴의 편성의 한계, 조리지도까지 급양관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처럼 HACCP제도가 있어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 전문성을 갖춘 영양사가 편성한 메뉴를 토대로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보장해야 한다.

## V. 결 론

현재 육군은 워리어플랫폼, 드론봇전투체계, 아미타이저 4.0를 추진하며 UN방향에 부합한 PKO정책개발과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역량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평화에 적극 기여하고, 국위선양 및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헌신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원활한 지원으로 안정적이면서 완벽하게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현지상황분석을 토대로 가용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자국의 원활한 지원속에 민간작전, 평화유지, 친화활동 등 해외파병활동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된다고 생각한다.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대한민국이 받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PKO저널』

투고 및 원고작성 양식



## 『PKO저널』 투고 및 원고작성 양식

###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논문 투고자는 표절 방지 서약서 및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4.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II 원고작성 양식

#### 1. 분량 및 본문

- 가. 원고는 A4 용지 기준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한다.
- 나. 원고는 제목, 저자명, 소속, 국문 초록, 국문 핵심어(5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 영문 초록, 영문 핵심어(5개 이내)로 작성하며, 국문 및 영문 초록은 A4용지 1페이지 내외로 한다.
- 다. 본문 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 라. 본문에 사용하는 기호체계(장, 절, 항 등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순서로 한다.
- 마. 본문에 표와 그림을 기재할 시 “〈 〉”를 사용하여 표기하며, 하단에 출처를 제시한다.

예) 〈표 1〉 한국의 참여 PKO 임무단, 〈그림 1〉 피해복구 지원 사업  
출처 : 국방대학교 PKO센터(2019)

## 2. 인용문 표기

- 가.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원문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 나. 인용문은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다. 본문에서 분리하여 문단을 구성할 시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작게하고 좌우로 들여쓰기 한다.
- 라. 전자자료 인용 시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시하고, 가급적 URL 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 3.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 가. 각주 표기

- 1) 저서 인용 시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하며, 논문 인용 시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 2) 저서의 경우 동양서는 겹낫표(『』)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동양서의 경우 낫표(「」), 서양서의 경우 큰따옴표로 표기한다.

예)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호수, 연도, 인용면수.

필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저자명, 영어책명(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필자명, “영어논문명”, 출판지명 :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필자명, “영어논문명”, 영어책명(이탤릭체), 출판지 :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 3) 편서나 번역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편자명(편), 『저서명』 또는 「논문명」,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저자명, 역자명(역), 영어책명(이탤릭체) 또는 “영어논문명”,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

- 4)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가)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 시

예) 위의 책(논문), 인용면수. (동양서 경우)

ibid, 인용면수. (서양서 경우)

나)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 필자명, 앞의 책(논문), 인용면수. (동양서 경우)

필자명, op.cit., 인용면수. (서양서 경우)

5) 인터넷 자료 표시는 작성자(있을 경우), 자료명, 웹사이트 명, 작성일, 웹사이트 주소(검색일)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한국군의 파병 역사”, 연합뉴스, 2020.8.15.,

<http://www.example.co.kr>(2021.1.13. 검색).

나. 참고문헌 표기

- 1) 참고문헌 표기는 각주 표기의 형식을 따르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PKO 저널 원고 양식

**PKO 저널 원고 작성 양식**(한글 HY헤드라인M 18pt)

**PKO 저널 원고 작성 양식**(영문 HY중고딕 16pt)

**투고자**(한글 HY헤드라인M 16pt)<sup>2)</sup>

**투고자**(영문 HY중고딕 16pt)

**ABSTRACT**(영문 HY중고딕 16pt)

**ABSTRACT 내용**(바탕 13p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pt,  
영문 HY중고딕 13pt)

※ Abstract를 제외하고 한글 작성

---

1) 논문접수일 : (바탕 9pt, 줄간격 130%)

2) 이 논문은.....

3)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4)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1. 문단 제목(한글 HY헤드라인M 16pt)

가. 본문 내용(바탕 13pt, 줄간격 160%, 들여쓰기 10pt)

전문용어 사용 시, 인용 시 각주를 사용하여 충분한 설명

나. 표 제목 및 그림(사진) 표기 요령

(표 1) 제3차 CHOD 회의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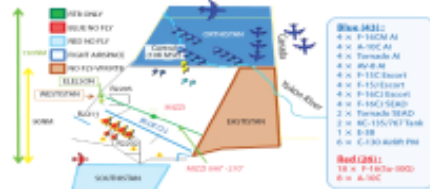
| 일정       | 주요 내용                                   |
|----------|---|
| 10.18(월) | ·분회개편, 임차회담, 의정행사, 환영회개편                |
| 10.19(화) | ·환영사, 장관 기조연설, 본회의, 오전회의, 일차·다자회담       |
| 10.20(수) | ·안보현장 견학(DMZ, 천안함)<br>·일차·다자회담, 장관 각료연찬 |
| 10.21(목) | ·조·오찬회의, 본회의, 일차·다자회담, 환영연찬             |
| 10.22(금) | ·조·오찬회의, 본회의, 일차회담, 시후간담, 환영기요제연, 폐회대행연 |
| 10.23(토) | ·형산입대 견학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유엔 CHOD 회의와 같이 4박 5일간의 공식인정과 방산업체 전의와 같은 1박 2일의 비공식일정을 계획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처럼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일정이 장단 연사가 최위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 군사외교의 재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강 회의를 통해 구상하고 기뢰탄두제거의 필요성을 외교공관·국방부관부 대량의 외국에 유무(그림 1)를 통해 각국의 회의에 대한 기대감

〈표 1〉 표 제목(중고딕 13pt, 표 내용 중고딕 12pt)



〈그림 1〉 주한 국방부장 및 대사관직원 초청 설명회



〈그림 2〉 휴전선 상황도

〈그림 1〉 그림 제목(중고딕 13pt)

## 2. 각주 출처 표기 방법 예시

가. 동양서 각주 표기 예시(바탕 9pt, 줄간격 130%)

김○○, 『한국 전쟁...』, 한길사, 2003, p. 115. (저서)

박○○, 「세계와 미국 ...」,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p. 115.(논문)

양○○, 「광고에 대한...」, 『한국 광고 연구지』, 한길사, 2010, p. 258.(혼용)

나. 서양서 각주 표기 예시(중고딕 9pt, 줄간격 130%)

H. Selye, "A Syndrome Produced by Diverse Nocuous Agents," *Nature* Vol. 138 (Nov. 1936), p. 32(논문)

W. Kandinsky, *Concerning the Spiritual in Art* (New York: Wittenborn Art Books, 1947), pp. 57~58.(단행본)

다. 동일 문헌 다시 언급 예시

1) 바로 앞의 주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 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 158.(바탕 9pt, 줄간격 130%)

Ibid, pp. 57~58.(중고딕 9pt, 줄간격 130%)

2)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 예시

김○○, 합동교리연구, p. 115.(바탕 9pt, 줄간격 130%)

Kandinsky, op.cit., pp. 47~48.(중고딕 9pt, 줄간격 130%)

※ 예시 외의 표기 형식은 원고작성양식을 따른다.

## 표절 방지 서약서

소 속 :

성 명 :

원고제목 :

본인은 상기 PKO저널 기고문 작성에 있어 타인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무단사용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원고가 추후 표절로 밝혀질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